

## IV. 종 교

1. 일제의 종교정책
2. 천도교 · 대종교
3. 불 교
4. 유 교
5. 개신교
6. 천주교

## IV. 종 교

### 1. 일제의 종교정책

#### 1) 일제 종교정책의 기초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일본 자국에서 실시하던 종교통제정책의 연장이었으며, 그것의 더 가혹한 적용이었다. 일제는 서양 제국에게 자국이 문명국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하여 겉으로는 근대적인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성격상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神道와 ‘天皇信仰’을 축으로 한 祭政一致를 추구하였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배타적인 國家神道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민중을 교화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종교와 교육을 국민 교화의 수단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를 철저히 국가가 통제·이용하는 전근대적인 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메이지정부가 전국에 걸쳐서 추진한 최초의 종교정책은 ‘神佛分離政策’이었다. 그 내용은 ‘神’과 ‘佛’을 같은 장소에 모시고 섬기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사실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神佛이 혼합되어 신도가 불교에 눌러 있었으므로 이를 분리시켜 신도를 장려하고 불교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신도국교화정책은 1868년부터 187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1871년에는 전국의 모든 神社를 국가의 종사로 하고 계층적 寺格制道를 마련하여 신사의 공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일본 황실의 조상신을 제사하는 이세징구(伊勢神宮)를 신사의 本宗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도 없지 않았지만, 이에 호응하여 수많은 불상들이 목이 잘리고, 사원의 경제적 기반이 삭감 위축되었으며, 불교의 信徒 조직인 檀家制度가 신사를 중심으로 한 氏子制度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신도 국교화정책이 국내외의 비판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1882년 神社神道を 국가의 제사로서 일반 종교로부터 분리시키다는 이른바 제사와 종교의 분리 조치를 취하였다. 즉 일본 정부는 “신사신도는 국가의 제사이며,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신사신도의 초종교적 절대우위를 확립하고, 그것을 교파신도·불교·기독교 등 일반 종교위에 군림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사신도의 국가신도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타 종교를 지배 통제함과 동시에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론에 의한 국내외의 비판을 봉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1)</sup> 이어서 그들은 1889년 2월 발표한 <대일본제국헌법>과 이듬해 10월에 반포한 <교육에 관한 칙어>에서 천황의 절대적 권위와 국민의 복종과 충성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신도의 교의를 법제적으로도 완성하였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제국헌법> 제28조에서 “일본 臣民은 안녕 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信敎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제한적 범위에서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1891년 1월에 일어난 이른바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불경사건’은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국가적인 방침과 어긋날 때 어떠한 국가적·사회적 박해를 당하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 도쿄의 제일고등중학교 교원이었던 우치무라가 천황이 하사한 ‘교육칙어 봉독식’에서 칙어에 대해 최경례를 해야 할 때 잠시 망설였다는 이유로 불경한 사람으로 몰려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교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부인까지 잃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1899년 8월 <문부성 훈령> 12호라는 것을 발령하여 ‘교육과 종교의 분리’라는 미명으로 학교 교육에서 종교교육이나 종교의식을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정작 일본 정부는 학생들에게 ‘천황의 사진’이나 <교육칙어>에 최경례를 하게 하고, 신사에서 거행되는 각종 애국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가 하면, 수신·지리·국사(일본사)·국어(일본어) 교과서에 神道와 천황에 대한 신화와 종교적 내용을 넣어 편성하여, 국가신도의 교의 내지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주입하였던 것이다. 즉 신사신도는 사실상 일본의 국교였으며, 종교교

1) 東京辯護士會 編, 《靖國神社法案の問題点》(東京: 新教出版社, 1976), 23쪽.

육을 국가가 독점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여 이미 1890년대 말부터 여러 종교단체를 더욱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바 ‘종교법’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즉 1898년 제14회 제국의회에 〈宗教法案〉을 상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종교법안의 성격은 “국가가 종교를 감독하여 사회질서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또한 臣民의 의무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그 직무에 속한다”라고 하는 당시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제안 설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sup>2)</sup> 이 〈종교법안〉은 결국 종교계의 반대운동으로 제정이 저지되었으나, 이후에도 수차 의회에 제출되어 논란이 계속되었다.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에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얼마간 완화되었던 사상통제 정책은 1917년 러시아혁명 후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1919년 한국의 3·1독립운동, 그리고 1923년 關東大震災 사건을 거치면서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23년 11월에 발표된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와 1925년 4월에 공포된 〈치안유지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다시 국민교화와 사상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20년대 후반기에 사상통제를 위한 종교법안 제정 논의가 다시 일어나자, 당시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던 한국교회도 필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여 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제15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26)는 韓錫振 목사를 위원장으로 咸台永·金永壽·朴容義 목사를 택하여 종교법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책을 강구케 하였다.<sup>3)</sup>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선총독부에 종교법안 제정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이듬해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김영구를 일본에 파견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하고 연합공의회 명의로 일본 貴·衆 양원에 “우리 조선교회에서도 종교법안을 반대함”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발송하였다.<sup>4)</sup> 이 종교법안이 다시 1927년 제52회 제국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2) 澤正彦, 《日本基督教史》(대한기독교서회, 1979), 138쪽.

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5회 회록》(1926), 22쪽.

4)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6회 회록》(1927), 28쪽.

일본정부는 이를 다시 형식적으로 수정하여 1929년 제56회 제국의회에 〈종교단체법안〉이란 이름으로 제안하였으나,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의 종교 간섭은 시대착오”라는 반론에 부딪혀 그 제정이 저지되었다.<sup>5)</sup> 한국교회는 이때에도 함태영 목사를 위원장으로 종교단체법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이를 심의한 결과 “前 법안과 상위가 없으므로 이 법안 반대운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全弼淳 목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반대의견서를 일본 문부대신·귀족원에 제출케 하는 등 활발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sup>6)</sup>

1930년대에 들어서도 일본 정부의 종교단체법안 제정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특히 전시체제하에서 일본 정부의 종교 통제 의도가 강화되어 〈종교단체법안요강〉, 〈종교단체법초안〉 등을 마련하여 종교제도조사회에 형식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점차 그 포위망을 좁혀가다가 마침내 1939년 제74회 일본제국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종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해서 종교단체들은 통폐합되어 교단을 구성하고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아 활동하게 되었다. 이 법은 종교단체와 그 교화활동에 대하여 정부의 감독을 엄중히 하고 皇道精神·神國思想 등 신도적 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기독교를 비롯한 제 종교는 가혹한 탄압을 받았고, 그 존립을 위해서는 제도와 교리마저 변질을 강요당하였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신도 이외의 종교를 탄압만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 종교를 회유하고 이용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었다. 1912년 2월 내무차관 도코나미 타케지로(床次竹二郎)의 주선으로 내무대신 하라 타카시(原敬)는 신도·불교·기독교의 세 종교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국민도덕 진흥에 대해서 종교계의 협력을 요청하는 회합을 가졌다. 이것은 ‘三敎會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합에서 그들은 “一. 우리 각각은 그 교의를 발휘하여 皇運을扶翼하여 더욱 더 국민도덕의 진흥을 도모할 것을 기한다. 一. 우리는 당국자가 종교를 존중해서 정치·종교 및 교육과의 관계를 융화하여 국운신장에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것은 정교유착이라고 할만큼 정

5) 澤正彦, 앞의 책, 138쪽.

6)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8회 회록》(1929), 47쪽.

치 권력에 의해서 종교가 이용당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일본 정부에 의한 종교계의 이용과 통제는 1940년대 <종교단체법> 제정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 9월에는 일본의 전종교계를 망라하여 그들의 이른바 大東亞共榮圈 건설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大日本戰時宗教報國會를 결성하고, 당시 문부대신 니노미야 하루시게(二宮治重) 중장이 직접 그 회장을 맡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종교 교화 활동’을 완전히 군부의 통제하에 두고, 종교단체를 직접 통제·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국가신도 내지 神社神道を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교파신도와 불교·기독교를 국가의 공인종교로 삼고 국가 시책에 충실히 따르도록 통제·이용하면서, 그 외의 종교는 유사종교단체라 하여 불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통제·탄압하였다. 그리고 공인종교라 하더라도 그들의 통치 방침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배될 때는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신사신도를 국교로 한 여타 종교의 통제·이용 정책이 그들의 종교정책의 기초였으며,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에서 제정에 실패한 제반 종교 관련 법안들까지 일찍부터 총독의 직권으로 제정하여 더욱 가혹한 형태로 그것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 2) 무단통치기의 종교 억압·통제정책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종교문제였다. 당시 한국에는 유교·불교·천도교·대종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 일제가 장악은 물론 파악조차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등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 자칫 종교를 무단으로 억압·통제할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통감부 시기부터 서구 선교사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을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도록 회유하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내세워 종교인들이 될 수 있는 한 민족운동이나 국권회복운동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헌병경찰들을 동원하여 종교계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자행하였다. ‘한일합병’이 공표된 당일에 발표한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의 〈諭告〉에 종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은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의 종교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信敎의 自由는 文明 列國이 均認호니 各人이 其崇拜호니 敎旨을 倚호야 安心立命之地를 求호니 固難其所나 宗派의 異同으로써 漫히 試其紛爭호며 又藉名信敎호야 叩議政事호며 若企異圖호니 卽 荼毒 良俗호야 妨害安寧호者로 認호야 當히 按法處斷치 아니치못호리라. 然이나 儒佛諸敎與 基督教을 不問호고 其本旨은 畢竟 人心世態를 改善호에 在호故로 固히 施政之目的과 不爲背馳而已 뿐아니라 道로써 可히 此를 裨補호者로 不疑호니 以是로 各種宗 敎를 待호에 毫無挾於親疎之念을 勿論호고 其布敎傳道에 對호야 適當호 保護便宜를 與호미 不吝호이라. 本官이 今奉 聖旨而 莅此地호니 一히 治下生民의 安寧과 幸福을 增進코자 欲호外에 他念이 無호이라. 此茲에 諄諄히 其適從호바를 諭示호 所以라(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8월 29일, 31쪽, 〈諭告〉).

여기서 그는 신앙의 자유는 문명국이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정사를 논하거나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풍속을 해치고 안녕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유교·불교·기독교는 총독부의 ‘시정목적’과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이 되리라 의심치 않으므로 평등하게 포교·전도에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 본토에서와는 달리 공인종교인 神道 대신에 유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과 종교를 ‘안심입명’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극히 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들의 ‘치안유지’나 ‘시정목적’에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의도와 위협을 문맥 속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종교 억압·통제 의도는 이듬해의 시정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宗教取締에 관해서는 明治 39년(1906년) 〈통감부령〉 제45호로 내지인의 종교선포 수속절차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도 없어서 그로 인해 포교소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조직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天道敎·侍天敎·大宗教·大同

敎・太極敎・圓宗宗務院・孔子敎・大宗教・敬天敎・大成宗教 등의 여러 宗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가 불가피하다(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1, 77쪽).

그리하여 우선 그들의 통제가 가능했던 불교와 유교부터 〈사찰령〉과 〈경학원규칙〉을 제정하여 총독부가 직접 통제·장악을 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寺內總督暗殺未遂事件’이라는 ‘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함으로써 그 활동을 위축시켰던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는 이들 공인종교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포교규칙〉의 제정을 1911년 초부터 검토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朝鮮에서 現在하는 宗教中에는 專히 人心을 善導함에 努力하는者ㅣ有하나 其中에는 宗教의 名色으로써 人心을 攪亂하거나 不法의 金錢을 貪하는 者ㅣ잇으므로 當局에서 이에 對하여 當히 注意하더니 今回에 朝鮮에서 宗教를 宣布하는 者에게 對하여는 耶穌敎, 佛敎及 朝鮮在來의 各種宗教를 不問하고 整理取締에 關한 規則을 發布할터이라더라(《매일신보》, 1911년 1월 7일, 〈宗教宣布規則〉).

이 〈포교규칙〉은 1915년 8월에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발포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총독부는 이 규칙에서 “본령에서 종교라 함은 신도·불도 및 기독교를 이룸”이라 하여 이른바 공인종교를 일본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파신도와 불교·기독교에 한정하고, 이들 종교선포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포교에 관해서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교용도로 쓰기 위한 교회당·설교소·강의소를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때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령을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 유사 단체’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하여,<sup>7)</sup> 이 법령으로 사실상 조선총독은 모든 종교단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종교관련 법규들을 통하여 정작 일본에서는 그 제정이 좌절되었던

7)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8월 16일, 154~155쪽.



〈종교법〉을 조선총독이 입법·사법·행정 및 군사권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제정·실시하였던 것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이러한 종교관련 법규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총독부 관공리들, 특히 헌병경찰들을 통해서 신자 개개인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간섭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은 1912년 3월에 공포한 〈경찰범 처벌규칙〉이었다. 그 규칙 가운데 “단체 가입을 강청하는 자”,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도화·시가의 게시·반포·낭독 또는 방음을 하는 자”, “함부로 길흉화복을 말하고 또는 기도·符呪 등을 하고 혹은 守札類를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병자에 대하여 禁厭·기도·符呪 또는 정신요법 등을 실시하고 또는 神符·神水 등을 주어 치료를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sup> 이 규칙은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일제가 지배하게 된 한국사회는 많이 쇠퇴하기는 하였지만,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였고, 봉건적 윤리도덕으로서 유교는 일제에게도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상통한 면이 있어 이용가치가 높은 것이었지만, 의병전쟁과 순국투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일제의 식민지화에 저항하던 세력도 유림들이었으므로 총독부 설치 초기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와는 달리 유교를 표면적으로는 공인종교의 하나로 인정하는 듯하면서 회유와 통제에 착수하였다. 병합직후 유력한 양반 유생들에 대하여 ‘尙齒恩金’을 지급하고, 조선 귀족에게 작위를 수여하며, 이른바 ‘합방은사금’을 지급한 것은 유림에 대한 회유 매수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11년 6월 종래의 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규정〉을 발표하여 “경학원은 조선총독에게 속하여 경학을 강구하며, 문묘를 제사하며, 풍교덕화를 裨補한다”고 한 것은 유교계를 조선총독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지방의 향교에 대해서도 병합전에 이미 〈향교재산관리규정〉(1910년 4월)을 발표하여 그 재산을 지방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입도 관공립학교의

8)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25일, 213쪽.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1911년 10월 <지방문묘직원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여 향교에 직원을 두고, 부윤·군수의 지휘를 받아 문묘를 수직하고 업무를 맡되, 그들의 임면은 부윤·군수 등의 신청에 의해 도장관이 시행하도록 하여 그 직원을 친일적인 인물로 세워 총독부가 통제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유교기관을 장악하게 된 총독부는 그들의 회유에 넘어간 유생들을 이용하여 경학원과 향교를 한국인의 ‘충량화’와 ‘동화’를 위한 사회교화기관으로 삼고자 하였다. 1912년 3월 경학원 대제학의 추천을 받아 경성과 13도에 강사를 임명하고 명륜당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갖게 하는 한편, 지방에도 경학원 직원이나, 각도에서 선발된 강사들이 도내를 순회하며 강연하도록 하였다. 1913년에 발표한 <경학원 강사 순강에 관한 건>이나, 1915년 10월에 발표한 <경학원 강연 시행에 관한 요항>은 모두 이러한 腐儒들의 회유 이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15년부터는 이른바 <교육에 관한 칙어>를 경학원에 두고 강연회를 시작할 때 이를 봉독하게 하였다.<sup>9)</sup> 1918년 2월에는 <서당규칙>과 <서당규칙 발표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사설 서당까지도 지방관이 이를 단속·통제하여 부족한 관공립학교와 ‘교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종교통제에 성공한 것은 불교계였다. 조선조의 승유억불정책에 따라 억압을 받아오다가, 1895년 일본 승려 사노 켄레이(佐野前勵)의 건의로 <도성출입금지령>이 해제되고, 일본불교의 각 교파들도 일찍부터 한국에 나와 한국불교계를 일본불교계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제의 병탄 직후인 1910년 9월 李晦光 같은 친일 승려는 일본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의 사주를 받아 조선의 圓宗을 일본의 曹洞宗에 연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韓龍雲을 비롯한 臨濟 범통의 승려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총독부는 이렇게 분열된 조선불교계를 통합·정비·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11년 6월 3일 제령 제7호로 <사찰령>과<sup>10)</sup> 7월 8일 부령 제84호로 <사찰령 시행규칙>을 발령하여,<sup>11)</sup> 조선총

9)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 7,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91~95쪽.

10)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6월 3일.

독이 직접 조선불교계를 통제·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300여 개의 사찰을 30개의 本山과 本末寺 관계를 맺게 하고 본산의 주지 임명은 총독이 직접 이를 승인하며, 그 밖의 사찰의 주지들도 지방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찰의 병합·폐지는 물론 일체 재산의 처분과 寺法의 제정까지도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로써 총독부는 조선불교계의 전통적인 자율성을 말살하고 강력한 통제와 전제적 지배권을 확립하여<sup>12)</sup> 그들의 식민지 교화기구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였다.<sup>13)</sup> 이 규칙은 1911년 10월에 제정한 것을 개악한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수 용어도 일본어로 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을 교사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 교육이 그들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식민지 교육과 배치되므로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와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가 <사립학교규칙> 개정의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개정의 2대 요점’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와 교원 자격의 강화임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는 식민지 교육을 총독부가 독점하고, 교원도 일본어에 능하고 그들의 식민지 교육 실시에 적합한 인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 규칙 개정의 주요한 목적이 기독교계 교육의 탄압과 선교사의 교사 자격 박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4)</sup>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일반 종교계에 대해서는 억압·통제정책을 실시한 반면에 신사신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령정비를 통하여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제는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를 획득하거나 조차·위임통치 등에 의하여 시정권을 얻으면 그 지역에 예외없

11)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7월 8일.

12) 李鴻範, 〈韓國で行なわれた日本の植民地宗教政策〉(《新羅佛教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681~683쪽.

13)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3월 24일, 325쪽.

14) 《朝鮮彙報》, 1915년 4월호, 22~27쪽.

이 官幣大社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일본 거류민들이 세운 신사를 그 밑에 두고 현지인의 토속신앙을 교화한다고 하는 이른바 ‘종교적 지배체제의 정비’를 꾀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도 내무국 지방과가 중심이 되어 관립신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1912년부터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신사는 경성의 남산 중턱에 20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건립하기로 하고, 祭神은 일본 내무대신에게 조회하여 ‘天照大神’과 ‘明治天皇’으로 하였으며, 1918년 12월 일본 내각 총리대신에게 〈조선신사 창립에 관한 청의〉를 하여 일본 각의의 결의를 거쳐 1919년 7월 18일자 〈내각고시〉 제12호로 조선신사 창립을 확정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 공사에 들어가 1925년에 완공하였다. 이들의 이 신사의 건립의도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조선총독이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다음과 같은 〈조선신사 창립에 관한 청의〉에 잘 드러나 있다.

아직 조선 全土의 민중 일반이 존송해야 할 神社가 없어 민심의 귀일을 도모하고 충군애국의 念을 깊게 할 점에 있어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차제에 國風移植의 大本으로서 內鮮人이 함께 존송할 神祇를 勸請하여 반도 주민으로 하여금 영구히 報本返始의 誠을 바치도록 하는 것은 조선 통치상 가장 긴요한 일이라 생각된다(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7, 9쪽; 京城府, 《京城府史》下, 1936, 636~637쪽).

일제가 메이지(明治)유신 초기에 강력히 실시하였던 ‘신도국교화정책’을 그들의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하여 일반 민중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신사신앙을 강요하고, 일본 풍속을 이식하여 ‘동화’시키는 것이 조선통치상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조선신사를 건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관공립 신사는 물론 민간 신사에 대해서도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신사사원규칙〉을 제정·발포하여, 모든 신사의 창립과 존폐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의 신사들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사에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sup>15)</sup> 이어서 1917년 3월 22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神祠에 관한 건〉을 발포하여 神社로 공인받

15)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8월 16일.

지 못한 소규모 집단의 小社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관리를 규정하여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다.<sup>16)</sup>

### 3) 문화정치기의 종교 회유·분열정책

3·1운동에서 한국인들의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힌 일제는 무단통치만으로는 지속적인 식민지배가 어렵다고 보고, 1919년 8월 총독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로 교체하여 정책의 변화를 꾀하였다. 사이토 총독은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시정개선을 약속하고 저항세력에 대한 회유와 분열정책으로써 이른바 분할통치라고 하는 보다 지능적인 식민지배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는 우선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여 학무국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그 동안 내무부 제1과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던 〈神社 및 寺院에 관한 사항〉과 〈宗教 및 享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전담하게 하였다.<sup>17)</sup> 그리고 3·1운동의 탄압으로 악화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선교사들을 회유하였다.<sup>18)</sup> 그리하여 그 동안 선교사들의 불평을 샀던,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 교수와 종교행사를 할 수 없게 규정한 1915년 〈개정사립학교 규칙〉을 폐지하고, 다시 개정하여 종교교육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sup>19)</sup> 이어서 1920년 4월 〈포교규칙〉을 개정하여 교회당·포교소 등을 설치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포교규칙〉 제12조에 “조선총독은 현재 종교에서 사용하는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 등에서 안녕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이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sup>20)</sup> 새로운 규정을 두어 총독이 직접 종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독부는 〈사찰령〉을 통하여 거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했던 불교계에 대해

16) 《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3월 22일.

17)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8월 20일, 號外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18)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17~114쪽.

19)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21호〉.

20)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4월 7일, 〈조선총독부령 제59호〉.

서도 일부 작성한 젊은 승려들의 <사찰령> 폐지 요구를 묵살하고, 다른 종교계와 마찬가지로 회유·분열정책을 썼다. 승려 2,300여 명이 날인한 <사찰령> 폐지 진정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찬부를 둘러싼 30본산의 분열을 이용하여, 총독부는 <사찰령>을 더욱 철저히 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22년 12월 친일적인 성향을 띤 교무원을 재단법인으로 인가해 줌으로써 불교계의 중앙집권화를 통한 통제를 꾀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중앙집권화, 친일화 의도는 1920년에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문서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① <사찰령>을 고쳐 경성에 전국 30본산을 통할하는 총본산을 세우고 중앙집권화를 꾀한다.
- ② 총본산의 관장에는 친일주의자를 세운다.
- ③ 불교진흥축진단체를 만들어 총본산의 옹호기관 노릇을 하게 한다.
- ④ 진흥축진단체 본부를 경성에 두고 회장을居士 중 친일주의자 가운데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채운다.
- ⑤ 이 단체의 사업을 일반 인민의 교화, 죄인의 감화, 자선사업 기타로 한다.
- ⑥ 총본산·각 본산·불교단체에 상담역으로 인격있는 내지인(일본인)을 둔다.  
(《齋藤實文書》제9권, 고려서림, 1990, 영인본, 143~151쪽; 김순석,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13, 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79쪽).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정책에 따른 교무원이 얼마나 총독부와 유착되어 있었든가는 1923년 30본산 주지회의를 총독부 학무국에서 열고, 총독부 정무총감과 학무국장의 훈시를 듣게 되어 있어 불교계 청년들의 비판을 받았던 데서도 확인된다.<sup>21)</sup> 총독부는 1929년 6월에도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사찰이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주지가 임의로 재산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였다.<sup>22)</sup>

총독부는 3·1운동 이후 유교계에도 대동사문회·유도진흥회 등 친일단체

21) 《동아일보》, 1923년 1월 18일, <총독부에 주지회의>.

김광식, 《한국근대 불교사연구》(민족사, 1996), 227쪽.

22)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1935), 588쪽.

를 만들어 친일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단체에 가입한 유생들을 중추원 참의로 임명하였다. 특히 1920년 1월에 조직된 유도진흥회는 설립 당초부터 총독부 내무국이 깊이 개입하여, 이를 이용해 상해임시정부의 내부분열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회는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각도에 지부가 결성되고 도지사, 군수 등 지방관들과 유착하여 향교조직을 통해 총독부의 정책에 협력하게 하였다. 이 단체는 설립목적을 “유도를 진흥해서 퇴폐된 유풍을 되살리고, 동양도덕의 진원을 발휘해서 민심의 안정을 꾀하고 국가 진보의 기운에 바친다”고 하여 노골적으로 총독부 통치정책에 협력을 표방하였으며, 실천사항으로 봉건적·복고주의적 예교의 부활·장려를 강조하였다.<sup>23)</sup> 그러나 이러한 노골적인 친일 표방은 오히려 의식있는 유생들의 반감을 사 총독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둘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총독부는 1920년 6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종래 향교의 재산수입을 관공립보통학교 경비에 충당하던 것을 중단하고 문묘 享祀비용과 지방교회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의 사용에 관해서는 지방관들이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지방관들은 이러한 향교의 재산을 유생들의 회유와 친일유림단체를 조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다. 더욱이 1923년 4월에는 〈지방문묘직원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향교직원의 임면에 유림이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관청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철저히 친일 분자들로 이들을 임명하였다.<sup>24)</sup> 그리하여 이를 통해 유생들을 회유하고, 이른바 교회사업이라 하여 연설회·강연회·백일장 등에 향교의 재산을 낭비하였다. 더욱이 1929년 6월에는 〈서당규칙〉을 개정하여 서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즉 서당의 명칭, 아동 정수, 교수용 도서 등을 종래에는 부윤·군수에게 신고만하면 되던 것을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서당에서 일본어·조선어·산술을 가르칠 때는 총독부에서 편찬한 도서를 사용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서당의 지도·감독에 대한 훈령을 내려 서당의 인가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도덕에 관한 사항을 교수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sup>25)</sup>

23) 강동진, 앞의 책, 226~229쪽.

24) 이명화, 앞의 글, 107~109쪽.

1920년 9월 《동아일보》가 일본 신도의 3종 신기 숭배를 미신적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가 총독부로부터 무기정간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신도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문화정치기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총독부는 1925년 조선신궁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 기회를 통해서 신사참배와 신사신앙의 확산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정책은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1924년 5월 兼二浦神社 낙성식에 일반인들로부터 봉축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거두고, 그 지역 학생들을 참배시킨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맘에 없는 기부, 뜻에 없는 참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총독부 학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神宮大廳及曆頒布에 關한件〉이라는 통첩을 보내 이의 보급을 장려한 것이라든지, 같은 시기에 발생한 강경보통학교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에 대한 학무국장의 통첩을 보아도 신사신도를 초종교적인 위치에 두고 이에 대한 숭경과 참배를 장려하려는 그들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5년 10월 조선신궁의 진좌제를 앞두고 이를 공공기관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학무국장이 그해 ‘생도 아동의 신사참배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어 학생들의 동원과 참배를 유도하던 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의 불참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이에 총독부는 이를 강요하면 조선인의 반감만 더 사게 될 것이며, “신사를 통해 사상선도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내부 의견도 있어 적극적인 신사정책을 일시 후퇴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적극적인 강경책을 쓰고, 정책적인 지원을 원하던 신직들의 불평을 사기도 했다.<sup>26)</sup>

#### 4) 침략전쟁기의 종교 이용 · 탄압정책(1931~1945)

1920년대 말에 시작된 세계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개된 대륙침략

25) 朝鮮總督府, 앞의 책, 586~587쪽.

26) 김승태, 〈일본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신사문제’〉(《한국사론》 16, 서울대 국사학과, 1987) 참조.



정책으로 1931년 9월 만주침략을 도발하면서 그들의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 ‘精神敎化運動’과 종교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기독교계 학교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조선총독부는 다시 적극적인 신사정책과 종교 통제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의 후임으로 1931년 6월 17일 제6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는 일본에서 1924년부터 5년 동안이나 5개 내각의 육군대신을 역임한 신흥군벌로서 ‘昭和軍閥의 시조’라고 불리던 인물이었다.<sup>27)</sup> 그는 부임에 앞서 일본 천황을 찾은 자리에서 “조선통치에 관해서는 대체로 전임자의 방침을 계승해 갈 예정”이지만, “내지인과 조선인의 융합일치 이른바 내선융화가 더욱 큰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고 “조선인에게 적당히 빵을 주도록 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sup>28)</sup> 그의 이른바 ‘내선융화’란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평등한 가운데서의 조화가 아니라 조선인을 보다 더 일본인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동화 내지 일본화정책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그의 정책발상은 1932년부터는 ‘정신교화운동’의 강화로, 1935년 이후에는 ‘심전개발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정신교화운동’ 내지 ‘사회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해 2월 사회과를 내무국에서 학무국으로 이관하고, 학무국 종교과 업무를 흡수하여 담당하게 하였다.<sup>29)</sup> 그리고 그 해에 추가예산으로 ‘社會敎化費’를 편성하고 그 해 9월부터 그 계획 수행에 착수하여 각 도지사에게 통첩을 보내 긴급히 조사하게 하여, 1933년 2월 이른바 紀元節에 “全道에 걸쳐서 우량부락·지방개량단체·청년단체의 산업시설 및 체육시설, 부인단체의 사업 등에 대하여 장려 조장”의 의미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하였다.<sup>30)</sup> 그리고 우가키 총독은 1932년 11월 10일 이래 이른바 ‘국민정신 작흥에 관한 조서 봉독식’을 전국에 걸쳐 거행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교화시설’들을 갖추게 하여 ‘정신교화운동’ 내지 ‘사회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sup>31)</sup>

27) 宮田節子,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일조각, 1997), 190쪽.

28) 宮田節子, 위의 책, 204쪽.

29) 《朝鮮總督府官報》, 1932년 2월 13일,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

30) 《朝鮮》(1933년 3월호), 153~154쪽.

31) 朝鮮總督府, 앞의 책, 891~894쪽.

우가키 총독은 1935년 1월 10일 部局長會議에서 “①精神作興, 自力更生 기타 전년이래 착수한 일은 신년과 함께 크게 박차를 가하여 추진을 도모할 것, ②겸하여 회구하고 있는 心田開拓에는 금년에는 다시 몇 걸음을 진전시키고 싶다”는 등의 훈시를 하였다.<sup>32)</sup> 이로 보아 그는 이른바 ‘心田開發’을 정 신흥화운동의 일환으로 그 전해부터 추진하였으며, 193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참여관 및 각 방면의 말을 들어보 아도 결국은 神(神道)·儒(유교)·佛(불교)·耶(기독교)를 신앙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感知된다. 敬神崇祖의 高潮, 神社의 建設, 그것의 參拜獎勵, 승려의 소질 개선, 불교의 가두 진출, 사찰재산의 정리, 儒道의 부흥, 명륜학원 및 문묘의 활동 등을 당장 착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억압받아왔 던 불교를 정치적으로 살려가는 것이 크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다.”<sup>33)</sup>

그리고 결국 이것은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시대에 들어서는 ‘황민화운동’으로 이어진다. “조선인에게 적당히 빵”을 주는 정책은 일제의 노골적인 수탈로 인한 조선인의 반발을 잠재우고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 조선을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농촌진흥운동’ ‘농공병진정책’으로 나타났다. 우가키 총독의 통치 목표는 “어떠한 사태에 직면해도 절대적으로 ‘모국 일본’을 배반하지 않는 ‘식민지 조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sup>34)</sup>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른바 ‘정 신흥화’ 내지는 이데올로기 교육의 확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상시국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계·종교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강제로 실시하였다.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는 조선군사령관(1929)과 육군대신(1931), 관동군사령관 겸 만주국 특명전권대사(1934)를 역임했던 인물로 한국인에 대한 정신적 테러라고 할 수 있는 ‘동화정책’의 극단적인 형태인 ‘황민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의 조선통치의 2대

32) 《宇垣一成日記》2(東京: みすず書房, 1970), 990쪽, 1935년 1월 16일 일기.

33) 위의 책, 997쪽, 1935년 1월 30일 일기.

34) 御手洗辰雄 編, 《南次郎》(生活の友社, 1957), 212쪽.

목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천황을 내방하도록 하는 것과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다.<sup>35)</sup> 그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조선인을 모두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는 물론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바로 이 미나미 총독 재임시기에 극단적인 종교탄압과 통제가 이루어져, 기독교계 학교들은 대부분 폐교되고, 외국 선교사들은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거나 추방되었다. 총독부는 이러한 ‘신사참배 강요’ 및 일반 종교계에 대한 탄압과 함께 신사의 설립과 신사신앙을 적극 장려하였다. 1933년 총독부 내무국장은 〈神祠 창립에 관한 건〉과 〈神祠 부동산 등기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각도에 보내 신사의 성립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같은 해 9월 〈토지수용령〉 제2조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제2항을 “神社, 神祠 또는 관공서의 건설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여 ‘神社・神祠’를 지을 때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35년 4월 우카기 총독은 각 도지사 와 관・공・사립 학교장들에게 훈령을 보내 “지금 내외의 정세를 생각건대 刻下の 急務는 日本精神을 作興하고 국민적 교양의 완성을 기하여… 존엄한 國體의 本義를 明徵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의 쇄신과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니 힘써 그 임무를 달성하라고 지시하였다.<sup>36)</sup> 이어 5월에는 정무총감도 각 도지사에게 〈學校에서 敬神崇祖의 念 涵養 施設에 關한 件〉이라는 통첩을 하여 학교교육에서 ‘敬神崇祖’라는 神道 내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위한 가미다나(神棚)의 설치를 독려하였다.<sup>37)</sup>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도 총독부 학무국장이 각 도의 도지사에게 〈學敎職員의 敬神思想 徹底에 關한 件〉이라는 통첩을 내려보내 학교직원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각지에 神社・神祠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신사를 중심으로 한 행사나 참배자수도 해마다 급증하였다.<sup>38)</sup>

35) 김승태, 〈제7대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조선총독 10인》, 가람기획, 1996), 183~191쪽.

御手洗辰雄 編, 위의 책, 참조.

36) 《朝鮮總督府官報》, 1935년 4월 16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4호〉.

37) 朝鮮神職會 編, 《朝鮮神社法令輯覽》(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37), 353~355쪽.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신사숭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36년 8월 1일 천황의 칙령으로 조선신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神社・神祠가 社格에 따라 道・府・邑・面으로부터 神饌幣帛料供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신사에 대해서는 사격을 높여 더욱 신사의 관공립적 성격을 강화하였으며, ‘1면 1신사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각지에 신사의 건립을 장려하였던 것이다.<sup>39)</sup> 뿐만 아니라 파출소・주재소 등 관공서나 학교에 神宮大廳을 넣어두는 簡易신사라고 할 수 있는 가미다나를 설치하게 하더니, 마침내 관할 행정기구들을 통하여 일반 민가에까지 신궁대마를 강매하고, 가미다나를 설치하여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하여 종교계를 더욱 철저히 통제하여 전쟁 협력에 이용하고, 이에 거슬리는 종교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탄압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는 그 때까지 법령이나 종교계 지도층의 회유를 통한 간접 통제의 방식을 버리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개개 종교단체나 개인들에게까지 직접적인 강압과 통제・탄압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의 일본 제국의회 보고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 당국의 지도로 조선 각 종교단체 및 유사종교단체들은 시국의 중대함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신도와 일반 민중을 열심히 지도하고 거국 일치로 후방에 봉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보국의 성의를 보였다. 따라서 황군의 무운장구와 전승기원, 사상자 위령제, 혹은 국방헌금으로 출전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문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8, 51쪽).

교과신도는 불교・기독교와 함께 공인종교이기는 하였지만, 총독부의 적극적인 옹호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미약하여 천리교 이외에 그다지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제강점 초기부터 조선총독이 장악하였던 불교

38)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다산글방, 1994), 132~139쪽.

39) 《每日申報》, 1936년 8월 2일, 〈조선신사제도 개정에 취하야〉.

岩下傳四郎 編, 《大陸神社大觀》(1941), 102~154쪽.

계는 “사격에 따라 열심히 후방 수호에 전념”하고 “경성에 있는 불교중앙교무원의 통제 아래 활동을 계속해서 일본인측 불교 각파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일제당국은 “조선에 있는 불교의 각 宗 연합회에서는 사변 직후 경성부에 있는 18개 사찰의 대표자가 협의회를 갖고 총독의 훈시에 따른 일치 협력과 후방 원호를 결의하였다. 이후 조선불교중앙교무원과 협력하여 전사자 慰靈追弔法會와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각 사찰에 위문비 건립 헌납을 독려하는 등 시국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동시에 각 종파에서도 각각 본산의 유달 훈시를 받들어 사격에 따라 총후의 적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만족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중일전쟁 후 사상통제와 종교단체의 이용·통제는 유교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경학원을 비롯해서 각지의 향교·문묘에서 매월 1일과 15일에 유림들을 모이게 하여 서원문을 낭독하고, 일본 황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며, 각종 시국 강연회, 좌담회를 개최하게 하고, ‘국방 헌금’, ‘군대 위문’에 관한 시가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유교계에 대하여 총독부는 “유도는 오로지 당국의 지도에 의해서 경학원과 대동사문화가 중심이 되어 전조선의 유림들에게 분기를 촉구”하여 “유림계도 점차 시국의 중대성을 깨닫고 당국의 지도에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총독부는 1939년 가을에 조선유도연합회를 조직하게 하여 ‘국민총력동원운동’의 한 조직으로 활동하게 하고 지방에도 유도연합회와 유도회를 조직하게 하여 ‘황도유학’을 부르짖고, 일제의 전시체제에 협력하도록 독려하였다.

1930년대에 총독부가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탄압한 종교계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기독교계였다. 1930년대 이전의 일제와 선교사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20세기 초 한국을 식민지화하던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립해 가던 과정에서는 일본이 서구 제국과 협력관계에 있었고,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이들을 후대하여 회유·이용코자하였기 때문이다.<sup>40)</sup>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영·미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외부의 지지 없이도 식민지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선교사는 오히려

40) 강동진, 앞의 책, 71~111쪽.

려 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차츰 선교사들을 적대시하여 한국교회와 분리시키려는 분열정책과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교회에 대한 선교사의 영향력을 배제시킴으로써 그들의 통제를 강화시키고, 이미 그들의 통제에 순응하는 일본기독교에 예속시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참배문제는 결정적인 탄압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1930년대 선교사 경영의 기독교계 학교에서 신사참배 거부가 문제화되자, 일제는 이를 선교사들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몰아 ‘頑迷한 외인 선교사’라 비난하면서 반선교사 여론을 부추겼다.<sup>41)</sup> 한편, 1920년대 이후 선교사들의 교권적 횡포에 염증을 내어 일어난 이른바 ‘조선적 기독교’의 수립을 표방하던 한국교회내의 자생적인 반선교사운동까지 부추기면서, 한국 교회와 선교사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 각 노회·총회에 압력을 가하여 선교사들의 활동을 배제시켰다.

이러한 일제의 방해·분열 공작은 선교사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져와 교육활동과 선교활동이 부진하게 되었고 겨우 의료활동에서만 그 명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활동마저 1940년부터 탄압을 받아 대부분의 기독교병원이 문을 닫았다.<sup>42)</sup> 뿐만 아니라 미·일 관계의 악화로 점차 모든 외국인들을 敵性 적국국민으로 취급하여 감시·탄압하였고, 일부 선교사들은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결국 1940년 10월 일본의 미국에 대한 戰意가 표면화되자,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철수하였다.<sup>43)</sup> 이후까지 남아있던 몇몇 선교사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에 억류되어 갖은 탄압을 당하다가 1942년 포로 취급을 받아 일본인과 교환되었다.<sup>44)</sup>

이와 같이 기독교계에서 선교사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킨 일제는 기독교계에 대한 예속과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의 통치에 이용코자 하였다. 그리

41) 《京城日報》, 1938년 9월 14일, 〈頑迷한 外人宣教師團側이 神學校의 廢敎聲明〉.  
《朝鮮新聞》, 1938년 9월 15일, 〈頑迷 外人宣教師 神社參拜에 抗議〉.

42) G. T. Brown, *Mission to Korea*, p.161.

43) H. A. Rhodes & A.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2, p.18.

44) H. A. Rhodes & A. Campbell, 위의 책, p.24.

하여 그들에게 굴복한 친일적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소위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이라 하여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고 ‘종교보국’이라 하여 전쟁 협력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신사참배문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1938년 2월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一. 당국의 지도 실시 때에 그것을 즐기지 않는 頑迷한 교도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행정집행령, 경찰법 처벌규칙 기타)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조치할 것, 一. 국체에 적합한 야소교의 신건설운동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 목적이 순진하고 장래 성과가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때 적극적으로 원조하여 줄 것” 등 대책을 마련하여<sup>45)</sup>, 그들의 시책에 순응하게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국체에 적합한 야소교’를 만들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여 그들의 침략정책 수행에 이용코자 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1940년에 일제 검찰이 마련한 다음과 같은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

지도의 근본 방침 : 물심 양면에 걸친 조선 기독교의 구미 의존 관계를 금절하여 일본적 기독교로 순화 갱생하게 할 것.

1. 물질적 방면에 대한 지도
  - 1) 외국인 선교사회가 경영하는 교육기관 기타 각종 사회사업을 점차 접수할 것.
  - 2) 외지 전도국에 대한 재정적 의존 관계를 차단하고 내선 기독교에 의한 재정의 자립을 촉진시킬 것.
2. 정신적 방면에 대한 지도
  - 1) 교역자 양성 기관에 대한 학무국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조할 것.
  - 2) 각 파에 상설적 집행기관을 설치하게 하여 감독 지도의 철저를 기할 것.
  - 3) 성서·찬송가에 대하여 재검토를 가할 것. 아울러 일요학교 교과서 기타 각 파의 출판물에 대하여 엄중하게 단속을 할 것.

45)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8), 390~391쪽.

- 4) 각 파의 敎憲·敎規를 재검토하여 적절한 개혁을 하게 할 것.
  - 5) 현재 경영 중인 각 파의 기관지에 대하여 그 편집 내용에 적극적인 지도를 가하여 국체관념의 함양과 시국인식을 철저하게 하도록 개선하고 널리 각 교도에게 구독하게 할 것.
  - 6) 신사참배의 철저
    - (1) 일반 민중의 신사참배에는 교도도 반드시 참배하게 할 것.
    - (2) 기독교계 경영 학교 직원 생도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신사에 참배하게 할 것.
  - 7) 교도는 각 집에 국기를 구입하여 갓춤과 동시에 교회당은 국기 게양탑을 설치하고 축제일 기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게 할 것.
  - 8) 집회시에는 반드시 다음의 행사를 실시하게 할 것.
    - (1) 4대절 기타 이유가 있는 의식을 거행할 때에 국가의 봉창.
    - (2) 궁성요배.
    - (3)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9) 국체와 아울러 시국인식의 철저를 위하여 강연회·좌담회 등을 개최 할 것.
  - 10) 각 파를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맹하게 할 것.
  - 11) 교도는 될 수 있는 한 청년단·방공단 또한 애국부인회·국방부인회·애국여자단 등에 가입하게 할 것.
  - 12) 祖先崇拜 관념의 양성을 조장하고 기독교의 조선숭배 배경의 잘못을 깨닫게 할 것.
  - 13) 국체에 순응하는 기독교 재건의 자각에 기초한 운동에 대하여 이를 견제 또는 저해하는 것 같은 장애를 제거할 것.
  - 14) 외국선교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
-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思想彙報》 제25호, 1940년 12월, 81~101쪽).

위의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간의 상황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기독교에 대한 정책의 명칭부터 앞의 것은 ‘지도 대책’이요, 뒤의 것은 ‘지도 방침’으로 ‘대책’에서 보다 확고한 ‘방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뒤의 것이 앞의 것보다 훨씬 상세하고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자료의 내용상 강요나 상세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도가 기독교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강화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정책은 모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여 서구 선교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고립시켜 일제의 황민화정책 및 침략전쟁 수행에 순



응·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일본적 기독교’라 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까지 변질시켜 기독교를 그들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충실히 순응·협력하는 일종의 어용 교화기구로 삼으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심지어 일제의 패전 직전에 일본 군부 지도부는, 연합국군의 공격시 한국 기독교인들이 연합국을 도와 줄 것을 두려워하여 한국 기독교인들을 1945년 8월 중순경에 학살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sup>46)</sup>

조선총독부의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탄압·통제정책은 전시체제와 함께 황민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던 미나미 총독이 1938년 10월 7일 제3회 기독교조선감리회 총회와 1938년 10월 17일 시국대응 기독교장로회 대회에서 한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도 분명하게 예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일본)는 동양 평화 옹호의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총동원하에 시국에 대처하고 있는 때인데 대일본국민인 자는 그 신앙하는 종교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천황폐하를 존숭하여 받들고 선조의 神祇를 숭경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로써 敎敎의 자유는 대일본국민인 범위에서만 용인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황국신민이라는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종교는 일본 국내에서는 절대 그 존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비상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국민으로서 힘써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아시고 이른바 종교보국의 길에 매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편, 《諭告·訓示·演述總攬》, 朝鮮行政學會, 1941, 707쪽).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공인종교라고 하는 일반 종교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탄압·통제·이용정책을 쓰는 한편, 민족적 색채가 농후하고 이용가치가 적은 비공인 종교였던 신종교들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총독부가 ‘종교유사단체’로 지칭한 신종교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193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탄압은 주로 총독부 사회과와 일제 경찰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총독부 사회과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방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1935년 6월 10일부터 2일간 ‘종교유사단체 취체회의’를 소집하고 있다.<sup>47)</sup> 같

46) 한석희 저, 김승태 역, 《일제의 종교침략사》(기독교문사, 1990), 185쪽.

은 시기에 경기도에서도 도미나가 분이치(富永文一) 지사와 사에키 아키라(佐伯顯) 경찰부장 등 10여 명이 회합하여 총독부 방침에 준하여 관내 사찰 정화에 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본토에서도 그 무렵 ‘종교경찰’을 두고 대본교 탄압에 들어감으로써, 조선총독부 경찰도 같은 종교단체의 조선 지부의 검거 탄압에 착수하여 1936년 4월 10일 이 단체를 해산시켰다. 일본 내무성에서 1935년이래 〈사교취체에 관한 건〉에 의해 ‘國體明徴’과 ‘邪敎一掃’라는 명분으로 종교탄압을 통하여 국민사상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을 조선총독부도 그대로, 아니 보다 더 가혹하고 충실하게 추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와 종교에 대한 검거와 탄압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욱이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일제는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한 종교단체 및 종교인에 대한 검거와 처벌 사건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7년에 검거되어 탄로 난 白白敎 사건은 일제의 종교탄압의 좋은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어 1938년 4월에는 〈보안법〉위반 혐의로 충남지역에서 정도교의 교주가 검거된 것을 비롯해서 같은 해 8월에는 성도교와 전북지역의 황극교가 〈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검거되어 기소되었다. 이 밖에도 수운교·무극대도교·흠치교·천도교 구파·태극교 등이 〈치안유지법〉·〈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대거 검거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물론, 당시 조선 민중의 종교적 정서를 대변하던 신종교 종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을 국체변혁·불경·〈치안유지법〉 위반·〈보안법〉 위반·〈군형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거하여 처벌하였던 것이다. 1940년 10월 당시 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이던 마스나가 쇼이치(増永正一)가 사법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다음과 같은 훈시는 그들이 어떤 시각에서 종교단체들을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탄압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종교단체 단속에 대하여

사변이래 반도의 기독교 기타 종교단체 관계자로서 불경 〈치안유지법〉·〈보

47) 《毎日申報》, 1936년 6월 9일, 社説 〈宗教類似團體 取締會議〉.

안법》 혹은 <군형법> 위반 등의 죄로 인하여 검거 처벌된 자가 잇따르고, 현저히 총후의 치안을 문란케 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반도의 각 종교운동은 대개 민족의식의 색채가 농후하여 순종교운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정치운동 내지 사회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 많고, 반도 정치상 많은 불상 사건에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은 일찍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써, 총후 치안확보의 요구가 가장 절실한 현시국 하에서 이들 종교단체에 대한 단속은 하루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 전 번에 경기도 경찰부에서 검거한 등대사 사건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서 수사의 결과에 의하면 통치권의 주체를 부정하고 국민의 국체관념을 혼란시키며 이에 편승하여 지상 신의 나라의 건설을 기도하는 불경·불령의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결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전 달에 전조선적으로 일체히 검거를 감행한 신사불참배를 표방하는 장로파 기독교도의 불온 사건은 현재로서는 아직 그 전모를 밝힐 수 없지만 혹은 이들 관계자가 품고 있는 사상경향은 등대사 관계자 등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조에 대하여는 심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안의 본질 규명에 만에 하나라도 유감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러한 불경·불령의 목적을 가진 종교 단체의 운동은 그害가 일반 좌익운동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하여는 더 한층 엄밀한 査察·內偵을 가하며 특히 그 이면 행동에 주의하고 모름지기 법에 저촉되는 불온한 언동을 발견할 경우에는 속히 검거 탄압을 가하는 동시에, 신앙은 한번 그것을 맹신하는 경우에는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검거 후라도 일반 교도의 계몽 지도와 병행하여 사찰의 손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재발 방지에 만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 재래의 유사 종교단체의 단속에 대하여는 이미 작년도 본 회의 석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만, 보천교 기타는 이미 탄압에 의하여 괴멸되고 교단 관계자가 지하에 잠입하여 재건운동을 기도하고 있는 외에 호남 방면에서 급격히 교세를 신장하고 있는 불교연구회와 같은 신흥 유사 종교단체의 최고 간부가 불경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안 등이 발생하고 합법적 단체의 교리·교설 내지 이면의 사상 동향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 거듭 유사종교단체에 대한 단속에 여러분의 유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思想彙報》 제25호, 1940년 12월, 2~3쪽).

이러한 조선총독부 검·경찰의 종교탄압 정책에 의해 검거되어 기소된 중요한 사건만 들어도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종교인 관련 주요 사상사건 경과

(1943. 9월말 현재)

사건명	검거인원	기소인원	검사국 및 기소일	비 고
동우회사건	181	42	경성, 1937. 8. 20	기독교인
등대사사건	66	33	경성, 1940, 6. 23	여호와의 증인
황극교사건	89	10	전주, 1938. 12. 23	
신사불참배 교회 재건운동사건	68	35	평양, 1942. 3. 12	기독교인
神人동맹사건	42	28	전주, 1942. 4. 11	
무극대도교사건	52	30	경성, 1942. 8. 17	
동아기독교회사건	32	9	함흥, 1943. 5. 24	침례교
삼산교 사건	36	17	전주, 1943. 6. 10	
천자교 사건	36	17	전주, 1943. 6. 16	
仙敎사건	38	9	전주, 1943. 6. 28	
계	640	230		

\*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편, 《思想彙報續刊》, 1943, 1~13쪽, 〈朝鮮重大思想事件 經過表〉에서 정리.

그러나 1939년에 제정되어 1940년 4월부터 발효된 〈종교단체법〉은 그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에는 여러 가지 추측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되기까지 발효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실 조선에는 이미 각종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인 제반 법규가 정비되어 있었고, 이미 1915년에 제정 공포된 〈포교규칙〉과 그 밖의 〈치안유지법〉·〈보안법〉 등으로도 충분히 총독부가 종교단체를 통제하여 〈종교단체법〉이 의도한 효과를 이미 거두고 있어 별도의 법규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종교단체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일제는 종교단체를 통폐합시키고, 교리와 종제까지 변경시키는 등 갖은 통제와 탄압을 할 수 있었으며, 성결교·안식교·동아기독교(침례교)와 같이 교회를 폐쇄하고 교단을 해산시키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金承台〉

## 2. 천도교 · 대종교

## 1) 천도교

## (1) 천도교의 창시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후, 관군의 수색과 추적이 심화되자 동학지도부는 산골로 피난을 다녀야만 하였다. 당시 동학지도부는 제2세 교주 崔時亨의 지도 아래 金演局 · 孫秉熙 · 孫天民이 삼두체제로 동학교단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제2세 교주인 최시형이 1898년 관군에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손병희는 1900년 교권을 장악하였다. 그가 교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그의 심복 李容九가 1897년부터 1900년 사이에 서북지방에 포교를 벌인 결과 입교한 수만 명의 서북지방 교인들이 그를 지지하였기 때문이다.<sup>1)</sup>

교권을 장악한 손병희는 동학농민운동의 뼈저린 경험과 아울러 개화사상이 발달한 서북지방의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개화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는 1901년 일본에 건너가서 그곳에 망명하여 있던 개화와 인사인 趙羲淵 · 權東鎮 · 吳世昌 · 梁漢默 · 朴泳孝 · 李軫鎬 등과 접촉하였다.<sup>2)</sup> 조희연 · 권동진 · 오세창은 갑오경장을 추진한 주역이었으나 명성황후 시해사건 후

1) 조규태, <舊韓末 平安道地方의 東學—敎勢의 伸張과 性格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 (《東亞研究》 21, 1990), 58~59 · 72~78쪽.

2) 邢文泰, <1904 · 1905年代 東學運動에 대한 一考察—進會 · 進步會를 中心하여> (《史學論志》 4 · 5합집), 66~67쪽.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姜成銀, <20世紀初頭における天道教上層部の活動とその性格>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24, 1987).

金旻宅, <韓末 東學敎門의 政治改革思想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이은희, <동학교단의 '갑진개화운동'(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0).

崔起榮, <韓末 東學의 天道敎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韓國學報》 76, 1994).

일본에 망명하여 재기를 꾀하고 있었고, 손병희는 포교의 자유와 조선정부의 정치적 개혁을 갈망하고 있었으므로, 두 집단의 제휴는 쉽게 이루어졌다. 손병희는 이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진화론·문명론에 입각한 개화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三戰論〉(1903)·〈明理傳〉(1903) 등을 저술하여 자신의 생각을 동학교단에 알리고 교인들의 태도 변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군인 및 정치인과 접촉하여, 러일전쟁 기간 중인 1904년 大同會·中立會·進歩會 등을 설립하여 民會運動을 전개하였다. 또한 1904년 12월 진보회와 일진회의 합동으로 세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도움을 얻어 입헌군주제의 실시와 조세제도의 개혁 등 대한제국 정부의 개혁을 이루려 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一進會를 이끌던 손병희의 심복 이용구가 일본의 ‘大東合邦論’을 순수하게 믿고, 1905년 11월 5일 〈보호청원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보호청원이 있는지 약 2주일 뒤인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의병들을 중심으로 反一進會運動과 反東學運動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동학교도들이 의병들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동학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손병희는 1905년 12월 天道敎를 창시하였다. 그리고 ‘敎會分離運動’, 즉 일진회와 천도교의 분리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진회 활동을 지속하던 교구장을 해임하였으며 이용구 등 60여 인을 출교시켰다. 출교당한 이용구 등이 侍天敎를 만들고 동학교단의 주요 재산을 독점하자, 천도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 (2) 교규의 정비와 교리의 정립

1906년 1월 손병희는 일본에서 만난 권동진·오세창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 권동진·오세창·양한묵 등은 귀국 이전부터 준비하였던 《天道敎大憲》을 공포하였다. 《천도교대헌》에서는 大道主가 宗令發布·公案認准·敎職選任 등을 통하여 교회의 운영을 장악하고, 大神師(崔濟愚)－神師(崔時亨)－聖師(孫秉熙)의 도통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전부터 사용된 敎長·敎授·都執·執綱·大正·中正의 6任 위에, 聖道師·敬道師·信道師·法道師를 두었다.

또한 중앙에는 중앙총부를, 지방에는 대교구와 교구를 두었다. 중앙총부에는 玄機司·理文觀·典制觀·金融觀·庶應觀을 두어 각 관장이 각기 교리·교육·사법·재정·서무를 주관하였다. 지방에는 대교구장·교구장과 이문원·전제원·금융원·서응원을 두어 교육·사법·재정·서무 등을 담당케 하였다.<sup>3)</sup> 이러한 교구의 정비를 통하여, 각 기관과 기구의 책임자에 자기 과를 임명함으로써 손병희는 교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손병희는 교권의 강화를 위하여 교리를 정립케 하였다. 이 책임을 맡은 양한묵은 1906년 5월에 普文館이라는 인쇄소 겸 출판사를 세우고, 1906년 《天道敎大憲》을 비롯하여 《天道敎志》·《天道敎典》·《天道太元經》·《準備時代》·《敎友自省》을, 1907년에는 《東經演義》·《東經大全》·《大宗正義》·《觀感錄》·《三壽要旨》·《聖訓演義》·《天約宗正》등을 간행하였다. 이 교리서 가운데 《천도교지》나 《천약종정》에서는 손병희의 교권승계를 미화하고, 손병희의 권위를 강조하였다.<sup>4)</sup> 또한 《준비시대》 등에서는 문명론을 소개하고, 개화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신천도교리와 문명개화론의 전파 및 확산을 위해서 천도교에서는 1906년 《萬歲報》를 발간하고, 1910년 《天道敎會月報》를 발간하였다. 또한 1910년에는 普成學院을, 1914년에는 同德女學校를 인수하고, 교리강습소를 설립하여 학교를 통한 계몽과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1909년 일진회의 한일합방 청원을 반대하였던 시천교인들이 천도교로 돌아오자 1910년경부터는 교세가 신장되었다. 1910년대 말 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따르면 300만 명의 교인이 있었고, 일제당국의 축소된 통계에 따르면 13만 명의 교인이 있었다.<sup>5)</sup>

### (3) 3·1운동의 주도와 임시정부 수립 활동

천도교에서는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1919년 1월 파리강

3) 崔起榮, 위의 글, 119~120쪽.

4) 崔起榮, 위의 글, 120쪽.

5) 金正仁, 〈1910년~1925년간 天道敎 勢力의 동향과 民族運動〉(《韓國史論》 32, 서울대 국사학과), 142~143쪽.

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최 린·권동진·오세창 등의 간부들이 독립의 기회임을 깨닫고 그 방법을 논의하였다. 상해로부터 신한청년당의 밀사가 다녀가고 일본의 동경으로부터 밀사가 <2·8독립선언서>의 원고를 갖고 오자, 천도교의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 린 등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1월 20일경 이들은 회합을 갖고 ① 독립운동을 대중화하여야 할 것, ② 독립운동을 일원화하여야 할 것, ③ 독립운동을 비폭력으로 할 것의 세 원칙을 마련하였다.<sup>6)</sup>

천도교에서는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하여 민족대연합전선을 형성하려고 작정하고, 2월 초 崔南善의 중재로 정주 오산학교 교감으로 있던 李昇薰을 통하여 기독교계와 연합전선을 맺는 것을 추진하여 기독교계로부터 참여 약속을 받았다. 또 최 린이 2월 24일 韓龍雲을 방문하여 불교계의 참여를 요청하고 승낙을 받았다.

민족대표 33인을 선정하였는데, 천도교측 인사는 손병희·권동진·오세창·林禮煥·羅仁協·洪基兆·양한묵·權秉惠·金完圭·羅龍煥·李鐘勳·洪秉箕·李鍾一·崔麟·朴準承의 15명이었다. 이것은 기독교계의 16명 다음으로 많은 것이었다. 천도교인들은 거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주관하였다. 천도교의 오세창이 총책임을 맡고 보성사 사장 이종일이 실무를 전담하여 보성사에서 2만여 장의 선언서를 인쇄하였다.

천도교에서는 이처럼 3·1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황해도 수안, 함경남도 단천 등지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천도교인들은 서간도·북간도 등지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그 지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민회·군비단 등의 무장투쟁단체에 참여하였다.

한편 천도교회는 1919년 3·1운동의 추진과 함께 소위 ‘大韓民間政府’라는

6) 신국주, <3·1독립선언>(*《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26~227쪽.

朴賢緒, <三·一運動과 天道敎界>(*《三·一運動 50周年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223~234쪽.



임시정부의 수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sup>7)</sup> 그렇지만 민족대표 33인에 참가하거나 《조선독립신문》의 발간에 관여한 천도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체포됨으로써 이것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천도교인인 申 肅과 安尙德 등은 漢城政府의 수립에도 관여하였으며,<sup>8)</sup> 일부의 천도교인들은 조선민국임시정부의 조직과 선포에 관여하였다.<sup>9)</sup> 그리고 천도교의 중간 지도자인 남형우는 노령으로 망명하여, 이승만계의 인물을 비롯하여 안창호계·이동휘계·일본 유학생계 인물과 접촉을 갖고 노령정부를 조직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성정부는 활동이 용의치 않았고, 노령지역은 백군과 적군과의 내전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활동이 자유로운 상해지역이 임시정부의 적합지로 부상하였고, 각지의 민족운동가들이 상해에 모였다. 이것과 짝하여 천도교인인 南亨祐와 洪 濤·李瑛根(李民昌) 등도 상해로 망명하였다.<sup>10)</sup>

이들은 국내의 한성정부에 참여한 천도교인과 접촉을 가지면서, 천도교의 정치조직으로 統一黨을 결성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에 관여하여 행정부의 관리와 의정원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지위는 낮았고 따라서 천도교인의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그런데 1919년 9월 명실상부한 민족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평북 의주대교구장 최석련과 선천대교구장 이군오의 명을 받은 崔

7) 愼鏞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지도자의 역할〉(《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도산사상연구회 제8회세미나발표문, 1997), 3~5쪽.

고정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제기〉(《제40회 전국 역사학대회 발표요지》, 1997), 141~144쪽.

8) 李賢周, 〈3·1운동 직후 ‘國民大會’와 임시정부 수립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6, 1997).

9) 李炫熙,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樹立計劃과 天道敎〉(《韓國思想》 20, 1985).

潘炳律, 〈대한국민회의의 성립과 조직〉(《韓國學報》 46, 1987).

고정휴, 앞의 글.

——, 〈3·1운동과 天道敎團의 臨時政府 수립 구상〉(《韓國史學報》 34, 1998).

이현희는 노령임시정부를 대한국민회의가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하여, 반병률은 대한국민회의가 노령정부를 수립하지 않았다고 논증하였고, 고정휴는 이것을 발전시켜 노령정부가 대한민간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단정부라고 보았다.

10) 조규태, 〈天道敎團과 大韓民國臨時政府〉(《한국민족운동사연구》 23, 1999) 참조.

東昨·신 숙 등 많은 인물들이 상해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聖化會를 조직하여 내부적 결속을 다지면서 다른 정치세력과의 제휴를 도모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인력과 자금의 양 측면에서 국내의 중앙총부와 지방의 천도교인들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결국 상해지역 천도교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를 노정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내에서의 천도교단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3·1운동시의 지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李承晩 정권에서 미미한 대우를 받아, 천도교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승만 정권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마침 1920년 말에서 1921년 초 이승만 정권이 위임통치를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고, 일본의 간도출병으로 고통을 겪는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자, 각지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신 숙이 중심이 된 천도교인들은 통일당을 새롭게 정비하고, 북경의 박용만·신 채호와 접촉을 갖고 1921년 4월 北京軍事統一會議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임시정부의 개혁과 의정원의 해산을 주장하였다.

또한 1921년 중엽 북경지역의 신 숙·姜九禹 등의 천도교인들은 상해지역의 천도교인들과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들은 국민대표회의에서의 천도교인의 영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북경에 전교실을 세우는 명목으로 국내로부터 합법적으로 자금을 들여왔다. 국내에서는 이종린 등이 북경교당건축기성회를 조직하고 자금을 모집하여 지원하였다.

1923년 초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서 천도교단은 만주 혹은 노령에 새롭게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개조파·창조파 등의 분열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와해되었다. 그러자 신 숙·강구우 등의 천도교인들은 노령의 尹海 및 元世勳과 연계하여 1923년 6월 국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노령에 정부를 창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1924년 초에는 노령으로 이동하여 이것을 관철하려 하였으나, 노령의 이동휘파와 이르크츠크파와의 갈등과 러시아의 지원약속 불이행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이후 천도교인들은 다시 북경에 집결하여 교회활동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25년 중반 민족협동전선운동이 본격화될 때

북경지역의 천도교인들은 대외연락의 거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농민사의 크레스텐테른 가입을 주선하면서, 천도교 신파와 이동휘계 공산주의자와의 협동전선의 결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sup>11)</sup>

#### (4) 문화운동론의 수용과 문화운동의 전개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천도교에서는 1919년 9월 天道敎靑年敎理講演部를 설치하고, 교리의 연구·선전과 조선 신문화의 향상·발전에 치중하려고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리고 1920년 3월에는 天道敎靑年會를 설립하여, 순회강연과 《開闢》의 발간, 강습소를 통한 교육 등을 통해서 문화운동론을 확산하였다. 그리고 1923년 9월 天道敎靑年黨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sup>12)</sup>

독일에서 탄생하여 일본을 거쳐 국내에 소개된 문화운동론에서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하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대량살상 및 대량과피를 일삼는 기존의 악육강식적 문명을 비판하고, 자유·평등·인류평화 등의 인도적 정신과 문화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신문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화운동론은 사회진화론에 기초하면서도, 사회유기체론을 중시하였다.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에서는 사회진화를 위한 생존경쟁의 단위를 세계 혹은 우주로 보고, 이 사회유기체끼리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조화와 협동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세계라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각 민족들은 조화와 협동을 이루어야만 하였다.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각각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야 하듯이, 각 민족은 세계라는 유기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에서 수립하려고 한 문화는 천도교의 문화였다. 그런데 그 천도교문화는 동학사상이 儒·佛·仙의 합일사상이라고 하여 반드시 동양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에서는 미풍으로 여겨졌던 전통적인 孝의 관념도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따

11) 조규태, 《1920年代 天道敎의 文化運動 研究》(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158~175쪽.

12) 조규태, 위의 책, 11~113쪽.

르는 종속적 · 비독립적 사상이라고 비판하고, 각 개인은 자아 · 자주 · 자립, 진취적 · 창조적 정신을 지닌 신인간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또 우리 민족은 崇古思想 · 依他思想 · 崇文非武思想 · 崇禮階級的 思想 등 전통 · 제도 · 풍습에 구속된 구관습을 버리고 자주적 · 독립적인 민족성을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사회를 일종의 유기체로 보고 유기체의 발전을 위한 개체간의 조화와 협동을 강조하였다. 각 개인들이 자유를 구가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에서 지향하였던 문화는 인간의 자율적 능력을 기초로 하여 자아와 개성의 발휘를 중시하면서도, 한편으로 조화와 협동을 강조한 서구의 신자유주의사상에 토대한 문화였다.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에서는 지상천국의 신사회를 정치체제나 경제구조와 같은 사회적인 방면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또는 생활양식인 文化를 바꿈으로써 변혁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문화운동론은 원칙적으로 유물론적 · 사회주의적 변혁관을 비판하고 유심론적 · 인간주의적 변혁관을 갖고 있었다. 이 이론을 구체화 한 사람은 李敦化로서, 그는 정신개벽 · 민족개벽 · 사회개벽의 삼대개벽론을 주장하였다.<sup>13)</sup>

문화운동론에서 사회변혁의 주도자를 자산가 · 지식인 · 實權者라고 보았던 점에서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이 문화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문화운동을 추진한 천도교청년회와 천도교청년당의 주도인물은, 첫째 지역적으로 평안도 · 함경도의 서북지역 출신이 중심을 이루었고, 둘째 신분적으로 조선말 이들 선조의 신분은 대체로 평민이거나 4·5대에 걸쳐 급제자를 내지 못했던 잔반이었으며, 셋째 경제적으로 자작농 혹은 자소작농 출신으로 주로 교사 · 언론인 · 사무직에 종사하였으며, 넷째 교육적으로 일본에 유학하였거나, 국내의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수학하였던 신지식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천도교청년당의 주도인물들은 조선시대에 차별받던 지방의 피지배계급 출신의 청년들로서, 중 · 소규모의 토지를 바탕으로 근대적인 교육을 받아 새롭게 부르주아 계급으로 성장하던 사람들이

13)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혜안, 1996), 255~281쪽.

었다.

천도교의 문화운동에서는 인간의 정신적 개혁을 통해 신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천도교에서는 문화적 개조운동의 일환으로 농민·노동·학생·상민·청년·소년·여성부를 두고 각 부문별로 새로운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각 부문에는 조선 농민사·조선노동사·내수단과 같은 부문운동단체를 마련하고, 각 부문에 속한 사람들을 변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천도교소년회에서는 자율적 어린이를 형성하기 위한 어린이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농민의 각성과 생활개선을 위해 1925년 10월 조선농민사를 설립하고 《朝鮮農民》을 발간하여 농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조선농민사와 교회를 통한 공생조합운동과 공동경작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신적·물질적으로 자립된 신여성을 만들기 위해 천도교에서는 《婦人》·《新女性》 등의 잡지를 발간하고, 강습·야학·강연, 시일학교·新人間之學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천도교의 문화운동은 새롭게 대두한 부르주아 계급이 문화적 변혁에 의해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 천도교적 이상사회를 수립하려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대두되었고, 그 운동론의 철학적 기초가 일제의 지배체제를 합리화하고, 수립하려는 문화가 일제가 지향하는 문화와 유사하며, 그 추진집단에 일본유학생이 많으며, 그 운동의 내용이 일제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수많은 검열과 검속을 받아가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던 천도교 문화운동가와 천도교인들의 활동은, 독립의 기초를 쌓고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 (5) 사회변혁론의 모색과 천도교의 분열

천도교총부에서 문화운동론을 수용하고 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총부의 대종사장으로 손병희의 사위였던 鄭廣朝는 천도교의 공로자를 소원하게 다루고 青年會員과 일본 유학생들을 중용하였다. 그리고 誠米收入의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광조는 1921년 4·5월경 천도교청년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sup>14)</sup>

정광조의 이러한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던 세력은 吳知泳 등의 朴寅浩派와 金尙默·尹益善·朴魯學 등의 洪秉箕派였다. 이들은 삼남 출신의 동학도로 동학농민운동에도 참여하여 소위 반봉건·반외세운동을 전개한 천도교의 구 세력이었다. 오지영 등의 박인호파와, 김상묵·윤익선 등의 홍병기파는 2세 교주의 아들인 崔東曦派와 결합하고 동학의 이념을 고수하려는 의도에서 동학계 유사종교의 통합을 추진하여, 5월 13일 侍天·濟愚·靑林·敬天·濟世敎 등 최제우의 遺敎를 받드는 동학계 유사종교의 대표자 26명과 함께 東學俱樂部를 발기하였다.

또 한편으로 오지영과 홍병기·윤익선·김상묵·최동희 등은 1921년 4월 무렵 지방의 교인들을 끌어들여 교회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임명제인 의사원제를 선출제인 의정원제로 바꾸고 의정원을 이용하여, 교헌을 변경하였다. 이들은 大道主를 公選하고, 중앙과 지방의 차별을 완화하며, 일체의 연원은 용담연원, 즉 최제우에 귀속시켜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운영에 반대하고, 연합제로 교회를 평등하게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광조 등은 손병희의 힘을 업고 서북지역의 원로들을 회유하여 반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혁신파는 1922년 8월 말 天道敎革新團을 결성하고, 신·구의 분리를 발표함과 함께 〈임시약법〉 9조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1922년 10월경 天道敎維新靑年會를 통하여 지방의 천도교도를 회유하고, 〈天道敎約法〉을 가결하고, 1922년 12월 기존의 천도교총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天道敎聯合敎會를 조직하였다.<sup>15)</sup>

천도교연합회원들은 천도교의 이념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여 〈約法〉에서 교회의 중앙집권적 운영을 반대하고 연합적 운영을 주장하였으며, ‘공약삼장’에서는 “階級的 差別制는 타파하고 평등생활을 領導할 事”를 강조하였다.<sup>16)</sup> 심지어 지방교회에서 總部에 보낸 건의문 중에는 “敎主와 小使의 봉급

14) 조규태, 앞의 책.

15) 〈天道敎의 內訌에 關한 件(1922. 3. 16)〉(高麗書林 影印, 《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叢書》 4, 1992), 53쪽.

16) 吳知泳, 《東學史》(大光文化社, 1984), 236~238쪽.

을 동일히 하라”고까지 되어 있었다.<sup>17)</sup> 권위에 항거하고 연합제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방식은 아나키즘과 가까웠다. 이들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주에 공산제에 가까운 천도교적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하였다.<sup>18)</sup>

또한 이들은 항일정신을 견지하고 천도교연합회가 분립한 직후인 1922년 국내에서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6년 만주의 吉林에서 正義府·衡平社와 3각동맹을 이루어 高麗革命黨을 조직하였다. 1923년 4월 임시종법사회의 결의로 中央總部가 中央宗理院으로 바뀐 후 종법사회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하던 것을 13명으로 구성된 宗理師會에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 권동진·權秉惠·李炳憲·朴準承 등 천도교의 구세력들은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더군다나 1925년 4월의 정기법회에서 천도교의 기념일이 天日(대신사 득도일, 4월 5일)·地日(해월신사 승통일, 8월 14일)·人日(의암성사 승통일, 12월 24일) 3회로 한정되고 박인호의 승통기념일이 기념일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천도교의 구세력은 그 영향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sup>19)</sup>

그런데 마침 1925년 3월 일본에서 보통선거법이 통과하자 천도교에서도 자치의 실현에 대비하여 1925년 4월 천도교청년단의 중앙위원회에서 일반 정치노선을 작성하고 농민층을 확보하는 쪽으로 운동의 중심을 전환하고, 중국의 국민당·일본농민동맹·모스크바의 국제조직들과 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박인호에 이어 교주가 될 것을 꿈꾸고, 천도교가 순수한 종교적 결사체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자치운동의 추진을 반대하였던 吳榮昌系의 교인들은 1925년 4월 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집권파에 가서 교주제의 부활을 주장하였다.<sup>20)</sup>

오영창계의 교인대회측과 종리원 집권파(신파)와의 갈등이 야기되자, 李鍾麟·金庚咸·申泰舜·金永倫·鄭容根·金在桂·李時雨·權東鎭·韓賢泰·朴準承·李炳春 등은 8월 20일 오영창계의 교인대회와 천도교종리원의 통일을 표방하면서 統一期成會를 조직하였다.<sup>21)</sup> 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출신으로

17) 〈統一制와 聯合制에 대하여〉(《天道教會月報》 150, 1923년 2월), 3쪽.

18) 조규태,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240~241쪽.

19) 조규태, 〈천도교 구파와 신간회〉(《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195~198쪽.

20) 《齋藤實文書》 10(高麗書林, 1990), 457쪽.

21) 《東亞日報》, 1925년 8월 21일·23일.

동학농민운동에도 참여하던 천도교의 원로이었으나 정광조·최 린의 등장과 함께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천도교의 통일을 표방하면서 세력을 결집하고 결집된 세력을 바탕으로 교내의 지위를 강화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치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최 린 등의 천도교 신파에게 일정한 지분과 역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권과는 교권의 양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치운동의 핵심에서 통일기성회측을 배제하였다.

그러자 통일기성회는 1925년 말 교권과 종리사에 반대하는 오영창의 교인대회에 접근하여 1925년 11월 교주제를 부활하여 박인호를 4세교주로 한다는 조건에 합의하고 오영창계의 교인대회와 통합하여 ‘천도교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6년 1월에는 이 중앙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종리원이라고 고치고 최 린계열의 종리원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sup>22)</sup> 이들은 천도교의 집권파에 비하여 대체로 입교 연대가 오래되므로 구파라고 불렸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박인호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기성회는 대체로 이남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東學시대에 입교한 천도교의 구세력이었으므로 천도교 구파라고 불렸다.

천도교 구파는 “자치는 일대 시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며 사회주의단체인 화요회가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에 접근하였다.<sup>23)</sup> 또 1926년 4월 朴來源·朴來泓의 발의로 천도교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천도교는 천도교인 姜達永이 당수로 있던 제2차 조선공산당과 제휴하였다. 천도교 구파는 천도교 청년동맹이 전위가 되어 격문의 인쇄와 전파, 사람의 동원 등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조직적으로 만세시위를 벌이지는 못하였다.<sup>24)</sup> 6·10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천도교청년동맹의 대표위원이었던 박래홍은 구파측 원로인 권동진과 함께 1926년 말 新幹會를 창립하기 위한 모임에 참여하였다. 1927년 2월 신간회가 창립되었을 때 권동진은 부회장, 박래홍과

22) 김정인, 앞의 글, 177~180쪽.

23) 京城鐘路警察署長, 〈民族主義運動勃興ニ關スル件〉(1926년 1월 29일).

24) 〈天道敎靑年同盟執行委員會第一回會錄〉(《天道敎會月報》184, 1926), 4·40쪽.

조규태, 〈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충북사학》9, 1997).



이종린은 간사에 선임되었다. 또 천도교 구파는 신간회 경성지회·수원지회·장흥지회 등의 지회에서 계몽운동, 민중의 권익 옹호, 광주학생의거 동조활동을 전개하였다.<sup>25)</sup>

한편 통일기성회와 함께 중앙종리원을 조직하였던 오영창계 교인들은 1927년 9월 평북 영변에 六任所를 정하고 4천여 명의 교도를 이끌고 분립하였다.<sup>26)</sup> 이들은 동학시대의 육임제, 즉 敎長·敎授·都執·執綱·大正·中正의 제도를 준수하여 六任派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었다. 그리고 이들은 통일기성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신간회 활동보다 종교적인 활동에 치중하였으며, 현실적으로는 오영창이 5세 교주가 되려는 마음에서 교주제의 부활을 희망하였다.

천도교 연합회와 구파와 육임파가 분립하고 난 후 남은 천도교의 주류가 신파였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평안도·함경도 등 이북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대체로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입교한 사람들로서 계급적 성격이 남한 출신의 東學徒와 달리 자영농 혹은 중·소지주들이 많았고, 동학농민운동시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반일감정이 이남지역의 천도교인들에 비하여 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반봉건·반외세적 운동을 지향하기보다는 친외세·개화적인 운동을 지향하였다. 이들은 진보회·일진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 대한제국정부의 개혁과 개화운동을 추진한 주역이었으며,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을 추진한 주체였다.

참고적으로 천도교 각 파의 교세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에 제시된 교인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지만 그 대체적인 교세는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천도교 신파의 교인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구파·육임파·연합회파의 순으로 많았다.

25) 조규태, 앞의 글(1997).

26) 李庸昌, <1920년대 天道敎의 紛糾와 民族主義運動>(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3), 80~81쪽.

〈표 1〉 천도교 각파의 교도수<sup>27)</sup>

구분 시기	천도교 신파	천도교 구파		천도교연합회
		천도교 구파	천도교 육임파	
1922년 12월 (연합회 분립기)				12,000여 명
1925년 12월 (구파·육임파 분립기)	98,500명	6,400여 명		5,000여 명
		11,800여 명		
1927년 9월 (육임파 분립기)		6,000여 명	약4,000여명	
1930년 11월	63,849명	14,142명	3,941명	435명
1930년 12월 (신파·구파 합동기)	56,800명	18,000여 명	3,180명	1,300여 명

## 2) 대중교

### (1) 대중교의 중광과 그 배경

大宗教는 1909년 음력 1월 15일 弘巖 羅 喆에 의하여 重光되었다. 나 철은 본명이 羅寅永으로 1863년 전남 樂安郡 南山面 錦谷里(현재 寶城郡 後橋邑 七洞里 錦谷부락)의 한미한 가문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21세 때인 1883년경 서울에 올라와 金允植의 문인이 되었고, 1891년 大科에 장원한 후 承政院 假注書 · 兵曹司正 · 承文院 副正字의 직을 거쳐, 1893년 10월 史官에 임명되었으나 낙향하였다. 그리고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제주도에서 유배된 스승 김윤식의 외로움을 달래며 함께 머물렀다.

그는 1901년 서울에 올라와 국제공법과 한·일 간에 체결된 약장의 준수를 호소하는 민간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 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으려 하자, 1905년 8월 李 沂 · 吳基鎬 등과 渡日하여 일본의 천황에게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전해줄 것을 상소하였다. 1905년 11월 일본이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자, 1907년 2월

27) 朝鮮總督府, 〈最近の天道教と其の分裂より合同への過程〉(高麗書林 影印, 《藤實文書》 10, 1990), 466~468 · 575쪽. 이 숫자는 정기적으로 성미를 내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다. 실제 교회에서 말하는 교인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서울 및 전라도지역의 전·현직 관리로 구성된 自新會를 조직하고, 을사5적의 저격을 시도하였으나 준비 미비 및 행동대의 미숙으로 실패하였다. 1907년 4월 1일 平理院에 자수하여 유형 10년을 언도받고 智島에 유배되어 있던 그는 1907년 12월 隆熙皇帝의 특사로 석방되었다.<sup>28)</sup>

그는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박탈과 1907년의 군대해산과 고종의 퇴위를 지켜보면서, 자주 의식과 민족 의식 같은 국권회복의 정신적 기초를 신앙을 통하여 수립하기 위하여, 1909년 오기호·이기 등과 함께 고려 元宗 때의 몽고침입 이후 민간신앙으로 전해 내려오는 단군신앙을 다시 끌어내어 ‘檀君大皇帝神位’를 모시고, <檀君敎佈明書>를 공포하고 檀君敎를 중광하였다.<sup>29)</sup>

그러나 단군교란 명칭이 일본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종교로 이해될까 염려하여, 나 철은 1910년 8월 5일 ‘단군교’란 이름을 폐지하고 ‘대종교’란 이름을 사용하였다.<sup>30)</sup> 또한 단군교 중광의 주역이었던 鄭薰模가 일본에 의탁하여 교세의 신장을 기도하는 등 친일화 하자 이와 결별하고<sup>31)</sup> 독자적으로 대종교를 創敎하였다.

## (2) 대종교의 확산과 조직의 정비

대종교를 창시한 나 철은 서울에 南道支司 및 北部지사를 설치하고, 庚戌國恥 후인 1910년 10월 만주 북간도 三道溝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1911년 7월에는 다시 백두산 北鹿 靑波湖에 대종교 總本司를 설치하였다가 1914년에는 삼도구에 본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道

28) 朴永錫, <大宗教의 民族意識과 民族獨立運動> (《日帝下獨立運動史研究》, 一潮閣, 1984).

金東煥, <己酉重光의 民族史的 意義> (《국학연구》 1, 1988).

박 환, <羅喆의 人物과 活動> (《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 一潮閣, 1991).

29) 朴永錫, 위의 글, 250쪽.

金東煥, 위의 글, 90~92쪽.

30) 金東煥, 위의 글, 94쪽. 그가 대종교란 이름을 사용한 것은 교리적으로 大는 한, 宗은 검이므로, 大倧이란 한검, 즉 박달임금을 뜻하는 檀君이란 말과 같으므로 大倧敎를 敎名으로 사용하였다.

31) 李康五, <檀君信仰의 實態分析> (《정신문화연구》 32, 1987), 65쪽.

敎區를 설립하였다. 동도본사는 汪淸縣, 서도본사는 上海, 남도본사는 서울, 북도본사는 노령에 두었다. 동도본사의 책임자는 徐 一, 서도본사의 책임자는 李東寧·申圭植, 남도본사의 책임자는 姜 虞, 북도본사의 책임자는 李相高이었고, 나 철은 남도본사에 머무르며 전반적인 교무를 관장하였다.

특히 나 철은 金敎獻 등으로 하여금 교리서를 편찬케 하였다. 그리하여, 김교헌의 주관으로 1914년 《神檀實記》·《神檀民史》·《檀奇古史》가 저술되었으며, 《三一神話》가 편찬되었다. 이러한 서적을 통하여 단군의 실존을 주장하고 고조선의 王系를 복원하였다.

이처럼 나 철은 서울에 머무르며 교리를 정립하고 교구를 정비하며 포교를 확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191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宗教統制案〉을 반포하여 대종교를 불법화하자, 그는 1916년 8월 황해도 九月山 三聖祠로 은둔하였다가 8월 15일 사망하였다.

나 철의 유언으로 2세 교주에 임명된 김교헌은 1917년 만주에 위치한 대종교 총본사에 부임하였다. 교주 취임 전 이미 많은 교리서를 발간한 바 있던 그는 부임해서도 민족종교에 걸맞게 교리와 儀式을 정비하고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종래의 사대주의사관을 탈피하여 민족주체사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문헌을 저술하고 편찬하였다.<sup>32)</sup>

그는 1922년 倂經會에서 《神話講義》·《神理大全》·《會三經》·《神事記》·《朝天記》·《神歌集》 등을 교열·간행하였다. 그리고 1923년에는 《宗理問答》·《重訂神歌集》·《增剛倂禮抄略》·《國漢文三一神話》·《神聖大全》 등을 검정한 후, 施教會에서 《國文懸吐神話講義》·《神理大全》·《神事記》·《會三經》·《國漢文神檀民史》·《倂達族疆域形勢圖》 등을 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포교활동과 교세확장에 이바지하였다.<sup>33)</sup>

이처럼 김교헌은 교리연구와 교사편찬에 주력하는 한편 포교활동에도 매진하여, 국내에 6개소, 만주지역에 34개소, 노령지역에 3개소, 중국 관내에 3개소, 총 46개소의 施教堂을 설립하였다. 특히 1920년 일본의 간도 출병으로 대종교인이 많은 희생되어 활동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지역에

32) 朴永錫, 앞의 글, 261~262쪽.

33) 朴永錫, 위의 글, 262쪽.

34개소의 시교당을 설립한 것은 놀라운 성과였다. 1917년 연길·왕청현에 700여 명의 신자가 있었지만, 1925년 무렵 연길·화룡·왕청현에는 무려 2,100여 명의 대종교 신자가 있었다.<sup>34)</sup>

### (3) 대종교의 독립운동

대종교는 《神檀實記》·《神檀民史》·《檀奇古史》 등의 敎史를 발간하여 민족주의사관을 형성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대종교는 《신단실기》를 통하여 桓因·桓雄·檀君의 시대를 우리의 역사시대로 포함시키고, 만주에서 흥기한 遼·金까지도 국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신단민사》는 仙敎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문화사를 조명하여, 선교의 성쇠가 곧 국운의 성쇠와 연결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箕子朝鮮의 위치를 遼西의 永平·廣寧 일대로 비정하는 등 만주를 우리 고대사의 주요한 무대를 보았다. 이러한 대종교의 민족주의사관은 민족주의사학자인 박은식·신채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신단민사》와 《倍達族疆域形勢圖》 등은 항일독립운동을 양성했던 사관학교와 한인들이 세운 일반학교의 교재로 쓰이는 등 민족의식의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sup>35)</sup>

또한 대종교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포교의 수단으로 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2세 교주 김교현 교주 시기인 1914년 화룡현 평강 상리사 삼도구에 靑一學校를 지었다. 또한 尹世復은 1911년 봉천성 환인현으로 이주하여 東昌學校를 설립하고 李元植·李克魯 등과 함께 재만 한인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윤세복은 1919년 7월 동창학교가 폐지되자, 1919년 7월 撫松縣으로 이주하여 白山學校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27년에는 密山 當壁鎮으로 총본사를 이주하여 大興學校를 설립하였으며, 1935년에는 총본사를 동경성으로 옮기고 다음해에 倥門學院인 大倥學院을 설립하고 초·중등부와 여자야학부를 병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각지에 산재한 시교당에서도 강습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외에 왕청현에 설립되었던 昌東學校, 1933년 안희제가 동경성에 설립한 渤海學校도 대종교계 학교였다.

34) 千敬化, 〈大倥敎의 民族敎育運動에 관한 研究〉(《白山學報》 27, 1983), 98쪽.

35) 李道學, 〈大倥敎와 近代民族主義史學〉(《국학연구》 1, 1988) 참조.

대종교에서 설립한 학교에서는 교사진으로는 대종교 교주인 김교헌 외에 신채호·박은식 등 민족주의사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신단실기》·《신단민사》의 敎史와 〈朝鮮上古史〉·〈夢拜金太祖傳〉 등 단군의 역사와 만주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특별히 교수하였다.<sup>36)</sup>

대종교에서는 이러한 계몽운동뿐만 아니라, 1911년 3월에 왕청현에서 重光團을 조직하였다. 중광단은 단장 徐 一과 玄天默·白 純·朴贊翊·桂 和·徐相庸 등이 참여한 무장투쟁을 지향한 단체였다.<sup>37)</sup> 대종교인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개조론이 주장되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자 독립을 위한 열망에서 1918년경 소위 〈戊午獨立宣言〉을 발표하였다.<sup>38)</sup> 그리고 대종교인들은 1919년 3월 이후 龍井에서 개신교·천주교·천도교·공자교의 교도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조선독립기성회를 조직하였다. 독립만세운동 직후에는 大韓國民會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후 1919년 5월 大韓正義團이 조직되자 이 대한정의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1919년 10월 吉林軍政司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北路軍政署를 조직하였다.<sup>39)</sup>

#### (4) 대종교의 수난

1923년 11월 김교헌이 사망하자, 윤세복이 3세 교주에 임명되었다. 윤세복은 1924년부터 1945년까지 3세 교주로 재임하는 동안 술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대종교의 교단조직을 유지하였다. 1925년 중국의 동북군벌과 일본당국 사이에 三矢協定이 체결되어 대종교의 포교활동이 금지되자, 윤세복은 1928년 1월 寧安縣 海林站에서 열린 제6회 救議會의 결정에 따라 포교금지 해제 시까지 총본사를 중·러국경지대인 密山縣 當壁鎮으로 이동시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찬익·尹復榮·曹成煥 등의 간부들과 길림의 동북군벌 및 南京政府와 대종교의 포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꾸준히 접촉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張作霖의 뒤를 이어 집권한 張學良의 배려로 대종교는 1929년 동북

36) 千敬化, 앞의 글, 103~111쪽.

37) 박 환, 〈北間島地域の 獨立運動團體－北路軍政署〉(《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 一潮閣, 1991), 92~93쪽.

38) 朴永錫, 앞의 글, 270~271쪽.

39) 박 환, 앞의 글(1991b), 98~100쪽.

군벌로부터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그렇지만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다음해에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자, 대종교는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 1933년 윤세복은 대종교 총본사를 밀산 平陽鎭 新安村으로 이전하고 포교활동에 힘써 信一施教堂 외 4개의 시교당을 신설하였다. 포교의 어려움 때문에 마침내 윤세복은 1934년에 일본당국과 교섭하여 在滿施教權認許申請書を 제출하고 포교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처럼 윤세복이 일제와 타협한 것은 대종교의 중광 시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었다.

일제는 대종교의 포교를 인정하여 대종교 간부들의 경각심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대종교의 간부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1942년 壬午教變을 조작하여 20여 명의 간부를 체포하고 安熙濟 등 10명을 拷問致死하고 나머지는 투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종교의 교단조직은 박살나고 포교활동은 중단되었다.<sup>40)</sup>

이런 상태에 있다가 1945년 7월 5일 소련군의 만주 진출로 투옥되었던 대종교의 지도자들이 석방되었다. 이들은 1945년 7월 7일 寧安縣 海南村에서 대종교 총본사를 부활시켰다. 이어 東京城으로 총본사를 옮기고 본격적으로 교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945년 李顯翼을 서울로 파견하여 총본사의 이전을 준비케 한 후, 1946년 1월 윤세복 교주와 간부들은 서울로 돌아와 서울에 대종교 총본사를 부활시켰다.<sup>41)</sup>

〈曹圭泰〉

40) 朴永錫, 앞의 글, 266~268쪽.

41) 朴永錫, 〈民族光復 후의 大宗教運動〉(《日帝下 獨立運動史研究》, 一潮閣, 1984), 284~285쪽.

### 3. 불 교

#### 1) 식민지 불교의 성립

##### (1) 〈사찰령〉체제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경술국치로 인하여 불교계는 일제가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제정·시행한 〈寺刹令〉의 억압과 구속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찰령〉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그날까지 불교계의 모든 활동을 감시·감독하였다. 요컨대 일제하 한국불교는 이 〈사찰령〉체제의 구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일제가 〈사찰령〉을 통하여 불교계를 장악한 것은 불교계를 행정 편의주의적인 구도를 통하여 관리하고, 한국인의 정신과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계가 독립운동에 나설 수 없는 기반을 구축함에 있었다.<sup>1)</sup>

〈사찰령〉은 1911년 6월 3일 제정·반포되었으며, 그 시행규칙은 동년 7월 8일 발표되었고, 9월 1일의 총독부령 제83호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찰령〉의 개요와 내용은 바로 일제하 불교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먼저 〈사찰령〉의 전문(7조)을 살펴보자.

제1조. 사찰을 병합 이전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음이 可함. 그 基址나 명칭을 변경코자 할 때도 위와 같음.

제2조. 사찰의 기지와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없이 전범·포교·법요 집행과 僧尼 止住의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케 하지 못함.

제3조. 사찰의 본말관계, 승규 법식, 기타 필요한 寺法을 각 본사에서 정하고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함.

제4조. 사찰에는 주지를 둬.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寺務·법요 집행 등의 책임을 지며 대표함.

1) 〈사찰령〉의 개요 및 성격은 아래의 논고가 참고된다.

정광호, 〈日帝의 宗教政策과 植民地佛敎〉(《韓國史學》 3, 1980).

徐景洙, 〈日帝의 佛敎政策—寺刹令을 中心으로—〉(《佛敎學報》 25, 1982).

崔炳憲, 〈日帝佛敎의 浸透와 植民地佛敎의 性格〉(《韓國思想史學》 7, 1995).



제5조.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기타의 귀중품은 총독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이를 처분할 수 없음.

제6조.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7조. 본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사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함(《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6월 3일).

이 전문의 내용에서 파악되는 것은 사찰 및 승려로 요약되는 불교계 전체의 활동이 일제에게 완전 장악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계의 인사권·재산권·운영권이라 하겠다. 특히 〈사찰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각 본사는 寺法을 정하여 조선 총독에게 인가를 받았거니와, 그 사법도 일제가 사전 검토하고 준비한 틀에 일률적으로 맞추는 형식이었다. 더욱이 사법의 도입부에는 일본의 축제일과 역대 천황제일을 법식에 포함시키는 등 승려 및 불교신도를 황국신민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시켰다.

이같은 〈사찰령〉의 등장은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그 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불교 내부의 민주적인 전통이 사라지고, 점차 일제가 만든 행정구도에 편입되면서 내부의 갈등이 조장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인 이른바 山中公議制度의 퇴진과 동시에 주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막강해진 측면이다. 사찰행정의 주체가 일제당국이 되면서 주지들은 그 관권을 배경으로 일을 추진함에서 파생된 실권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변동을 주지전횡시대의 등장으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본사와 그 예하 사찰간의 사격 및 위상 즉 本末寺制度가 운영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구도로 작용하였다. 이는 각 본산 내부에 있어서 본사를 행정의 중심으로 설정한 것이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본산의 위상이 증대되면서 그를 벌미로 여타 말사를 억압하는 성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성향을 내포한 〈사찰령〉에 대하여 당시 불교계 내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표출하였다. 일부 승려들이 〈사찰령〉은 조선사찰의 권리를 박탈하고 조선승려를 박멸한다고 지적하였지만 대부분은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사찰령〉반포 이전인 개화기 공간에서 지방토호 및 기독교측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반발이 개재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그 인식에는 사회진화론에 영향받은 일본불교에 대한 우호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불교계 내부에서 <사찰령>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확연한 비판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일제는 한국불교의 명칭도 朝鮮佛教禪敎兩宗이라는 자의적인 중명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종단의 설립과 운영 자체도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불교계의 자율적인 운용 자체를 절대 허용치 않았다.

## (2) 원종 및 임제종의 퇴진

<사찰령>은 한국불교의 자주적인 종단의 설립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에 <사찰령> 시행 전후에 있었던 종단인 圓宗과 臨濟宗은 자연 퇴진하였다. 원종은 1908년 3월 전국 승려대표가 元興寺에서 모여 만든 종단이었다. 그러나 원종은 경술국치 전후에도 당시 구한국정부 및 일제당국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종을 주도하였던 해인사 승려 李晦光은 원종의 인가를 위해 친일파 및 일본불교의 유력한 승려의 협조까지 활용하였지만 끝내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에 이회광은 1910년 9월말 원종의 인가 및 불교 발전을 위한 복안을 강구키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회광은 일본에 가서 일본불교의 曹洞宗 관장을 면담하고 원종과 조동종간의 '연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sup>2)</sup> 그러나 그 연합의 저변에는 단순히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의 일개 종파인 조동종에게 매종한 성향이 깔려 있었다. 즉 한국불교의 전통을 무시한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다. 이는 원종의 인가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불교의 발전과 증흥을 위한 자주성의 한계라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회광은 귀국한 이후 연합의 내용을 공개치 않고 추인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에 의하여 그 내용은 전불교계에 알려졌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그 내용이 민족불교를 저버린 것으로 단정하고, 반발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바로 임제종운동이었다.<sup>3)</sup> 韓龍雲·朴漢

2) 金光植, <1910年代 佛教界의 曹洞宗 盟約과 臨濟宗 運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 1995), 106~109쪽.

3) 金光植, 위의 글, 110~115쪽.

永 등이 중심이 된 그 운동은 주로 전라도 및 경상도 일대에서 시작되어 전 불교계로 파급되었다. 이 운동은 1911년 1월 송광사에서 개최된 조동종맹약 규탄대회로 가시화되었다. 당시 그 대회에서는 조동종맹약을 비판하면서 한국불교의 전통은 임제종에 있음을 선언하고 임제종 종무원을 발족시켰다. 그 이후에는 임제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론의 정비와 포교의 강화를 시도하면서 임제종이 주도한 사법과 승규를 제정하여 일제당국에 승인받으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한편, 임제종은 범어사·통도사·해인사를 임제종 3본산으로 정하고 종무원 사무소를 범어사로 이전하였다. 이처럼 당시 불교계는 북측의 원종과 남측의 임제종이 대립하는 사정이었기에, 북측을 北黨으로 남측을 南黨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임제종의 주도자들은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서울에 임제종 중앙포교당을 건립하였다. 1912년 5월 26일에 개최된 개교식은 성황리에 개최되어 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가 <사찰령>을 제정·시행하였던 시기였다. 이에 임제종은 <사찰령>체제에서 배제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1912년 6월, 당시 일제는 원종과 임제종의 책임자를 초청하여 원종과 임제종을 불허하다는 방침을 통고하면서 그 간판의 철거를 종용하였다. 이에 원종은 그 제의를 수용하고 원종 종무원을 조선불교선교양종 본산 住持會議院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요컨대 일제의 사찰정책을 수용하였다. 임제종도 일제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그 중앙포교당도 조선선종중앙포교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포교당의 운영을 주도하였던 한용운은 임제종운동의 정신을 계승기 위해 朝鮮佛敎會 및 佛敎同盟會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제지당하고 말았다. 또한 임제종운동에 일정하게 관련한 白龍城이 禪宗臨濟派講究所를 설립한 것도 한용운의 지향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사찰령>체제의 등장은 자생적인 종단을 지향하였던 원종과 임제종의 퇴진을 가져왔다. 그러나 임제종운동에서 나타난 保宗정신과 불교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의식은 이후 불교청년운동 및 불교 자주화운동의 이념적인 기반이 되었다.

### (3) 30본산 연합제규와 불교의 중흥

〈사찰령〉체제의 등장과 원종·임제종의 퇴진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불교계가 구속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30본산 주지가 원종의 후신으로 만든 본산주지회의원에서는 〈사찰령〉과 사법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sup>4)</sup> 그런데 이 住持會議院은 본산주지들의 일종의 연락사무소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종단의 형태로 볼 수는 없었다. 미흡하나마 종단의 형태를 모방한 것은 1915년 1월 총독부의 지시에 의하여 가시화 된 〈30본산 聯合制規〉에 근거한 30本山聯合事務所였다. 그러나 이 연합사무소는 완전한 의미의 종단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고, 講學과 布敎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협의체였다.<sup>5)</sup> 완전한 종단에서는 불교계 내부의 인사권·재정권·사업 추진 등의 모든 부문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합사무소는 미흡하고 제한적인 분야에서 종단의 지향을 추진하였다.<sup>6)</sup>

이 연합사무소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은 中央學林과 地方學林의 설립이었다. 中央佛專과 東國大의 전신인 중앙학림의 설립은 연합사무소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1916년부터 학생을 모집하는 등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講院을 개편하여 설립한 지방학림은 중앙학림과 연계하여 설립하였다. 포교 분야는 불교계가 공동으로 건립한 사찰인 覺皇寺에서 일반대중에게 보다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행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불교계의 현실인식은 불교의 중흥과 발전에 모아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산중불교에서 도회지의 대중불교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 대안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 그 인식의 저변에는 당시 풍미하였던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영향이 깔려 있었다.<sup>7)</sup> 약육강식·우승열패·적자생존·경쟁으로 대변되는 진화론은 불교계에도 수용되어 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

4) 《朝鮮佛教月報》6호, 〈雜報〉·〈會議院會議錄頤末〉, 57~77쪽.

5) 〈朝鮮佛教禪教兩宗三十大本山住持會議所 第四回定期總會會議狀況〉(《佛教振興會月報》1, 1915. 3), 69~82쪽.

6) 한동민, 〈1910년대 선교양종 30본산연합사무소의 설립과정과 의의〉(《한국민족운동사연구》25, 2000).

7) 金光植, 〈1910年代 佛教界의 進化論 受容과 寺刹令〉(《吳世昌教授華甲紀念 韓國近・現代史論叢》, 1995), 248~252쪽.

한 모색에 큰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기독교가 득세하는 상황하에서 불교도는 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진화론적인 인식을 갖고 불교의 개혁과 유신을 적극 주장케 되었다. 그러나 그 대안 모색의 기준이 된 것이 일본불교라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 도성출입금지 해제에 도움을 받았고, 일본 시찰 및 국내에 진출한 일본불교의 포교방법을 접하였던 불교계로서는 일본불교라는 새로운 문명에 강렬한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sup>8)</sup> 이에 일본어 수학, 일본 시찰과 유학, 일본승려 초청, 일본에서의 수계 등 다양한 행적이 노정되었다. <사찰령>에 대한 우호성도 바로 이같은 저변에서 나왔다.

이같은 정황하에서 불교계에서는 점차 불교의 개혁·유신·개선·개량·변혁 등을 주장한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한용운의 《朝鮮佛教維新論》이 1913년에 발간되었고, 權相老가 <朝鮮佛教改革論>을 《조선불교월보》 3~18호에 기고한(1912~1913) 것은 바로 그 정황을 대변하는 것이었다.<sup>9)</sup> 승려와 신도가 연합하여 불교발전을 추구하려는 단체인 佛教振興會가 나온 것도 바로 1915년이었다. 그러나 불교계가 이처럼 불교의 중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합일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일본불교의 모방에 치우쳤으며, 한국불교의 전통계승을 유의치 않는 등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sup>10)</sup>

## 2) 3·1운동과 불교계의 각성

### (1) 3·1운동 참여

거족적인 3·1운동에 불교계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우선 식민통치의 실상 파악,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열의가 불교계에서도 자생하였음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사찰령>체제에서 야기된 온갖 모순은 바로 그 인식의 촉매제가 되었다. 친일주지의 전횡, 사찰 공동체의 파괴, 비판적인

8) 이경순, <1917년 불교계의 일본시찰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2000).

9) 金光植, <근대불교 개혁론의 배경과 성격> (《宗教教育學研究》 7, 1998), 56~60쪽.

10) 이재현, <근대 한국불교 개혁 패러다임의 성격과 한계> (《종교연구》 19, 1999).

청년승려들의 사찰밖으로의 구축, 나약한 불교사업 등은 3·1운동이 발발하였을 때 불교계 동참의 기반이 되었다.

불교계의 3·1운동 참여는<sup>11)</sup> 중앙과 지방으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앙에서의 활동은 한용운과 백용성의 민족대표 33인의 참가와 중앙학림 학생의 〈독립선언서〉 배포활동을 거론할 수 있다. 한용운은 3·1운동 준비단계에서부터 그 운동의 중심부에서 활약하였다.<sup>12)</sup> 한용운의 개입은 그가 이전의 임제종운동 주도에서 나타난 민족불교 지향 정신의 계승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그는 3·1운동 직전에는 《惟心》을 발간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빈번한 접촉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운동을 주도케 되었다. 또한 임제종운동 시에도 한용운과 같은 노선을 경주하였던 백용성도 민족대표에 피선되었다.

3·1운동 이전 한용운과 백용성이 주도한 선종중앙포교당(범어사 포교당)에 출입하였던 불교청년들은 3·1운동이 발발하자 그 운동의 대중화 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3·1운동 직전 한용운은 당시 그를 따르던 중앙학림의 학생들을 초치하여 그간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독립선언서〉 배포 등 운동의 최일선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그 요청을 받은 학생들은 1만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서울 시내와 지방 사찰에 배포·전달하고, 서울 시내에서 만세운동을 마친 후에는 각 연고 사찰을 찾아 지방에서의 만세운동의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당시 그 학생들의 영향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사찰은 범어사·해인사·동화사·김용사·통도사·마곡사 등이었다.<sup>13)</sup> 이들 사찰에서는 그 사찰의學人과 인근의 주민들이 연계하여 만세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일부 사찰에서는 중앙에서의 연락이 없었지만 자생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봉선사와 신흥사에서는 승려·인근 주민·신도들이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만세운동에 나섰다.

11) 安啓賢, 〈3·1運動과 佛敎界〉(《3·1運動 50周年紀念論文集》, 1969), 271~280쪽.

12) 金相鉉, 〈3·1運動에서의 韓龍雲의 役割〉(《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佛敎와 歷史》, 1991).

13) 정광호, 〈일본 침략시기 佛敎界의 민족의식〉(《尹炳錫敎授華甲紀念 韓國近代史論叢》, 1990), 525~528쪽.

한편 한용운과 백용성은 민족대표로 활동하였기에 옥중에 수감되었지만, 일제에 좌절치 않고 민족불교 지향을 끝내 고수하였다. 한용운은 옥중에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여 비밀리에 옥밖으로 전달하였는데, 이것은 상해 《독립신문》에 기고되었다. 백용성은 옥중에서 불교개혁을 고민하였는데, 당시 그의 고민은 출옥 후 전개한 불교의 혁신 및 대중화의 기초가 되었다.

## (2) 독립운동에 동참

3·1운동에 참여한 승려와 불교청년들은 3·1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에 동참하였다. 1919년 4월 23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공한 한성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국민대회의 취지서〉에는 구암사 승려였던 박한영과 월정사 승려인 李鍾郁이 대표로 나온다.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는 승려 출신도 있었는데, 강원도 대표로 피선된 宋世浩는 月精寺 출신 승려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내 특파원으로 활동한 승려도 있었다.

한편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국내 불교계에서는 불교계 대표를 상해에 파견함과 동시에 독립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중앙학림 출신인 金法麟은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사료편찬사업을 추진하자 그 관련 사료를 전달하였다. 불교청년들이 《革新公報》라는 비밀신문을 만들어 국내에 배포한 것도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한 활동이었다. 그밖에 임시정부와 연결된 대한민국청년외교단·대동단·대한독립애국단 등에서 승려 출신인 이종욱·송세호·鄭南用·申尙玩·李雲坡 등의 활동도 유의할 내용이다.

상해에서의 불교계 활동 중 가장 유의할 것은 〈僧侶獨立宣言書〉 제작·배포였다. 1919년 11월 19일에 뿌려진 이 선언서는 대한승려연합회 소속 중견승려 12명의 가명으로 발표된 것이었는데, 일제에 정면으로 항쟁하겠다는 불교계의 독립정신을 구현한 것이었다.<sup>14)</sup> 더욱이 이 선언서 발표를 이면에서 주도한 신상완·白初月·김법린·白性郁 등은 전국 승려를 연합하여 대일항쟁을 추진하려는 결사체인 義勇僧軍을 조직하려다 일제에 피검되기도 하였다.<sup>15)</sup>

14) 金素眞, 《1910年代의 獨立宣言書 研究》(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205~223쪽.

불교도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만주군관학교 입교와 군자금모집 활동으로도 나타났다.<sup>16)</sup> 해인사 출신 승려인 강재호·김봉울과 대둔사 출신 승려인 박영희 등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하였다. 봉천사에서 승려로 활동한 李耘虛와 김성숙이 만주의 서로군정서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한 것도 유의할 내용이다. 그리고 만주지역의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집한 승려의 활동은 전국 사찰을 배경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해인사 출신인 김봉울과 박달준이 경상남북도와 충청북도의 사찰을 순방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일제에 피체되었음이 그 실례이다. 통도사 승려인 金九河는 통도사 운영자금으로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일제에 발각되어 문초를 받았다는 정황도 유의할 수 있다.

### (3) 불교의 자주화와 통일기관

3·1운동 직후 불교계는 3·1운동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의 사찰정책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우선 불교의 종단을 자주적으로 설립·운영하려는 노력과 〈사찰령〉철폐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움직임이 노정되면서 자주적인 종단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통일기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일제의 사찰정책을 부정하면서 대두되었기에 일제 및 친일주지층의 억압과 반발에 직면하였다.

한편 이같은 정황의 추동은 일면 당시 본격화되었던 불교청년운동의 가시화로부터 가능하였다. 3·1운동 이전 임제종운동의 발발 당시부터 불교청년들은 전국적인 단체를 지향하였지만 좌절되었다. 그러나 3·1운동 직후 불교청년들은 전국적인 청년단체조직의 출범을 준비하여 1920년 6월경 조선불교청년회의 창립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불교청년들은 당시 불교계 체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점차 종단 건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기존 연합제규의 보완을 통한 불교계 통일을 지향하였으나 일제가 그를 인정하지 않자, 더욱 본격적인 불교개혁에 나서게 되었다.<sup>17)</sup> 그 개혁을 추진하

15) 金昌洙, 〈日帝下 佛敎界의 抗日民族運動〉(《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韓國佛敎文化思想史》下, 81~89쪽.

16) 정광호, 앞의 글(1990), 528~529쪽.



려는 단체를 별도대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불교유신회였다. 당시 유신회의 강령이 현행제도의 타파와 통일기관의 건설에 있었음은 그를 예증하는 것이었다.

조선불교유신회가 제기한 통일기관의 건설에 대한 논란은 1922년 1월의 30본산주지총회에서 본격화되었다. 그 총회에서는 격렬한 토의속에 새로운 통일기관인 朝鮮佛教總務院의 설립을 결의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 결의에 반발한 20여 본산이 있었기에, 총무원의 출발은 간단치 않았다. 한편 총독부 및 반총무원 진영은 총무원의 노선에 비판·반발하고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재단법인 朝鮮佛教中央敎務院이었다.<sup>19)</sup>

이렇듯이 불교의 자주화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통일기관인 총무원을 설립하였지만 일제 및 현실에 안주하려는 본산들의 반대로 완전한 의미의 불교계 통일은 큰 한계성을 갖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불교유신회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일제의 사찰정책 부정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였으니, 그것이 <사찰령> 철폐운동이었다. 즉 유신회에서는 전국의 승려 및 불교청년 2,284명의 동의를 받은 <사찰령> 철폐를 위한 건백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sup>20)</sup> 그리고 불교통일운동의 틀을 정비한 교헌을 제정하려고 노력도 하였다.

그러나 불교청년들의 이러한 노력은 즉각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제와 친일주지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일 주지의 대표격인 용주사 주지 姜大蓮을 욕보인 鳴鼓逐出 사건은 그 와중에서 나왔다. 또한 총무원과 교무원이 대립하는 정황에서 나온 이른바 각황사문패 철거 및 부작사건에서 빚어진 충돌도 그 정황을 말하는 것이다. 총무원과 교무원의 대립은 1923년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총무원에 참여한 본산에 압력과 조종을 가하여<sup>21)</sup> 점차 총무원의 위세가 약화되었다. 마침내 1924년 3

17) 金光植, <朝鮮佛教靑年會의 史的 考察>(《韓國佛教學》 19, 1994).

18) 《동아일보》, 1922년 1월 10일, <統一機關이 又問題>.

19) 《동아일보》, 1922년 5월 28일, <中央機關은 敎務院>.

20) 《동아일보》, 1922년 4월 21일, <寺刹令의 弊端을 말하고>; 1923년 1월 8일, <寺刹令撤廢에 對하여>.

21) 金淳碩, <1920년대 초반 朝鮮總督府의 佛教政策>(《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1999), 95~96쪽.

월경에 이르러서 총무원이 교무원에 합류하는 형태로 양 진영의 대립은 소멸되었다. 요컨대 교무원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무원은 불교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에 불과하였기에 불교의 자주화 및 통일기관의 지향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었다.

#### (4) 불교전통의 회복

3·1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또 다른 파급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고수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도성출입금지 해제, 일본불교의 영향과 증대, 불교의 대중화 추구 등으로 인하여 점차 불교전통이 무시·배척당하였다. 불교의 개혁·유신이 중시되는 가운데 특히 일제가 한국불교의 전통을 파괴·위축시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불교전통의 회복은 급선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禪學院의 창건이었다.<sup>22)</sup> 1921년 11월 30일에 창건된 선학원은 전통불교 특히 선불교정신의 쇄퇴를 개탄하면서 항일의식을 소유하였던 일단의 승려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선학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은 <사찰령>의 구속을 피하려는 의식에서 나왔는데, 1922년 3월 말 선학원에서는 선풍의 진작과 전국 수좌들의 수행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禪友共濟會가 조직되었다. 각 지방 선원을 회원으로 하여 출범한 공제회는 선학원에 그 본부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제회는 1924년경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어 直指寺로 그 본부를 이전시키기도 하였으나 1926년에는 중도 퇴진하였고, 선학원도 범어사 포교당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전통의 회복과 관련한 움직임은 전통 講院의 부활이었다. 1915년 기존 강원원이 지방학림으로 개편되면서 중단된 강원교육이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재건되었다. 이는 불교개혁의 대세에 의하여 밀려난 전통 및 구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용성이 망월사에서 萬日參禪結社會<sup>23)</sup>를 1925년에 개최하였음도 바로 전통의 회복을 지향한 것

22) 선학원 및 선우공제회의 전모는 金光植, <일제하 禪學院의運營과 性格>(<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1994)을 참고할 것.

23) <萬日參禪結社會 規則, 入會禪衆 注意事項>(<佛敎> 15, 1925. 9), 42~45쪽.

이었다. 그 결사회의 지향은 禪과 律의 균형적인 입규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불교의 침투 등으로 청정한 수행 풍토와 엄정한 계율이 무너져 가고 있었음에 대한 반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백용성이 당시 승려들의 莫行莫食을 강력하게 비판한 심정도 바로 전통의 상실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백용성은 1926년 5월과 9월, 일제당국에 승려의 帶妻食肉을 금하여 달라는 건백서를 제출하였다.<sup>24)</sup> 이는 당시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승려의 대 처식육<sup>25)</sup>을 차단하려는 교육지책이었다. 그러나 백용성의 이 제의는 총독부에서 수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제는 그를 방관하였다. 더욱이 1927년 이후에는 대 처 주지의 취임은 합법화되어 갔다.

전통의 회복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은 禪農佛敎의 실행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白鶴鳴과 백용성이었다. 백학명은 선농불교를 1923년부터 內藏寺에서 실행에 옮겼는데, 그는 불교 개신의 방안으로 半農半禪을 설정하였으며 승려들의 나태와 무노동을 강력히 비판하였다.<sup>26)</sup> 백용성은 1927년부터 경남 함양의 백운산과 만주의 용정에서 선농불교를 실천하였다.<sup>27)</sup> 백운산에서 추진한 華果院과 용정에서 추진한 禪農堂은 그 예증이다. 특히 그는 화과원에서 인근 농민·신도들과 함께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천하였는데, 그의 선농 실행은 승려의 自作自給과 禪律의 실천에서 나왔다.

### 3) 불교자주화의 시련

#### (1) 불교운동의 기반 구축

1928년부터 본격화된 불교운동의 기반구축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불교계 내부의 자기 정비는 이후 1929년의 승려대회 개최의 성공과 불교계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24) 金光植, <1926년 불교계의 帶妻食肉論과 白龍城의 建白書>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11, 1997), 201~206쪽.

25) 정광호, <韓國近代佛敎의 ‘帶妻食肉’> (《한국학연구》 3, 1991), 96~100쪽.

26) 安舟峰, <追慕白鶴鳴禪師> (《佛敎》 62, 1929. 8), 53쪽.

27) 金光植, <白龍城의 禪農佛敎> (《大覺思想》 2, 1999), 73~79쪽.

그러한 움직임에서 최초의 대상으로 주목할 것은 구학계열의 학인들이 추진한 朝鮮佛敎學人大會였다.<sup>28)</sup> 구학 중심의 講院敎育을 개선하려는 李靑潭·이운허 등 일단의 학인들이 주도한 그 대회는 1927년 10월 개운사에서 대회 발기준비회에서 시작되어 1928년 3월 각광사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대회를 주도한 학인들은 학인들의 승가정신 회복과 나아가서는 불교교육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구체시켰다. 당시 그 대회는 전국 강원 대표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인들의 활동 방향, 조직체, 강원교육 개선 방향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학인의 조직체인 학인연맹을 결성하고 기관지 《回光》도 발행하였다. 그후 그들은 2, 3차 학인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당시 교단에 교육제도 혁신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여 교단 차원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켰다.

또 다른 불교청년들의 움직임은 조선불교청년회의 재기 및 朝鮮佛敎靑年總同盟의 창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5년 이후 침체를 거듭하였던 조선불교청년회는 1928년 3월에 재기하였다. 이는 과거 불교청년운동 주도자들의 재기, 복귀, 외국유학 이후의 귀국, 중앙불전의 개교 등의 기반에서 가능하였다. 재기한 조선불교청년회는 우선 불교청년운동의 제반 문제점을 정비하는 가운데 점차 그 조직을 조선불교청년총동맹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불교청년운동의 총 집결체의 위상을 갖기 위한 자기 정비이자 조직 확대였다.

당시 불교청년들은 청년운동의 문제점을 동지연결과 통일정신 부재에서 찾고 그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총동맹을 설정하였다. 이에 총동맹에는 기존 조선불교청년회 조직과 인물뿐만 아니라 구학계열의 학인, 여성불교운동을 담당한 조선불교여자청년회<sup>29)</sup>의 조직과 인물 등이 대거 가세한 조직체로 확대되었다. 이에 기존 조선불교청년회의 산하 조직은 해체하고 총동맹 산하의 동맹으로 가입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교청년운동의 재정비와 교정의 문제점 해소를 고민하였던 일단의 불교청년들의 항일 비밀결사체인 卍黨의 등장과 주도가 개재되었다.<sup>30)</sup> 1930년 5월 창립된 만당은 조학유·김법린·李龍

28) 金光植, 〈朝鮮佛敎學人大會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348~351쪽.

29) 金光植,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30) 金光植, 〈朝鮮佛敎靑年總同盟과 卍黨〉(《韓國學報》 80, 1995), 221~231쪽.

祚 등이 주도하였는데 政敎分立·敎政確立·佛敎大衆化라는 강령을 내세웠다. 불교청년 16명으로 출발한 만당은 한용운을 당수로 여기면서 활동은 비밀리에 추진하였는데, 불교청년운동 및 교단을 움직였던 裏面 단체였다.

한편 이같은 불교청년들의 자기 정비에 맞물려서 나온 단체가 二九五八會였다. 이구오팔회는 중앙불전의 제1회 졸업생들의 모임이었다. 1931년 2월 졸업에 즈음하여 중앙불전 제1회 졸업생들은 ‘조선불교의 前衛’가 될 것을 다짐하며 그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그들은 불교계의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난국에 처할 시에는 언제든지 결합하기로 맹세하였다.<sup>31)</sup> 이같은 이구오팔회의 등장은 만당의 등장, 총동맹의 결성 등 불교 부흥이라는 흐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밖에도 이 시기의 움직임에서 주목할 것은 1931년에 재건된 선학원, 1928년에 개최된 전국포교사대회, 1929년 개운사에 설립된 고등연구원 등이다.

## (2) 승려대회와 종헌

1929년 1월 3~5일, 각황사에서 개최된 조선불교선교양종 僧侶大會는 일제 하 불교운동선상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이는 1920년대 초반이래 불교계의 숙원이었던 불교통일운동의 일단락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제 <사찰령>은 한국불교계를 30본산으로 분열·분리·개별화시켜 통치한 근거였다. 이에 불교계는 <사찰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찰령>에서 규정한 틀을 부정하고 불교계 전체의 운영·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1920년대 전반기에 그 대안을 통일기관 수립에 두고 치열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끝내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에 불교계 통일운동은 1920년대 후반에서도 역사적인 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불교계가 통일적인 기관, 운영내규, 자율적인 틀이 부재하였기에 불교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운동에 나설 기반조차도 마련치 못하였음은 당연하였다. 이에 1928년부터 불교계에서는 이를 재인식하는 가운데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모색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들은 불교청년

31) 金光植, <二九五八會考>(《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 韓國民族運動史研究》, 1997), 335~361쪽.

들이었다. 특히 백성옥·김법린으로 대표되었던 그들은 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기에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배경에서 1928년 11~12월 서울에서는 중앙기관 및 敎憲(종헌)을 조직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가시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승려대회를 통하여 불교의 통일적인 기반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전개되었다. 승려대회 발기대회, 승려대회 준비위원회 등은 바로 그 사전 모임을 말한다. 마침내 1929년 1월 3일 각황사에서 역사적인 승려대회<sup>32)</sup>가 개최되었다. 전국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107명이 참가한 그 대회에서는 종헌, 중앙교무원칙, 교정회 규약, 범규위원회 규칙, 종회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상징·대표하는 교정 7인과 중앙교무원의 간부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宗憲(12장 31조)의 제정과 반포였다. 종헌은 불교계의 헌법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 통일운동의 틀과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33)</sup> 이에 불교계는 종헌에서 규정한 내용을 실천하면 되었다. 그리고 주목할 또 하나는 종회와 중앙교무원의 설립이었다. 종회는 불교계의 대표·입법기관으로, 중앙교무원은 행정·실무기관으로 지칭되었다. 이로써 불교계는 통일운동 실행의 조건을 구비하였던 것이다.

대회 이후 불교계는 종헌에서 규정한 기관의 운영과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통일운동을 실천하였다. 그 움직임은 종헌실행운동으로 명명되었다. 그리하여 대략 1930년경까지는 운동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1931년 이후부터는 종헌 실행에 차질이 생겼다.<sup>34)</sup> 그 같은 차질은 불교계 내부에 종헌 실행을 저지·반대·비협조하였던 세력과 본산이 존재함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그것은 종헌이 일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찰령>과 寺法만 유의한 행태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나악한 자주주의 그 자체였다. 종헌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맹서를 불전 앞에서 하였지만 시간이 흐

32) 승려대회의 개요 및 성격에 대해서는 金光植, <朝鮮佛教禪敎兩宗 僧侶大會의 개회와 성격>(《한국근현대사연구》3, 1995)을 참고할 것.

33) 金光植, 위의 글, 227~229쪽.

34) 韓龍雲, <朝鮮佛教를 統一하라>(《佛敎》84·85합호, 1931. 7), 2~5쪽.

르면서 그 기억과 의식은 퇴색하였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종헌 실행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sup>35)</sup> 사법개정운동과 종헌반포기념일 제정은 바로 그 구도에서 나왔다. 사법개정은 종헌과 사법을 일치시키자는 것이었고, 기념일 제정은 매년 1월 4일을 종헌기념일로 정하여 의식을 갖음으로써 종헌의 정신을 계승·홍보하자는 것이었다.

한편 이같은 종헌 실행을 둘러싸고 나타난 현상은 본산간의 대립과 갈등의 노골화였다. 종헌 실행을 찬성하는 본산과 그 실행을 반대한 본산간의 대응이 보다 확연하여졌다. 기실 이같은 모순은 <사찰령>에서 규정한 본산체제에서부터 잠재되어 온 것이었다. 본산체제로 20여 년을 흐른 결과 통일적인 움직임의 부재하에 본산만을 위한 사업과 이익에만 유의한 결과였다. 그런데 그 모순이 1930년대 전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연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종헌의 소멸로 이어졌다. 1934년경에 접어들면서 종헌과, 종헌에서 규정한 기관은 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불교계 곳곳으로 파급되었다. 일시적으로 중앙불전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빌미로 매각을 검토·결의하였던 것도 바로 이 사정에서 기인하였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잡지인 《불교》가 휴간·복간을 거듭한 것, 불교계가 경영하였던 普成高普가 고계학원으로 매각된<sup>36)</sup> 것도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본산 간의 대립은 이른바 지방색도 일정 부분 내재하였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범어사·해인사·통도사가 慶南3本山協議會를 설립·운영하였음은 그 단적인 예증이다. 이에 여타 지방의 본산들도 그에 대응하여 유사한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나아가서 이같은 종헌의 상실과 본산의 대립은 불교계 전체의 부진과 위축을 야기하였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불교청년운동의 부진, 종단·敎政의 상실 등이 불교계에 자리잡았다. 이는 곧 불교

35) 金光植, <1930년대 불교계의 종헌 실행문제>(《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366~400쪽.

36) 金光植, <일제하 佛教界의 普成高普 經營>(《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1998), 334~346쪽.

자주화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제 공황, 소작쟁의 급격한 증대, 反宗教운동 득세라는 조류가 불교계에 거세게 다가왔기에 불교계는 내외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였다.

#### 4) 조계종의 성립과 식민지체제에 좌절

##### (1) 총본산건설운동과 조계종

불교의 자주화를 통하여 통일운동을 지향한 승려대회에서 제정한 중헌은 불교계 내부의 모순과 <사찰령>의 억압을 극복치 못하고 소멸되었다. 다만 중헌 실행을 모색하는 가운데 등장한 것은 그 대안으로서의 총본산안과 교무소안이었다. 전자는 31본산중 한 본산을 선택하여 그 본산에게, 후자는 중앙에 교무소를 설립하여 불교계 즉 31본산 전체를 통할할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이같은 고민은 통일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과 대안의 모색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1935년 중반이었다. 그런데 그 이행은 기이하게도 일제가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心田開發政策<sup>37)</sup>과 맞물려서 나왔다. 일제가 지시한 종교계의 심전개발의 추진지침에는 상호연락을 통하여 실효를 거두라는 내용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1934년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기리기 위해 재한 일본불교에서 건립한 博文寺의 주지가 한국불교 장악의 근거처인 총본산을 박문사에서 담당하겠다는 비공식적인 건의를 한국불교계에서 파악한 것과 유관하였다.<sup>38)</sup> 요컨대 일본불교가 한국불교를 관장하려는 의도를 분쇄하겠다는 의식이 작용한 가운데, 일면으로는 심전개발정책에 협조하면서 總本山建設運動은 움트고 있었다.<sup>39)</sup>

이러한 배경하에 31본산주지들은 주지총회를 통하여 불교계 대표기관 설

37) 韓巨熙, <1935~37년 일제의 '心田開發' 정책과 그 성격> (《韓國史論》 35, 1996), 138~163쪽.

38) 金法麟, <韓國佛教의 抗日鬭爭記> (《대한불교》, 1963년 8월 1일).

39) 金光植, <日帝下 佛教界의 總本山建設運動과 曹溪宗>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1994), 300~308쪽.



립을 결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불교선교양종 宗務院을 설립하고, 심전개발 기념사업으로는 각황사의 재건축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는 1936년 말에도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았다. 총본산의 건설사업은 1937년 2월경 경남3본산중무협의회, 전남5본산협의회, 경북불교협회의 대표자가 불교 발전을 위하여 총본산 건립을 결의하고,<sup>40)</sup> 그 결의가 주지총회에 상정되면서 가속화되었다. 마침 일제 총독이 주재한 주지총회에서 일제도 그를 적극 후원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되는 가운데 총본산 건설운동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1938년 10월 10일에는 총본산 건물인 대웅전을 준공하였다. 이 대웅전에 사용된 목재는 정읍에 있었던 普天敎의 十一殿의 자재였다.

그 이후에는 그 총본산의 寺格을 검토하여 북한산의 태고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1940년 5월에는 太古寺로 명명하였다. 또한 총본산의 사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sup>41)</sup> 제기된 것은 이번 기회에 조선불교의 종명을 역사성 있는 것으로 재부여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41년 4월 23일, 총독부령 125호의 <사찰령>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조선불교 曹溪宗과 太古寺法이 등장하였다. 태고사 사법에는 31본산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sup>42)</sup> 이로써 한국불교는 조계종이라는 새로운 종단체제를 수립하였으며, 31본산 즉 불교계 전체를 통할할 총본사인 태고사가 정식으로 성립하였던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불교계 통일기관이 수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당국도 정식으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총본산 건설, 태고사 인가, 태고사 사법 제정 등에 일제의 후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그 요인이 이후 조계종단이 일제의 군국주의 통치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범한 조계종단은 태고사법에 의거 태고사에 종무기관인 종무원을 설립하고, 종단의 대표인 교정에 方漢岩을, 종무총장에 이종욱을 선출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40) <全南·慶南·慶北 各本山當局者會合懇談>(《慶北佛教》10, 1937. 4).

41) 卍海, <總本山創設의 再認識>(《佛教》신17집, 1938. 11), 2~5쪽.

42) <朝鮮佛教曹溪宗總本寺太古寺法>(《韓國近現代佛教資料全集》67, 1996), 195~221쪽.

## (2) 군국주의 체제에 좌절

불교계가 일제 식민통치에 좌절·훼절·타협한 양상이 노골적으로 등장한 것은 조계종단 출범 이후였다. 사실 그 같은 성향은 국권상실 이후 〈사찰령〉체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성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35년부터라고 하겠다. 일제는 만주사변 발발 이후 중국침략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조달뿐만 아니라 전쟁의 후방에 해당되는 조선농촌의 재정비를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농어촌진흥운동과 心田開發운동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심전개발운동은 곧 한국인의 정신을 통제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현실에 안주케 하면서 저항정신의 상실을 기도한 것이었다.

일제가 추진한 심전개발정책에 불교계는 적극 참여하였다. 이는 이 기회를 사찰 정화의 기회로 판단했고, 심전은 불교사상의 근원인 마음과 동일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요컨대 불교 부흥의 기대에서 심전개발에 동참하였다. 중앙 및 지방 불교계에서는 일제의 권유에 의하여, 아니면 자발적으로 심전개발과 관련한 강연회를 수없이 개최하였다. 또한 불교 지식인들은 심전에 관련된 저서를 발간하여 그 사업에 동참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심전개발 강연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지역과 사찰이 없을 정도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불교계의 일제에 대한 협조와 타협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가입, 교무원의 시국강연회, 출전부대 송영, 위문금 전달, 무운장구 기원법회 개최, 황군위문사 파견, 국방헌금 모금 및 전달, 銃後報國強調週間 행사 개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가입, 황국신민서사의 제창 등은 당시 그 사정을 말해주는 정황들이었다.<sup>43)</sup> 그리하여 당시 전국의 사찰과 신도들은 위와 같은 식민통치의 강요와 억압에 무관치 않을 수가 없었다.

불교계의 그 같은 좌절은 일제가 1941년 12월에 자행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 불교계가 가혹한 군국주의 통치에 의하여 수행한 양상 또한 다양하였다. 군용기 헌납, 전시실천요목과 전승기도 축원문 낭

43) 임혜봉, 《친일불교론》 상(민족사, 1993), 167~259쪽.

독, 임전대책협의회 가담, 조선임전보국단 가입, 사찰의 금속류 헌납, 국방헌금, 일본어보급운동, 시국 순회강연회, 징병 권유 및 협조, 근로보국대 결성, 창씨개명 협조 등이었다.<sup>44)</sup> 그런데 불교계의 이같은 일제의 군국주의 통치에 좌절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간혹 불교의 지성인이라 치칭되는 인물들이 적극적인 시국 협조의 발언 및 기고를 한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1920년대부터 식민지 불교정책을 극복키 위한 치열한 활동을 추진한 불교청년운동의 일부 인물들도 이 시기에 와서는 일제에 타협, 좌절된 행적을 보였다.

그러나 가혹한 식민통치 기간중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수호하려고 노력한 일단의 승려들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학원 계열의 수좌들의 활동이다. 1926년에 범어사 포교당으로 용도 변경된 선학원은 1931년 金寂音에 의하여 재기하였다. 재기한 선학원은 선의 대중화와 선학원 재정기반 구축에 유의하였는데, 그 결실로 1934년 12월에는 재단법인 朝鮮佛教禪理參究院으로 전환하였다. 그후 선리참구원 계열의 수좌들은 일본 불교의 침투 및 식민지 불교정책으로 인하여 폐쇄한 한국불교의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고뇌의 산물로서 朝鮮佛教禪宗 宗憲을 선포하였다.<sup>45)</sup> 이 종헌 선포는 청정한 교단의 전통을 사수하고 부패의 정화를 기하려는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전통불교의 회복, 식민지불교에의 저항을 지향하였다. 그 결과 기존 선학원은 중앙선원으로 변경, 중무원 설립과 운용, 수좌대회의 개최 등을 기하면서 전통 수호에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선원의 증가, 참선 수좌의 증대가 나타났다. 이러한 기반하에서 1941년 2월에는 청정승풍과 전통선맥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학원에서 遺敎法會를 개최하였다.<sup>46)</sup> 宋滿空·박한영·河東山·이청담 등 승려 수십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법회에서는 法網經과 曹溪宗旨에 대한 설법이 이루어졌다. 이는 군국주의 통치가 기승을 부리던 당시에 개최되었다는

44) 임혜봉, 위의 책, 325~450쪽.

45) 金光植, 〈朝鮮佛教禪宗宗憲과 首座의 現實認識〉(《建大史學》9, 1997), 288~292쪽.

46) 金光植, 앞의 글(1994b), 303~304쪽.

점에서 일제하 불교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전통 선맥을 계승하려는 수좌들의 노력은 1942년 한국 근대불교의 중흥조로 일컫는 宋鏡虛의 문집인 《鏡虛集》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우리 功勞者의 表彰은 우리 손으로”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그 발간에는 전국의 청정 수좌 40여 명과 전국의 선원이 동참하였다.<sup>47)</sup> 이렇듯이 선학원 계열의 수좌들이 전통불교의 맥을 계승하려고 노력한 고뇌와 산물은 이후 8·15해방 이후 교단 정상화의 값진 밑거름이 되었다.

〈金光植〉

## 4. 유 교

### 1) 일제강점기의 유교문제

조선사회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국권을 강탈당하고 식민지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의 유교지식인은 안으로는 시대상황에 대한 대응자세에 따라 ‘보수적 도학자’와 ‘진보적 개혁 사상가’로 나뉘었으며, 밖으로는 일제가 식민지 통치정책의 일환으로 유교전통의 사회기반을 전반적으로 변혁시키며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교인의 항일의식이 다양하게 표출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일제의 유교탄압정책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수행되어 갔다.

유교인의 항일운동은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상소하거나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던 국권수호운동에서부터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서 국권회복을 추구하는 독립운동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다. 조선사회의 정통이념으로서 유교는 1910년 이전까지 항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국권상실의 충격과 사회체제의 전면적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사회적 권위를 상실하고 공동체의 결속력도 약화되면서 그 역할도 급격히 쇠퇴하는 과정을 겪었다.

47) 《鏡虛集》(極樂禪院, 1990), 4~5쪽.

그러나 儒林들은 조직화된 단체활동에서는 매우 미미하였으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저항하며,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병자수호조약〉(1876) 이후로 을미사변(1895)·〈을사늑약〉(1905)·한일합병(1910) 등 일본의 조선침략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유림들은 상소를 올리거나 義兵을 일으키고, 또는 개인적인 결의로서 자결을 하여 大義를 밝히는 등 가장 강력하게 저항운동을 지속하였다. 이처럼 일제의 침략과 탄압에 저항하면서 유교전통의 질서를 지키려는 ‘도학전통의 보수적 유림들’이 수구세력으로서 유림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조류의 대세를 간파하고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던 개화사상가들이 출현하고, 이어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적 각성을 추구하던 애국계몽사상가들이 활발하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유교지식인’들로서 소수의 지식인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 개화사상 내지 계몽사상을 표방하는 진보적 사회개혁운동가들 사이에는 이미 유교이념의 기반을 탈피하고 유교전통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인물들이 점차 증가해갔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의 보수적 유교인이 소수의 진보적 유교인의 활동을 외면함으로써 유교집단의 전체적 보수성과 시대적 대응력의 약화에 따라 유교인의 사회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갔다. 사회개혁의 추진이 곧 당시 침략세력으로서 서구화를 추진하던 일본의 모방과 수용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경계하여 유교의 개혁의식은 침체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서구적 근대화로 개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소극적 방어자세는 마침내 수구이식의 폐쇄화와 더불어 쇠퇴과정을 초래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 유림의 의병운동이 철저히 분쇄당했고, 국권상실의 충격으로 대부분의 도학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숨어 전통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유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쇠퇴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의 문화적 기반은 유교전통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소수의 선비들은 강한 신념의 항일의식으로 국권상실이후에도 민족자주의식과 독립운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유교의 독립운동은 한말의 항일국권수호운동과 연장선상에 있

으면서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전환과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sup>

일제강점기에 유교의 저항활동과 일제의 탄압과정은 크게 3단계로 시대구분이 가능하다. ① 1910~1918년 사이는 합병의 충격과 일제의 교활한 회유정책, 혹독한 탄압으로 유교인의 저항운동이 국내에서의 소극적 저항에서 망명을 통해 적극적 독립운동으로 이전하는 양상을 보였던 ‘망명과 회유정책의 시기’라 할 수 있다. ② 1919~1930년 사이는 3·1운동에 자극을 받아 유림의 독립청원운동으로 儒林團사건이 일어났지만, 국내에서는 일제의 동화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림의 소극적 저항운동과 병행하여 유교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유림의 독립청원과 유교개혁운동의 시기’라 할 수 있다. ③ 1931~1945년 사이는 일제의 동화정책이 광범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유림의 소극적이지만 끈질긴 저항이 지속되었던 ‘동화정책과 비타협적 저항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첫 단계로서 1910년 조선왕조(대한제국)의 멸망과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선포되었을 때 유림은 극도의 통분과 비탄에 잠겼다. 당시에 나타난 저항의 행동양상은 자결을 하거나 입산하여 은둔하거나 만주·러시아·중국 등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작위나 은사금을 명목으로 유림지도층에 대한 회유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거부로 충돌하였던 것이 이 시기의 뚜렷한 현상이다. 둘째 단계로서 3·1운동(1919)에 자극을 받아 전국의 유림들로 조직된 유림단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한 유림단 사건(巴里長書事件)이 중요한 계기를 이루고 있다. 일부의 진보적 유림들이 1927년 설립된 新幹會에 참여하는 등 사회단체를 통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아직도 유림들의 사회활동이 미약하지만 존속하고 있었다. 셋째 단계로서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일어나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유교의 조직적 활동은 거의 붕괴되었지만, 일제의 동화정책에 대한 거부를 통해 저항을 지속하고 있었다.

1) 韓末(1876~1910) 유교의 국권수호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금장태, <종교를 통한 국권수호운동－유교>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493~542쪽.

일제강점기에 유교인은 초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저항운동에서 후기로 갈수록 유림조직이 와해되자 개인의 비타협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향촌사회의 유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유림세력의 저항적 신념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유교조직 가운데는 일제의 회유에 끌려 들어가 친일단체로 전락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 저항의식은 온갖 어려운 시련을 견디며 확고한 신념을 발휘하고 있었다.

## 2) 유림의 항일운동과 일제의 탄압

### (1) 순절과 망명의 항거

국권상실의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유림들이 대응한 태도는 망국의 책임에 대한 통감으로 비분강개하여 생명을 버려 節義를 지키는 殉節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개화사상가요 시인이었던 黃 玹(호 梅泉)은 합병의 소식을 듣자 그 다음날 絶命詩 4首와 유서를 남겨놓고 아편을 먹고 자결하였다. 그의 유명한 절명시에는 역사를 아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망국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그가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는, 선비를 5백년간 걸러낸 국가가 망하는 날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성품을 보존하고 독서로 체득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결행한다는 절의의 신념을 밝히고 있다. 당시 상당수의 유교지식인이 황 현의 경우처럼 절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sup>2)</sup>

여기서 일제의 침략으로 국가가 멸망하는 현실 앞에서 ‘자결’을 통해 지조를 지키고 의리를 천명하고자 하는 유교지식인의 대응방법은 많은 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자결하여 일제의 침략이 불의함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일제에 직접 손상을 입힐 수 없고, 집단적인 행동화로 이끄는 힘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2) 《騎驢隨筆》에는 ‘庚戌合邦殉節’의 인물로 21명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남인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念齋野錄》의 ‘合邦顛末’에는 32명이 자결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朴殷植의 《韓國痛史》 제3편 58장, ‘日人併韓之最終’에서는 순절한 인물 28명을 들고 있다.

있다. 실제로 을미의병(1895)이후 유림들의 의병운동이 일제의 우세한 무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붕괴되어 갔다. 따라서 합병이후 국내에서 ‘의병’운동은 급격히 붕괴하고 극소수의 ‘순절’과 상당수의 ‘망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 ‘自靖’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일제의 침략과 압박이 가중되면서 을사늑약(1905)과 경술합병(1910)을 전후한 시기에 상당수의 유림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자신의 지조와 전통의 예법을 지킨다는 명분과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기지를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만주·러시아령 연해주지역·중국대륙 등으로 망명을 갔다. 이 시기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벌였던 유교인 가운데는 을미의병을 비롯하여 의병에 참여하였던 도학자들과 애국계몽사상가로서 새로운 항일투쟁의 기지를 찾아 망명하거나,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들도 다수 있었다.

정통 도학자 출신으로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도학자 柳麟錫(호 毅菴)과 李承熙(호 韓溪)를 들 수 있다. 提川의병장이었던 유인석은 1896~1897년과 1898~1890년 사이에 만주로 두 번 망명하였고, 1907년 高宗이 일제에 의해 퇴위당하자 해외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러시아령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 유인석은 중화의 문화를 지키다가 생명을 마칠 것을 주장하는 ‘守華終身’의 의리를 제시하였으며, ‘중화문화를 보존하고’(保華), ‘중화문화를 수호하고’(守華), ‘중화문화를 지키다 죽는다’(殉華)는 세 가지 방법을 ‘處義’의 3조목으로 제시하였다.<sup>3)</sup> 이처럼 도학자로서 유인석의 국가의식은 바로 문화의식으로서의 中華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華夏문화의 지향은 당시 유림의 독립운동에 나타난 국가의식의 특성이지만, 시대조류에 상반되어 대중적 설득력이나 행동으로 추진하는 힘이 미약했다.

李承熙(호 韓溪)는 乙巳五賊을 討罪하고 국채보상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투옥되기도 하였고, 1908년 블라디보스톡에 망명하였다가 1909년 중국~러시아 접경지대인 만주의 密山府에 이주하여 망명동포를 모아 한국을

3) 柳麟錫, 〈處義有三〉(《毅庵集》, 권 36).



부흥시킬 독립기지로서 ‘韓興洞’을 개척하여 활동하였다. 독립기지 건설의 목적은 망명한 동포를 조직화함으로써 생활기반을 확보할 뿐 아니라 민족의식을 강화하고 항일독립운동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시 만주 등지에서는 무수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여기서 유림의 독자적 조직은 초기에 의병조직의 연장선에서나 망명한 동지들의 결집을 통해 상당수 나타났다. 그 밖에 이승희에 의해 중국 孔敎會의 支部로서 만주지역(東三省) 韓人孔敎會가 조직되었다.<sup>4)</sup>

유교인으로 애국계몽운동을 하던 인물로서 해외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인물에는 朴殷植·申采浩·李相龍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청년기에 유교교육을 철저히 받은 인물들이지만,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교적 신념을 점차 상실해 갔다. 그들은 한때 전통유교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유교적 신념을 추구하였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보수적 폐쇄성에 젖어 있는 유교조직을 통합하여 독립운동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기한다. 기독교·천도교·대종교 등 유교 이외의 종교단체가 좀더 활력있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비해, 유교단체의 개혁의지와 조직적 결속이 갈수록 약화되어 해외독립운동은 점차 소수 개인적 인물의 활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 (2) 유림의 독립청원활동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에 따라 巴里講和會議가 열리게 되고 이 시기에 미국 윌슨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자극을 받아, 한편에서는 이 강화회의에 독립을 호소하는 방법과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외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 추구되었다. 국내에서 각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 계획하고 거국적으로 참여한 독립만세사건인 1919년 3·1운동의 충격으로 유림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분의식과 정통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유림들로서 여러 계층의

4) 孔敎會에 더불어 만주지역에는 復皇團·保皇團·鄉約團·大韓獨立團(紀元獨立團)·忠烈隊 등 유림들이 참여한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단체들은 舊王朝를 회복하려는 동기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1968), 176~189쪽.

타종교인과 공동으로 모의하는 3·1운동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sup>5)</sup> 그러나 실제로 만세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는 상당수의 지방 유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이처럼 3·1운동의 발생시기에서 유림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郭鍾錫과 金昌淑 등은 서울의 만세운동이 유림을 제외하고 일어난 사실을 아쉬워하여 유림이 독자적인 행동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그 활동과제는 파리강화회의에 우리의 독립요구를 밝히고 독립을 청원하는 것이었다.

곽중석을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長書에 명망있는 영남유림들이 다수 서명하였다. 장서는 문명국인 한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만국평화회의가 지지해 줄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김창숙이 이 장서를 해외로 가져가는 책임을 맡아서 상경하였을 때 호남의 田 愚(호 良齋)는 참여를 거부하였으나, 호서지방의 金福漢(호 志山) 역시 여러 선비들의 연명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장서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서로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그리하여 영남에서 작성한 장서를 공동의 문서로 채택하여 137명의 유림대표가 연명한 이른바 儒林團의 ‘巴里長書’를 김창숙이 휴대하여 상해로 가져갔다. 상해에서는 이 장서를 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있는 金奎植에게 우송하여 제출하게 하며, 영문번역과 국문번역을 수 천 부 인쇄하여 각국대표와 외국의 공관을 비롯하여 국내의 각 향교 등 여러 기관에 우송하였다. 이 사건은 ‘파리장서사건’ 혹은 ‘제1차 儒林團事件’이라 일컬어지며, 합방이후 유림의 가장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행동화라 할 수 있다.

해외에 망명하여 상해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김창숙은 중국의회 의원들의 한국독립후원회를 조직하거나 中·韓인사들을 결속하는 中韓互助會를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돕고, 廣東의 공교회 회장 林福成의 후원을 받아 《四民日報》를 발행하며, 한때 북경에서 신채호가 경영하는 잡지 《天鼓》의 편집에

5) 허선도, 〈三一運動과 儒敎界〉(《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286쪽.

6) 허선도, 위의 글, 286~287쪽.  
《매일신보》, 1919년 6월 17일.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는 청년결사대를 조직하고 북경으로 가서 義烈團員 羅錫疇 등을 국내에 파견하여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김창숙은 慶北儒林團頭領 겸 義烈團顧問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가 국내에서 유림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던 사건이 탄로되어 많은 유림들이 일제에 검거되면서 이른바 ‘제2차 유림단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3·1운동이 거족적으로 전개되자 그 동안 일제와 타협하였던 유교지식인들도 자신의 지난 행적을 청산하고 독립을 주장하는 대열에 나섰다. 그 대표적 인물이 金允植(호 雲養)과 李容植(호 剛菴) 등 舊王朝의 원로대신들이다. 이들은 3·1운동 직후인 3월 28일, 두 사람의 연명으로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조선총독 및 동경시내의 신문사 등 주요 기관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장서를 보냈다. 이들은 이 장서를 발송한 직후 검찰과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 동안 일제로부터 받았던 작위와 직책을 박탈당하고 징역 1~2년의 刑을 선고받았다.<sup>7)</sup> 한문체의 850자 정도의 이 장서는 한국의 모든 백성이 독립을 부르짖는 것이 人心이며 天命임을 강조하고, 이런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을 따라서 한국의 독립을 공식승인하고 공평한 정책으로 세계에 표명하고 각 조약체결국에 통고하도록 요청하였다.<sup>8)</sup>

### 3) 계몽운동과 유교개혁운동

#### (1) 계몽운동과 민족의식 고취

일제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서 학교교육에서도 우리 말을 비롯한 우리 역사와 우리 지리에 관한 교육도 배제하였으며, 식민지사관에 의하여 《조선사》 38권을 편찬하는 등 우리 역사를 왜곡시킨 역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민족문화를 말살하려고 집요하게 기도해왔다. 그러나 이에 맞서 당시의 독립지사는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여기에 유교지식인들은 수구적 도학자나 진보적 계

7) 허선도, 위의 글, 299쪽.

8)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朴殷植全書》上), 95~97쪽.

몽사상가의 양쪽에서 각각의 시각에 따라 민족사연구와 저술에 많은 업적을 쌓아갔다.

우리 역사를 강한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으로 저술하는 작업은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계몽사상가 내지 독립운동가들에서 볼 수 있다. 박은식은 합방전에 언론활동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던 양명학자이며,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방법으로서 일본의 국권침탈과정과 망국의 통분을 서술한 《韓國痛史》(1915)와 합방후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과정을 서술한 《獨立運動之血史》(1920)를 저술하였다. 신채호는 유학자로 출발한 계몽사상가요 독립운동가로서 합방이전에도 을지문덕·최영·이순신 등 민족영웅의 전기를 써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지만, 1910년 중국에 망명한 뒤로 역사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민족주의사관을 확립하여 우리 민족의 근원인 고대사연구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 사이에 《朝鮮上古史》·《朝鮮上古文化史》·《朝鮮史研究草》 등을 저술하여 국내 신문에 연재함으로써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었다. 李建芳의 문인인 양명학자 鄭寅普는 1935년 《동아일보》에 〈5千年間 朝鮮의 일〉이란 제목으로 연재하였던 글인 《朝鮮史研究》를 통하여 치밀한 고증으로 우리 역사를 통해 ‘조선의 일’을 일깨워주는 민족사관을 전개하였다.<sup>9)</sup>

金澤榮(호 滄江)은 계몽사상가와 전통도학자의 양쪽과 깊은 교유를 맺고 있었던 유교지식인이었으며, 한말에 史官으로서 《東國歷代史略》(1899) 등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1905년 망명하여 上海·通州 등에 머물면서 우리 역사서의 편찬에 주력하여, 《韓史纂》(1918)·《韓國歷代小史》(1922) 등을 저술하고, 《校正三國史記》(1910)·《新高麗史》(1924) 등 우리 역사의 고전을 간행하였다. 그는 《韓史纂》에서 조선의 太祖가 고려의 두 王(禔王·昌王)을 시해하고 恭讓王의 왕위를 찬탈하였다고 기술하는 등 君主시대를 넘어서서 공화제에 입각한 사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柳必永(호 西坡) 등 보수적 도학자들의 격렬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sup>10)</sup> 또한 柳寅植(호 東山)은 우리 역사를 민

9) 愼鏞度, 《朴殷植의 社會思想研究》(서울대 출판부, 1982), 262~311쪽.

———,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한길사, 1984), 58~62쪽.

10) 柳必永은 〈記金澤榮史纂誤〉를 지어 김택영의 《韓史纂》에서 太祖와 世祖를 왕

족사관에서 서술한 《大東史》를 저술하여, 단군조선이후 고려이전까지 우리 역사를 南朝와 北朝로 파악하고, 조선의 판도로 만주대륙을 포함시키며, ‘倍達族’을 조선족·북부여족·예맥족·옥저족·숙신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확대된 민족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김택영의 《한사계》에 내포된 사대주의적 요소를 조목별로 비판하는 〈金史記誤〉를 저술함으로써 자신의 민족사관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하고 있다.<sup>11)</sup>

도학자들은 민족의식보다는 의리정신에서 민족사의 서술과 일제에 저항한 節義의 인물들에 관한 전기를 저술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鄭衡圭(호 蒼樹)는 망국의 통분 속에 우리 역사를 野史로 서술하여 민족적 義氣를 고취하고자 하여 《韓史抄輯》을 편찬하였으며, 또한 〈乙巳殉國諸公傳〉·〈丁未三密使傳〉·〈庚戌殉義諸公傳〉·〈韓末殉國烈士諸公傳〉 등 항일 의사들의 전기를 기록하여, 순국정신을 표양하고 있다. 또한 金澤述은 金喆中이 편찬한 《朝鮮史》를 검토하고서 〈觀朝鮮史〉(1943)를 썼는데, 제목이 ‘韓史’라 하지 않고 ‘朝鮮史’라 한 것부터 식민사관의 표현이라 규정하여 비판하고 있다.<sup>12)</sup> 河謙鎭(호 晦峰)은 〈國性論〉(1921)을 지어 우리의 민족문화가 지닌 본질인 國性을 ‘禮義’로 제시하였으며, 〈安義士傳〉·〈露梁忠烈祠記〉·〈名將列傳〉·〈勇將列傳〉 등 안중근을 비롯하여 외적의 침략을 막아낸 명장과 용장 등 민족적 영웅들의 전기를 저술하여 민족기상과 항일의지를 진작하고자 하였다. 그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東儒學案》(1943)을 완성함으로써 한국 유학사를 체계화하여, 민족문화의 유산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업적을 남겨주고 있다.

李炳憲(호 眞菴)은 康有爲의 영향아래 今文經學의 연구와 孔敎운동을 전개한 인물로서, 《歷史敎理錯綜談》(1921)을 지어 舜이 동이족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여진족의 金과 淸, 몽고족의 元 등이 중국을 지배하였던 사실을 모두 백

---

위찬탈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先王을 모욕하는 것이라 반박하여 道學전통의 史觀을 제시한다.

11) 금장태·고광직, 《儒學近百年》(박영사, 1984), 419쪽.

12) 당시 道學者들 사이에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 국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李震相과 田愚의 학맥 안에서는 ‘韓’이란 호칭을 쓰고, 李恒老의 학맥 안에서는 ‘朝鮮’이라고 썼다.

두산에서 발원하는 우리 민족이 중국을 4차례 지배한 것으로 보는 ‘大民族史觀’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의 李源台도 대민족사관에 근거하여 《倍達族疆域形勢圖》를 지어 만주와 요서지역 및 중국 동해안에 걸치는 배달족의 영역을 지도로 제시하고 있다. 朴章鉉(호 中山)은 민족의 자기성찰과 사상의 진보를 위해 史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海東春秋》·《海東書經》을 저술하였다. 또한 우리 역사를 經傳의 체제로 재구성함으로써 민족사를 경전과 일치시키는 독특한 작업을 하였으며, 《朝鮮歷代史略抄》·《野史》 등의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편찬작업을 수행하였다.

유림으로서 민족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을 전개한 경우는 그 운동영역이 매우 한정되어, 주로 전통적 국가관에 의한 의례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교육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로 치우쳤다. 의례를 통한 민족의식의 표출은 주로 고종과 순종의 죽음이라는 기회에 거국적 의례로서 國喪에 상복을 입고 哭班에 참여하는 전통을 따름으로서 前 왕조에 대한 추모와 그 遺民으로서 자각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3·1운동의 시기로 고종의 因山日을 잡았던 것도 백성들이 몰려드는 기회이기 때문이었다. 1926년 순종의 죽음에도 유림들은 상복을 입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함방으로 국가의 멸망을 보고서 상당수의 유학자들이 상복을 입거나 白笠을 쓰고 다님으로써 국가의식을 각성시켰다.<sup>13)</sup>

유림은 전통적으로 후진교육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왔지만,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서도 대부분 전통의 한학과 유교경전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의리정신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민족독립의식을 강화하는 데에는 매우 미약하였다. 당시의 많은 유학자들은 자신의 서재나 서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엄격한 學規로 학풍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安圭容의 〈竹谷精舍講規〉에서는 “士族이나 庶類의 신분을 막론하고 배움에 뜻을 둔 자는 모두 입학을 허가한다”고 규정하여 신분차별의 폐지를 선언하기도 한다. 金澤述(田 愚 문인)은 萬宗齋·東谷書齋 등에서 강학을 하면서 엄격한 학규를 제정하고, 학생들의 수확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分班하며 각 반에 原

13) 고종 승하시 白笠을 썼던 吳駿善은 임금과 국가에 대한 춘추의리에 따라 白笠을 쓰고 일생을 마쳤다.

課와 間課의 과목을 설치하는 체계화된 교과과정을 설정하였다.<sup>14)</sup> 이에 비해 유인식은 전통 유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유교사상의 근대적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1907년 서원의 재산을 이용하여 안동에 協東學校를 설립하였으며, 1920년 李商在 등과 전국교육기관의 협의회인 朝鮮教育協會를 조직하고, 大邱에 嶠南學館을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1923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朝鮮民立大學期成會를 발기하여 중앙위원으로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교육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 (2) 유교개혁운동의 양상

국권의 상실과 일제의 식민지배에 따라 민족의식이 고조되었을 때 유교개혁사상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 근대의 유교개혁사상은 그 실현을 위해 대종적 전파나 공동체의 조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구상하여 실제로 공동체 조직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직적 종교운동으로서의 활동양상을 크게 보면 ① 박은식·장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大同敎 조직, ② 이승희·이병현에 의해 각각 추진되었던 孔敎운동, ③ 기타 群小조직이나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박은식·장지연 등은 1909년 9월 대동교를 창건하여 유교의 민족주의적 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장지연은 공자의 誕日의례와 문묘의 釋奠의례·祭天의례를 비롯한 황제의 의례(皇禮) 등 유교의례의 체계적 재구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의관제도의 개혁방법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의례의 재정립을 통한 유교적 실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유교개혁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수 있다. 여기서 대동교는 유교의 새로운 이념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서, 강유위의 大同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가 1908년 친일유교단체인 大東學會(孔子敎로 改名)를 설립하여 유림의 변질과 통제를 추구하자, 이에 대항하여 민족진영에서 대동교를 조직한 것이다.<sup>15)</sup>

박은식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종교를 扶植시키는 과제의 시급함과 공자의 도를 나라 안에 펼쳐 일으키고 백성의 마음속에 젖어들게 할

14) 금장태·고광직, 앞의 책, 48쪽.

15) 愼鏞廈, 앞의 책(1982), 201~202쪽.

방책을 탐색하고 있었다. 곧 그는 유교가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儒敎求新論〉에서 자신의 유교개혁론으로 ① 군주중심에서 인민중심으로 전환, ② 소극적 폐쇄성에서 적극적 전파활동으로 전환, ③ 변쇄한 주자학풍에서 쉽고 절실한 양명학풍으로 전환이라는 3조목의 핵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sup>16)</sup> 다시 말하면 민주적 사회의식으로 국민을 계몽하며, 세계를 향해 선교를 행동화하고, 주체적 신념과 실천의지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강유위와 陳煥章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전개된 공교운동에 직접 관련을 맺고 유교개혁운동을 전개한 경우로서는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승희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이병헌이 있으며, 이승희는 道學을 배경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병헌은 今文經學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이승희는 1913년 당시 북경에 孔敎會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만주지역(東三省) 한국인 동포들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東三省韓人孔敎會의 설치를 위해 각지로 통문을 돌리며, 〈東三省韓人孔敎會趣旨書〉와 시행원칙으로 10條의 ‘節目’을 제정하였다. 또한 그는 1914년 북경에 가서 진환장 등 북경공교회 인사들을 만나 東三省韓人孔敎會支會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는 공교와 서양의 新學을 조화시키는 것이 공교 존립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공교에서는 政·敎가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국가와 교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政·교를 통합하고, 신학과 구학을 통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만약에 끝내 양자가 소통되지 않는다면, 孔廟와 학당에서라도 孔敎學科를 설립하여 공교가 현시대의 응용(時用)을 겸하고 있음을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17)</sup>

다음으로 이병헌은 다섯 차례(1914~1925) 중국을 방문하여 강유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중국의 공교운동을 도입한 유교개혁론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문묘를 설립하여 敎祖를 존송하는 공교조직화를 추진하여 丹城(경남 山淸)에 培山書堂을 설립하였다. 비록 그의 공교조직운동은 시작단계에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공교의 경학적 기초인 금문경학연구에로 관심을 돌려

16) 朴殷植, 〈儒敎求新論〉(《朴殷植全書》下), 44~48쪽.

17) 李承熙, 〈孔敎會講說〉(《韓溪遺稿》7), 388~390쪽.



《孔經大義考》를 비롯한 금문경학의 독보적인 체계를 남겼다. 이병헌은 《儒敎復原論》(1919)을 통해 자신의 공교사상의 기본체계를 확고히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곧 그는 유교의 傳布방법으로서 ① 敎堂을 건립하여 성심으로 공자를 섬길 것, ② 별도로 가려서 번역한 서적을 聖經으로 하여 천하에 배포할 것, ③ 敎士를 선택하여 정해서 경전을 강설하여 천하에 펼칠 것을 제안했다.<sup>18)</sup> 또한 유교개혁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전통의 ‘鄉敎式 유교’(舊派)에서 ‘敎會式 유교’(新派)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개혁론의 실천방법은 당시에 강력한 전파력을 발휘하고 있던 서양종교인 기독교의 방법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1909년의 대동교조직과 1910~1920년대의 국내외에서 공교조직으로 유교의 종교운동이 일어났으나, 유교개혁운동으로서의 구상과 설계만큼 실제로 대중적 호응과 세력의 확장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전후에 지속적으로 유교의 교단조직이 일어났으며, 이때에 조직되어 활동하던 유교단체 가운데는 친일조직도 상당수 있었다.<sup>20)</sup> 당시 유교단체의 조직과 활동양상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서 ① 일제의 유교단체에 대한 회유와 분열의 통제정책이 매우 집요했던 사실, ② 유교단체의 창립시기가 1920년대에 가장 많았던 사실, ③ 太極敎(길주)·慕聖尊道院(길주)·大聖院(단천)·孔子敎(영변) 등의 중심 활동지역이 함경도와 평안도인데, 전통적으로 유림기반이 가장 약한 곳이었다. 서북지역에서 유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과 분열정책

##### (1)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

일제는 함방이후 가장 큰 저항세력인 유림을 회유함으로써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제는 경향 각지의 상당수 유림을 포함하여 조선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물들에게 작위를 주거나 은사금이란

18) 李炳憲, 〈儒敎復原論〉(《李炳憲全集》上), 189쪽.

19) 李炳憲, 〈辯訂錄〉(《李炳憲全集》上), 325~329쪽.

20) 일제하의 유교단체를 목록으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명목의 돈을 주어 회유하고 지조를 꺾어 변절시키려고 기도하였다.<sup>21)</sup> 이때에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유학자들 가운데는 작위와 소위 은사금을 받고 일제의 식민지배에 순응하였으나, 지방의 유림들은 이를 거부하여 저항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작위와 소위 은사금을 거부하였던 유림들을 헌병대로 불러들여 강압하거나 고문하고 투옥하는 등 혹독한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유림들은 항의와 망명을 하기도 하고, 자결을 하는 등 끈질긴 저항 의지를 발휘하였다.

고종의 때부로 궁내부대신을 지낸 趙鼎九는 합방이후 일제가 2품 이상의 고위관리 80인에게 내린 작위와 은사금을 거부하였다. 일제가 위협을 하자 그는 “차라리 의롭게 죽을 수는 있지만 욕되게 살 수는 없다”하고 목을 절

教團名	창립	대표	특기사항
大宗教	1907	河相益	원래 1879년경 김재일이 창시
太極教	1907	宋炳華	처음 명칭 ‘關東敎’. 총부-吉州
大東學會 ※	1907. 12	申箕善	1909. 10 ‘孔子敎’로 改名
大同敎	1909. 9	李容植	朴殷植·張志淵이 활동의 중심인물
孔敎會(國外)	1913	李承熙	‘東三省韓人孔敎會支部’로 설치
大東斯文會 ※	1919. 12	鄭萬朝	《大東斯文會報》간행(1929. 4~)
儒道振興會 ※	1921	金榮漢	《儒道》간행(1921~)
儒道闡明會	1921	金鶴圭	《儒道闡明會報》간행(1922. 4~)
孔敎會(國內)	1923	李炳憲	경남 산청군 丹城에 培山書堂창건
大成敎會	1923	趙衡夏	총부-京城.
性道敎	1929	李民濟	水雲敎에 儒林 加味. 2代 敎統
慕聖尊道院	1929	李範錫	太極敎의 분파. 慕聖院과 구별
大聖院	1930	金彰漢	京城과 端川 등지에 支院
孔子敎	1931	?	총부-평북 영변.
朝鮮儒敎會	1932	安淳煥	始興에 鹿洞書院운영. 《日月時報》간행
朝鮮儒道聯合會※	1939	尹應榮	《儒道》간행(日文, 1942. 4~)

\* 鄭奎薰, 《한국 근대 종교의 사상과 실체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229쪽.

※표는 親日儒林단체.

21) 合併條約(8조)의 제5조에 “日本國皇帝陛下, 特爲表彰韓人勳功認以適當者, 授榮爵且與恩金”이란 항목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구출되자 ‘아직 죽지 못한 사람’으로 자처하였으며, 고종이 붕어하자 인산을 마치고는 중국에 망명하였다.<sup>22)</sup> 金奭鎮(호 梧泉)은 金尙憲의 후손으로 관직이 좌참찬에 이르렀으며, 을사늑약에 상소를 올려 “이번에 체결된 조약은 비록 위협에 따른 것이지만, 폐하는 ‘사직을 따라 죽어야 할 의리’(殉社之義)로 엄중하게 배척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의 작위와 은사금에 대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의리를 밝히고 거절한 뒤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지도층과 선비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여 지조를 꺾고자 하는 회유정책을 집요하고 혹독하게 시행하여, 명망있는 유학자로서 申箕善·金允植·李容植·鄭萬朝 등은 일찍이 일제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뜻있는 선비들은 생명을 걸고 지조를 지키므로써 일제에 항거정신을 발휘하였다.<sup>23)</sup>

## (2) 일제의 유림 분열정책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유교조직으로서 대동학회(1909년 공자교로 개명)·大東斯文會·儒道振興會·朝鮮儒道聯合會는 일제가 유교조직을 친일세력으로 순화시키는 동시에 유교조직을 분열하여 파괴하기 위한 유교탄압정책의 일환으로 조직하고 지원하였던 친일유교단체이다. 그 가운데 대동사문회(1919)와 유도진흥회(1921)는 3·1운동 이후 유림조직을 저변에서 분열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한 공작에 이용하기 위한 단체로 볼 수 있다.

일제의 총독부가 경학원과 향교를 관리하자, 일제에 저항하는 유림들은 문묘의 석전제향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문묘제향은 친일유림에 의해 점유되는 형편이었다. 일제가 3·1운동 이후 유림들을 회유하는 한편 분열정책으로 총독부의 지원아래 유림단체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는데, 총독부는 이런 유림단체들을 내선융화운동·황국신민화운동 등 식민지 통치정책을 위한 사회교화운동에 활용하였다. 이들 친일유림단체는 식민지 교육사업에 참여하기도

22) 일제가 작위를 준 80인 가운데 조정구·김석진·윤용구·한규설·홍순항·조경호·민영달·유길준의 8인만이 받기를 거부하였다. 《騎驢隨筆》, 〈趙鼎九〉.

23) 《騎驢隨筆》에는 ‘庚戌(爵位·恩)賜金拒却’의 인물로 7인이, 《念齋野錄》 ‘合邦顛末’에는 恩賜金을 거절한 인물로 9인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은사금을 거절하다 투옥되고 자결한 유림의 인물들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았다.

하였다. 당시 친일조직의 유림회가 회원모집을 하자 대중들은 입회만 하면 양반이 되는 줄 알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조차 입회금 1圓씩을 내고 다수가 참여하였다고 한다.<sup>24)</sup>

1919년 발족된 대동사문회는 魚允迪·宋之憲이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 東京斯文會와 연계하기 위해 조직을 추진한 것이요, 회장에 尹用求, 총무에 어윤적이 추대되었다. 대동사문회는 일제의 재정적 뒷받침과 보호하에 친일 유림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학원의 석전제와 강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제의 정책에 협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석전제향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제에 의해 동원되었다. 1920년 발족된 유도진흥회의 지회창립대회에는 도지사·군수·경찰간부·헌병대장·학교장 등의 지방관이 동참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친일유림단체의 활동은 한편으로 지방의 유림들을 끌어내어 지조를 꺾어 친일세력으로 포섭하며, 다른 한편으로 회원들에게 “國憲을 존중하여 국법에 따르고 生民에 복리를 생각할 것”과 “世運의 進展에 뒤지지 말아야 할 것이요, 평상시에 大局에 착안하고 가법고 조급하게 불온한 행동을 삼가하여 일반 民人의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으로 길들여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친일유교단체가 사회의 표면에 드러나면서 지방의 유림들 가운데 지조가 굳은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일제의 유혹과 위협에 따라 친일단체에 참여하거나 동원되면서 사실상 유림의 내부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지조가 굳은 유림들은 이들을 비루하게 여겼고, 한 번 지조를 잃은 유림들은 현실에 타협하며 일제에 순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일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명감이나 능동적 참여의식이 결핍된 유도진흥회는 자생력이 없다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sup>25)</sup>

24) 《동아일보》, 1924년 1월 3일, 〈時代錯誤의 儒林會〉.

25) 《齋藤實文書》9, 162~163쪽, 〈朝鮮儒道振興會 經過狀況報告書〉.

## 5) 일제의 동화정책과 유교전통의 파괴

### (1) 일제의 제도적 동화정책

합방후 조선사회의 유교전통에 대한 일제의 개혁은 더욱 광범하고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11년 〈朝鮮敎育令〉이 발표되어 교육의 목적을 “교육에 관한 칙령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제시하며, 보통학교에서 국어교육으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제의 동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합방이후 유림의 강력한 저항 양상은 일제가 요구하는 세금을 거부하며, 민적(戶籍)에 등록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림은 세금납부와 호적등록이 곧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충절·의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민족 지배하의 백성은 곧 노예라는 의미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 1910년 합방직후부터 1918년까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기본적인 재산권을 약탈당하게 되어서도 유림의 지사들은 일제의 지배를 거부하는 항거를 계속하였다. 또한 전통 교육기관이 폐지되고 총독부가 세운 新制學校가 유교교육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화를 통해 민족 전통의 결정적 단절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유림은 간파하고 있었다.

유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제도적 탄압과 동화정책은 교육정책을 통해 가장 광범하게 수행되었다. 본래 유교는 조선사회에서 성균관·향교의 국가교육기구와 서원·서당의 민간교육기구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일제의 교육정책은 유교 기반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먼저 국가교육기관의 중심인 성균관을 폐지하고 1911년 총독부의 식민정책에 부합하는 산하기관으로서 경학원을 천황의 하사금의 명목으로 설립하였으며, 경학원의 설립목적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여 경학을 강구하며 風敎德化를 裨補함”이라 규정하여,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와 충량한 국민화를 계도하는 교화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갔다. 일제는 경학원을 이용하여 석전제를 대대적으로 거행하여 유교가 총독부체제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게 하였다. 경학원에 경성 및 지방 13도 강사를 임명하여 강연케 함으로써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하였으며, 《經學院雜誌》를 발간하여 각지에 총독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였다. 곧 총독부는 유교의 전통적 교육기능을 단절시키고 총독의 감독하에서 부분적인 제사기능과 강연회를 유지하였다. 일제는 성균관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폐지시킨 후에 유교 지식인을 배양하여 유교인을 식민체제에 순치시킬 필요에 따라 1930년 明倫學院을 경학원에 부설하여 설치함으로써 이른바 친일조직으로 ‘皇道 유림’을 양성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유교의 지방조직으로서 향교를 식민지체제에 맞도록 재편하여 유교조직을 통제해갔다. 곧 일제는 합병 이전인 1910년 4월에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선포하여 향교의 재산관리를 해당 지방의 부윤이나 군수에 소속시키고, 향교재산 수입의 대부분을 지방 공립학교의 경비로 전용하게 하였다. 유림의 불평이 심해지자 총독부는 1920년 향교재산의 학교경비 지출을 중단하고 향교의 재산관리도 유림에서 선발한 掌議가 담당하게 하였으나, 향교재산의 관리와 인원을 행정관청에 귀속시킴으로써 향교조직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향교는 총독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사회 교화의 강연장으로 전락했고, 친일유림의 집합장소로 변하여 지조있는 지방유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에 따라 유림들 사이에 분열의 골이 깊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본천황의 은전이라 하여, 1924년의 황태자의 가례식과 1928년의 천황 즉위식에서 薛聰을 비롯하여 문묘에 종향된 조선의 선현 18位에 대해 그 후손의 집안에 제사비용(祭粢料)을 하사함으로써 조선의 유림들을 일제에 순치시켜 갔다.

## (2) 일제의 문화적 · 풍속적 동화정책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은 1910년대의 무단정치와 3·1운동이후 1920년대의 소위 문화정치를 거쳐 1930년대로 들어가면서 한민족의 문화전통을 철저히 말살하여 일본문화에 동화시키고자 기도하는 민족말살정책 내지 동화정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가 만주와 중국 대륙 및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의 침략을 계속하던 시기에, 우리의 문화전통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

를 시도한 중요한 사건을 유교적 신념의 관점에서 주목한다면 ① 일본어 강요, ② 皇道儒敎化, ③ 창씨개명의 3가지를 열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강력한 민족문화말살과 민족동화정책에 대해 가장 집요한 저항과 거부운동을 전개한 집단은 전통문화의 고수에 강인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유림집단이었다. 일제의 동화정책에 대한 유림의 저항태도는 민족의식으로만 연결시켜 보기 어려운 수구적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동화될 수 없는 민족의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일제는 <조선총독부교육령>에서 “국민(한국국민)의 성격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어(일본어)보급”을 목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과목을 일본어로 교육함으로써 처음부터 동화정책을 전개하였다.<sup>26)</sup>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황민화운동을 강화하면서 193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압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다수의 유림은 일본의 교육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新制學校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러한 제도교육의 거부는 비록 가정에서 한학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식민지체제 아래서 자손들의 사회활동을 스스로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제도교육의 학력이 없어 사회진출에 심한 제한을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겪어야 했다. 또한 가정에서 일본어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던 것은 유림 가정의 일반적 사실이다. 그러나 유림에게 우리말은 한글이라기 보다 漢文이었던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sup>27)</sup>

다음으로 일제의 신앙적 동화정책은 일찍부터 친일유교단체를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붕괴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일제는 1911년 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으로 개칭하며, 그 뒤 경학원을 다시 明倫專門學院으로 개칭하여 皇道儒林의 양성기관으로 삼았고, 일제말기에는 명륜전문학원조차 폐쇄하여 明倫鍊

26) 일제하에서 보통학교 수업은 주26시간 가운데 일본어 10시간, 고등보통학교 수업은 주30시간 가운데 일본어가 8시간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51~53쪽.

27) 예를 들어 鄭璣淵은 해방후에도 한글전용론에 반대하면서 漢字의 우월성을 고집하였다. 금장태·고광직, 앞의 책(1984), 207~208쪽.

威所로 개편함으로써 유교기관을 점진적으로 괴멸시켜 갔다. 특히 친일유교인으로 황도유교를 표방함으로써 천황의 통치체제를 유교이론으로 합리화시키게 하여 일제의 동화정책에 앞잡이로 삼았다.<sup>28)</sup> 일제는 중일전쟁을 계속하던 1938년부터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을 창립하여 국가동원의 정신적 통제를 강화하자 이듬해 친일유교인들은 조선유림대회를 열어 국민정신총동원에 협력할 것을 결의하는 행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유림의 주류는 친일유림에 의해 점령된 성균관·향교의 조직을 떠나서 서원·서당의 민간조직을 통해 결속하거나, 어떤 기구에도 관계하지 않고 개인적 인간관계의 강한 유대를 통해 유림조직으로서 항일 저항의식을 의리의 당면과제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는 지속적으로 단발을 강행하였지만 유림들은 保髮을 자신의 전통을 수호하는 상징으로서 소중히 하였다. 申益均은 머리를 깎은 사람은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머리를 깎으면 門人錄에서 삭제해버리기 까지 하여 강경하게 단발을 거부하였다. 그의 제자 梁本錫이 1934년 머리를 깎이지 않으려다 일경의 칼에 찔려 죽자, 그는 제문을 지어 “천지의 올바른 성품을 잃지 않고 성현의 큰 훈계를 준수하여 상투를 지켜서 오늘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몸은 죽었으나 그 님은 죽지 않았다”고 위로하고 있다.<sup>29)</sup> 일제의 동화정책은 1940년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함으로써 그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 시기는 일제말기로서 전시의 위압으로 강제화하여 시행 7개월만에 80%가 창씨를 할만큼 대부분이 휩쓸렸고, 심지어 명망있는 유학자도 그 강압에 견디지 못하고 굴종한 경우가 많다.

## 6) 일제하의 유교의 특성

조선시대를 지탱해 온 통치이념의 주체인 유림은 일제의 국권침탈과정에서부터 의병운동이나 상소운동 등으로 강력하게 저항해왔으며, 합방후에도

28) 心山思想研究會 編, 《金昌淑文存》(성균관대 출판부, 1986), 289~290쪽.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성균관대 출판부, 1987), 283쪽.

29) 금장태·고광직, 앞의 책(1984), 123쪽.



국외에 망명하여 무력항쟁을 하거나, 일본정부가나 조선총독부를 포함하여 각국 정부에 독립청원을 하며, 교육사업과 계몽활동을 벌여 독립의식을 고취하기도 하고, 일제의 동화정책에 저항하여 전통문화를 지키며 모든 타협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박은식·김창숙 등 소수의 유림출신 망명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는 정도이고, 이승희처럼 공교운동과 연결된 독립기지건설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다만 유림이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독립청원을 하였던 ‘파리장서사건’과 일제의 동화정책에 대해 일관된 비타협적 거부태도에서 강인한 저항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유림의 비타협 무저항은 일제의 가혹한 억압에 따른 시련 속에서도 비교적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지조를 지켜갔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유교의 민족의식을 발휘하였다는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유림의 항일운동은 유림이 향촌의 친족적 결속이나 학맥의 결속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소수의 진보적 인물을 제외하면 전국적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전통의 생활양식을 일본 식민통치의 사회체제와 대립된 것으로 파악하는 수구적 폐쇄의식 속에 사로잡혀 항일의식을 민족의식으로 선명하게 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유림의 항일의식은 실제로 민족의식으로 표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적 신념과 의지의 차원에 머물고 말아 사회적 변혁과 유리되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 일제의 동화정책에 대해 유림은 극단적 거부로 민족전통을 고수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유림의 태도는 철저히 은둔적인 것이기에 민족독립의 당면문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식의 획득이나 대책의 강구가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일제의 유림에 대한 탄압정책은 조직적이고 집요하여, 조선사회의 국가체제 속에 있던 유교조직인 성균관·향교를 장악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거하여 변질시키고 친일유림집단을 조직하여 이를 점유함으로써, 한편으로 유림집단을 분열시키고, 이에 비타협적인 항일유림집단을 더욱 사회체제로부터 소외시켜 무기력하게 몰아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제는 식민통치의 도구로서 친일유림집단과 유교기관을 이용하는 동시에, 은사

금 등의 수단으로 유인하고 위협하여 유교인의 지조를 꺾고, 유림집단을 회유하여 변질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분열을 심화시켰다. 나아가 일제가 유교전통의 衣髮제도와 의례제도의 변혁을 강요함에 따라 유림을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예속집단으로 전락시키거나 폐쇄적 전통수호의 은둔집단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유교조직을 이용하거나 억압하는 양면정책을 썼던 것이다.

다만 이 시대의 상당수 유교지식인이 일제에 순치되어 식민통치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집요한 동화정책을 끝까지 거부하여 지조를 지켰던 보수적 유교지식인 및 소수이지만 유교개혁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자 노력하였던 인물들은 국내에서 항일정신을 지켜갔던 중심세력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琴章泰〉

## 5. 개신교

### 1) 식민지시기 개신교의 상황

1910년 ‘경술국치’ 이후 혹독한 무단통치하에서 개신교회는 민족적 또는 사회적 문제보다는 종교적 방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망국의 비애를 신앙의 열성으로 잊어보려 했으며, 특히 일제와의 갈등을 두려워 한 서양선교사들은 한국 개신교인들을 비정치적인 경향으로 지도·감독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은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켰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3·1운동의 계획과 확산 단계에서 개신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두드러졌다. 그 동안 침묵했던 교인들은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고, 독립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최대의 민족적 거사라 할 수 있는 3·1운동과 개신교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개신교인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 <표 1>은 3·1운동 당시 入監者와 被檢者의 종교별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3·1운동 당시 종교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입감자의 39.43%(3,572/9,059), 피검자의 32.3%(6,314/19,525)가 종교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의 종교 인구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천도교와 개신교의 비율이 높았으며,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그 교세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천도교는 입감자의 15.1%, 피검자의 11.8%를, 개신교는 입감자의 22%, 피검자의 1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두 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표 1> 3·1운동 당시 입감자와 피검자의 종교별 현황

종교		남 (입감자/피검자)	여 (입감자/피검자)	합계 (입감자/피검자)	비율 (입감자/피검자)
천도교		1,361/2,264	2/15	1,363/2,283	15.1%/11.8%
시천교		5/14	-	5/14	-
불 교		105/220	1/-	106/220	1.2%/1.1%
유 교		55/346	-	55/346	0.6%/3.6%
개 신 교	장로교	1,322 / 2,254	119/232	1,441/2,486	22%/17.6%
	감리교	401/518	37/42	438/560	
	조합교회	7/7	-	7/7	
	기 타	81/286	16/34	97/320	
천주교		45/54	8/1	53/55	0.5%/-
기 타		7/21	-	7/21	-/0.1%
무종교		5,455/9,255	31/49	5,486/9,304	60.6%/47.7%
미 상		1/3,809	-/98	1/3,907	-/20.2%
합 계		8,845/19,054	214/471	9,059/19,525	100%/100%

\* 《조선총독부 통계보고》(1919년 5월) ; 《일본헌병대 조사보고》(1919년말) ; 김승태,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韓國基督教史研究》 25,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 21~22쪽.



연 도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교 파	교회					1	2	2	2	3	3
	교인										
성결교회	교회						35	27	22	22	22
	교인						2,955	3,608	3,369	3,369	3,369
조선회중교회	교회										
	교인										
일본기독교회	교회	9	10	10	10	10	10	10	16	15	16
	교인	8	18	144	113						
일본감리교회	교회	11	11	11	11	11	11	11	15	16	17
	교인										
일본조합교회	교회	38	48	58	59	54	7	5	8	8	8
	교인	11,280	11,228	13,541	14,387	14,254					
기타	교회						16	17	15	20	
	교인										
합계	교회	3,163	3,251	3,252	3,225	3,279	3,478	3,554	3,685	3,814	3,896
	교인										

\* 《朝鮮に於ける宗教及享祀一覽》(朝鮮總督府, 1928), 44~47쪽.

장로교의 경우 1916년 1,885개의 교회와 124,170명의 교인이 1925년에는 2,165개의 교회와 182,650명의 교인으로 성장하여 각각 14.9%와 47.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남·북감리교의 경우는 1916년 811개 교회와 48,969명의 교인이 1925년에는 1,036개의 교회와 57,434명의 교인으로 성장하여 각각 27.7%와 17.3%의 성장율을 보였다.

이같은 발전의 이유는 복합적인 것이겠으나,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서양의 종교로만 인식되던 개신교가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는 종교로도 부각되었음을 다음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제1기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방방곡곡에서 하는 문화운동의 혜택을 입거나 혹은 찬동하며 또 기독교를 매개로 하여 수입된 구미의 물질문명에 심취하여 예수교를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았다. 3·1운동 이후의 제2기에 있어서는 기독교회가 민족전선에 연출한 역할로 인하여 교회가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다(趙龍基, 〈福音의信仰要義〉, 《基督申報》, 1937년 2월 3일).

3·1운동의 규모와 열기에 놀란 일제는 식민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경질되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다. 그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했는데, 선

교사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정성을 들였다. 선교사들은 1919년 9월 일본정부의 처사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요청하며 <연합종교회건백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 ① 교회 및 선교사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것.
- ② 기독교 및 기독교에 대한 관리의 차별을 철폐할 것.
- ③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성서교육과 종교의식을 허용할 것.
- ④ 기독교 문서에 대한 검열을 철폐할 것.
- ⑤ 교회의 출판물 발행의 제한을 완화할 것.
- ⑥ 교회 및 선교기관을 재단으로 인정할 것.
- ⑦ 기독교인으로서 구금된 정치인에 대한 학대를 중지할 것.
- ⑧ 형무소의 교화사업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것.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기독교문사, 1990, 44쪽).

즉 3·1운동은 민족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도, 선교사들은 종교적 개선 요구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어쨌든 총독부에서는 선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교과를 신설하고 <포교규칙>을 개정하여 교회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으며, “교회에서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정지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또한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서교육을 인정하고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내국인법으로 허가했다. 그 결과 선교사들 중에는 사이토를 예찬하는 이들도 나오기에 이르렀으나, “보통 문화정치라고 일컫지만 반도통치의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진 점은 없다. …끝내 國憲에 반항하고 병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不逞輩에 대해서는 추호의 가차없이 단속하는 방침을 추진할 것이다”<sup>1)</sup>라는 저들의 말처럼 민족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다시 거족적으로 민족운동을 일으키기도 어려웠다. 단속을 완화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약간 허용해 주는 대신 일제는 표면적인 항일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차없는 탄압을 했기 때

1) 《施政二十五年史》(朝鮮總督府, 1935), 314~315쪽.

문이다. 결국 교회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접적이고 온건한 민족운동이었으며, 문화운동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다.

민족문화를 수호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서양에서 이식된 개신교에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하나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맞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2) 개신교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

식민지시기 개신교계의 새로운 경향은 ‘조선적 기독교’를 표방하며 나름대로의 ‘土着化’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대한제국기부터 나타나고 있었으며,<sup>2)</sup> 192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서양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교리와 의례만을 그대로 따랐던 과거의 비주체적 모습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예컨대 蔡弼近은 다음과 같이 ‘조선인의 기독교화’와 더불어 ‘기독교의 조선화’를 강조했다

기독교는 하나이오 그 성경도 하나이오 그 신앙의 목표도 하나이지만은 그것을 소유하는 생명 있는 인격·생명 있는 민족이 다른 것을 따라서 다른 방면이 있습니다. … 民族은 그 宗教化를 하고 宗教는 그 民族化를 합니다. … 그런데 朝鮮人は 얼마나 基督教化하였스며 基督教은 얼마나 朝鮮化를 하였습니까(蔡弼近, 〈새 基督教〉, 《基督申報》, 1925년 12월 23일).

또한 田榮澤도 다음과 같이 “예수의 도리로 새로운 민족성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우리의게 본래부터 있던 문화 위에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받고 우리 민족성이란 밧 위에 예수의 도리가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교로 새로운 문화를 지어야 하겠고 예수의 도리로 새로운 민족성을 길러야 하겠습니까(田榮澤, 〈열매열닐 때는 왔다〉, 《基督申報》, 1927년 10월 26일).

2)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한편 趙龍基는 기독교인들이 “서양숭배로 인하여 과거 조선의 문화·윤리·도덕에 대한 멸시가 심한 것”이 기독교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도 했다.<sup>3)</sup> 즉 이들은 조선적 기독교의 정립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적 기독교’가 된다는 것은 배외사상이나 복고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 본위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같은 경향은 敎權을 장악하고 있던 서양선교사들에 대한 한국 교인들의 반발이기도 했다. 즉 한국 개신교인 중에는 선교사나 기성 교단과 마찰을 빚으며 제도권에서 이탈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로교 목사 崔重珍은 1909년 선교자금 사용, 선교기관 운영, 선교구역 조정 등의 문제를 놓고 선교사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듬해 전북대회에 5개 요구조항을 제출했다. 그러자 선교사들은 ‘배은·배약·분쟁·불복’ 등의 용어를 써가며 그를 비난했고, 이에 최중진은 ‘대한예수교자유회 목사 최중진’의 이름으로 “...자유할 수밖에 없어서 자유하는 것을 불복이라 합니까? 불복이라는 말을 안들으려고 자유하는 것이지요”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뒤 장로교를 탈퇴, 뜻을 같이하는 전북지역 10여 개 교회들과 함께 ‘자유교회’를 설립했다.

이어 1918년 황해도에서는 장로교 목사였던 金庄鎬를 중심으로 ‘조선기독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는데, 1916년 황해도회는 그의 總戴 자격을 정지시켰고, 1918년에는 그의 휴직을 결의했다. 그러자 김장호는 자신이 맡고 있던 봉산 신원교회를 중심으로 ‘조선기독교회’를 창건했던 것이다. 그는 “교리해석상에 문명각국의 현행하는 眞正高尚한 神學說을 자유채용하고, 野味 인종을 유도하는 眩惑迷惑하는 假言寓說을 일체 曉破覺悟하여 동양교회에 신선한 정신을 激醒新興케 할 것”이라 하여, 성경에 대한 미신적 해석을 반대하며 선교사들의 보수적 신학과 신앙을 비판했다.

3) 趙龍基, 〈福音의信仰要義〉(《基督申報》, 1937년 2월 3일).



역시 장로교 목사로 남성정교회를 맡고 있던 李萬集은 대구에서 1923년 ‘자치교회’를 설립했다. 3·1운동에도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는 1921~1922년 계성학교 학생들이 운영자인 선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반대하여 동맹휴학사건을 일으키자 학생들을 지지했다. 그러자 경북노회에서는 1923년 이만집을 停職시키고 이 교회 장로 4명, 집사 1명을 면직시켰다. 그러자 이만집 등은 “今我 대구교회는 저 권리를 주장하는 선교사의 정신지배를 받는 경북노회를 탈퇴하고 자치를 선언”하고 ‘자치교회’를 창립했다.

1928년에도 장로교 목사 朴承明은 기성 교단에서 뛰쳐나와 ‘마산예수교회’를 창립했다. 일찍이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국민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도 했던 그는 1925년 마산 문창교회에 부임했다. 그러나 교회안의 소장·노장층의 갈등과 여자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경남노회는 그의 사직을 권고했고, 그 처리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고압적 자세가 문제가 되어 선교사 배척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박승명은 1928년 “자유신앙에 방해되는 편협된 고정적 신경조례를 부인”하며 “예수교회의 연합통일에 장애되는 각 교파의 繁弊한 敎政條例와 교황·주교·감독·장로 등의 과두정치를 부인”하는 강령을 내걸며 따로 마산예수교회를 설립했다.

이상은 모두 장로교에서 갈라진 교파였으나, 감리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먼저 감리교 목사 李龍道는 신비주의적 부흥운동이 문제되어 1932~1933년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는 비난과 함께 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평양에서 “羅馬舊敎라거나 更正新敎라거나 가릴 것 없고 宗門의 동서나 派別의 남북을 논할 것 없이 교회의 내용만 예수로써 精化되면 그만이다”라 주장하며 ‘예수교회’를 창립했다.

역시 감리교 목사인 邊成玉은 1935년 만주에서 ‘조선기독교교회’를 조직했다. 만주지역도 장로교·감리교 선교부 사이의 선교지역 분할협정에 따라 동만·남만·북만 등 지역에 따라 교파도 달랐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이유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인 이 지역 한국인 신자들에게 이같은 교파 구분은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장로교인이 감리교 선교구역에 정착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이다. 즉 초교파적인 조선기독교교회의 창설은 선교사들이 만든 선교지역 분할정책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성결교의 경우에도 한국인 신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1936년 ‘하느님의 교회’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선교사들이 주관하던 東洋宣敎會는 1921년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 개칭했으나 여전히 주도권은 선교사들에게 있었는데, 교세가 성장하면서 한국인 신자들은 1932년 자립을 선언하고 총회를 조직했다. 이후 동양선교회와 총회 사이에 종종 마찰이 빚어졌으며 1936년 자치운동에 적극적인 邊南星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되었는데,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이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마침내 “하느님의 교회는 정치적 통제기관을 두지 않으며, 또한 성서 이외의 법규를 세우지 않고, 각 교회가 다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직속하여 성서를 유일의 正則으로 함”이라 하며 목사 13명이 따로 ‘하느님의 교회’를 설립했다.

처음부터 기성 교단이나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시작된 조직들도 나타났다. 崔泰鎔은 1920년 일본의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를 만난 뒤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1924년 귀국하여 《天來之聲》을 창간, 기성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며 ‘非敎會主義’로 자처했다. 그는 1935년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리라”라는 구호를 내걸며 ‘기독교조선복음교회’를 창설했으며, “조선교회가 외국인의 자선 위에 서 있고 또한 현재에도 그 자선에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 조선교회의 근저에 외국인의 자선이 깔려 있다는 일은, 이는 조선인의 신앙의 불철저를 의미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金敎臣은 일본에서 우치무라를 만나 깊은 영향을 받고 귀국, 우치무라 문하생인 咸錫憲·宋斗用·鄭相勳 등과 《聖書朝鮮》을 창간했다. 《성서조선》은 성서와 조선, 즉 기독교와 민족을 융화시키려 한 김교신의 생각을 보여준다. 그는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교신자보다도 조선혼을 소지한 조선사람에게 가라”고 외치며, 기성 교단과 거리를 둔 無敎會主義를 주창했다. 그리고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骨筋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넓게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sup>4)</sup>

심지어 신학 분야에서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기독교문사, 1990), 202~208쪽.

翻譯神學과 雇傭神學에서는 조선의 靈을 움직이는 활력이 나오기 어렵다. 정통이라 할지라도 조선인 신앙정신에서 쏟아져 나오는 조선인 독창의 신학, 조선인의 손으로 발행하는 조선의 독립의 신학이라야 조선의 靈을 움직일 수 있다(金麟瑞, 〈아뭇본 註釋問題〉, 《信仰生活》, 1935년 11월호, 10쪽).

이처럼, 이제 ‘조선적 기독교’의 수립은 한국 개신교계의 지상과제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 3)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

민족문화를 보전하려는 개신교계의 활동은 다음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外來文化에만 深醉하는 것은 自國의 文化와 民族을 敗亡케 하는 것 … 朝鮮魂의 表現을 保全하고 朝鮮의 아름다운 文化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基督教은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박세광, 〈朝鮮文化에 對한 基督教의 使命〉, 《神學世界》, 1933년 2월호, 73쪽).

#### (1) 언론·출판

식민지시기 개신교계에서는 많은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목적에서 간행된 것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며 민족의 계몽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sup>5)</sup> 식민지시기 개신교계에서 간행한 신문과 잡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3〉·〈표 4〉와 같다.

〈표 3〉 일제강점기 개신교계에서 간행한 신문

	신문명	주기	교 단	창 간	종 간	발행(편집)인	기 타
1	예수교회보	주간	장로교	1910. 2. 28	1914. 8. 18	기일(J.S.Gale)	
2	그리스도회보	주간	감리교	1911. 1. 31	1915. 12. 8	기의남(W.G.Cram)	
3	基督申報	주간	장로교 감리교	1915. 12. 8	1937	반우거(G.W.Bonwick)	예수교회보 +그리스도회보

5)尹春炳,《韓國基督教新聞·雜誌百年史》(大韓基督教出版社, 1984) 참조.

	신문명	주기	교 단	창 간	종 간	발행(편집)인	기 타
4	基督教報	주간		1936. 1. 21	1938. 7. 19	허대전(J.G.Holdcroft)	기독교보 →기독신문
5	基督新聞	주간	개신교연합	1938. 8. 16	1942. 4. 23	김우현	
6	基督教新聞	주간	개신교연합	1942. 4. 29	1944	정인파	
7	監理會報	격주	감리교	1933. 1. 20	?	사우어(C.A.Sauer)	
8	農村通信	월간	장로교	1935. 3. 1	?	앤더슨(W.Anderson)	
9	長老會報	주간	장로교	1940. 1. 24	?	오문환	

\*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364~365쪽.

〈표 4〉 일제강점기 개신교계에서 간행한 잡지

제 호	창간년월	폐간년월	주 기	발행·편집인	발 행 소
만민보	1913. 1	?	월간	헐리스트	만국성경연구회
中央靑年會報	1914. 9	1915. 4	월간	브록크만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公道	1914. 10	1915. 3	월간	강매	공도사
正敎및주무공과	1914	?	계간	호가드	구세군
神學世界	1916. 2	1955. 11	계간/격월간	하디/양주삼	감리교협성신학교
敎會指南	1916. 7	1944	월간	오버그/어크하트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朝鮮正敎報	1917. 2	?	월간	파울	러시아정교회당
福音申報	1917. 5	1938	부정기	김태희	기독교동신회
基督靑年	1917. 11	1919. 12	월간	백남훈	제일분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培材學報	1918. 10	1921. 4	부정기	육정수	배재학보사
주일학교연구	1918. 1	?	월간	한석원	조선주일학교연합회
神學指南	1918. 3	1940	계간	클라크/앵겔	평양장로회신학교
聖經雜誌	1918. 2	1923	월간	본워/게일	조선예수교서회
選民	1919. 1	1919. 1	월간	강매	선민사
主日學校	1919. 1	1923	계간	홍병선	조선예수교서회
宣敎百週年紀念會報	1919. 1	?	월간	히치/양주삼	남감리회선교백주년기념회
世光	1920. 1	?	월간	스톡스	세광사
現代	1920. 1	1920. 6	격월간	백남훈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靑年	1921. 3	1940. 12	월간	브록크만	경성기독교청년회
新家庭	1921. 7	1936. 9	월간	빌링스	신가정사

제 호	창간년월	폐간년월	주 기	발행·편집인	발 행 소
半島之光	1921. 9	1921. 9	월간	이인식/남궁혁	평양신학교학우회
活泉	1922. 11	1942	월간	킬보른/이명직	동양선교회성결교회
培材	1922. 10	?	연2회	아펜젤러	배재학생기독교청년회
學友會報	1923. 1	1925	연간	클라크/오천경	평양장로회신학교
新生命	1923. 7	1925. 4	월간	쿤스/전영택	조선기독교창문사
젊은이	1923	1923	월간	백남훈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宣川	1925. 2	?	월간		선천기독교청년회
現世	1925. 2	?	월간	오버그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天來之聲	1925. 6	1927. 5	월간	최태용	천래지성사
주일세계	1925. 6	?	월간	김재형	주일세계사
主日學校雜誌	1925. 7	1929. 12	월간	홀드크로프트	조선주일학교연합회
主日學生	1925. 9	?	월간	최영택	동양선교회 주일학생사
神學報	1925. 7	?	계간	로버트/고려위	평양장로회신학교학우회
眞生	1925. 9	1930. 12	월간	앤더슨	기독교청년면려회조선연합회
使命	1926. 3	1937	격월간	최승만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야회생활	1926. 3	1944. 4	월간	라이스/정인과	야회생활사
收穫運動	1926. 4	?	월간	어크하트/보우어즈	시조사
主日學校通信	1926. 9	1928. 8	계간/월간	홀드크로프트	조선주일학교연합회
慶北老會敎會報	1926. 9	?	월간	아담스	대구성경학교
士官	1927. 2	1942	격월간/계간	토포트	구세군조선본영
백합화	1927. 3	1927. 3	월간	틴슬리	협성여자신학교
聖書講臺	1927. 7	?	월간	김성여	성서강대사
聖書朝鮮	1927. 7	1942. 3	계간/월간	유석동/김교신	성서조선사
聖光	1927. 12	?	월간	김원식	철산읍교회주일학교
節制生活	1928. 1	1928. 9	격월간	오기선	평양절제생활사
梨花	1928. 2	?	연간	박검숙	이화여전학생기독교청년회
主日學校申報	1928. 8	1929. 11	월간	홀드크로프트	조선주일학교연합회
新生	1928. 10	1934. 1	월간	유형기	신생사
幼年申報	1928	?	월간	모우리	평양노회주일학교협의회
主日學校先生	1929. 1	1935	월간	스톡스/김수옥	남감리교회주일학교부
靈과眞理	1929. 2	1939. 7	월간	최태용	동경진리사
농촌청년	1929. 2	?	월간	반하트/홍명선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제 호	창간년월	폐간년월	주 기	발행·편집인	발 행 소
燈臺	1929. 5	1930. 9	월간	모우리	평양노회주일학교협회
培花	1929. 5	?	연간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農民生活	1929. 6	1942. 5	월간	정인과/매륜	농민생활사
우리가정	1929. 9	?	월간	우크하트	시조사
宗教教育	1930. 1	?	월간	클라크	조선주일학교연합회
현대진리	1930. 7	?	부정기	오버그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節制	1931. 1	1937. 8	월간	채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鹽光	1931. 2	?	부정기	피터스	염광사
게자씨	1931. 6	1939. 12	월간	김진홍	게자씨사
福音과感謝	1931. 9	?	월간	윤치병	감사사
우리집	1931. 12	1936. 12	계간	홀/채핀	가정사
信仰生活	1932. 1	1956. 4	월간	김인서	신앙생활사
光成	1932. 7	?	연간	무어	광성고등보통학교
天國福音	1932. 10	?	월간	이승원	천국복음사
宗教時報	1932. 12	1935. 12	월간	홀드크로프트/정인과	장로교총회종교교육부
勉勵會報	1933. 1	?	월간	이대위	먼려청년회
靈光	1933. 3	?	월간	이석락	만주봉천 영광사
아이동무	1933. 5	1935	월간	매륜	아이동무사
主日學校聯合會報	1933. 7	?	월간	노블	조선주일학교연합회
靈界	1933. 11	?	월간	황국주	영계사
會報	1933	?	월간	최승만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예수	1934. 1	?	월간	백남주	예수교회중앙선도원
眞光	1934. 2	?	월간	유기태	동경 진광사
信聖	1934. 5	1935. 11	계간	장이옥	신성학교
한인기독교보	1934. 7	?	월간	박동완	하와이 한인기독교보사
月刊音樂	1934. 7	?	월간	앤더슨/최성두	경성음악사
嶺南聖報	1934. 7	?	계간	천세봉	동경 영남성보사
기쁜소식	1934. 11	1941. 10	월간	블랙	동양선교회성결교회
火柱	1934. 12	?	월간	아담스/이석락	화주사

제 호	창간년월	폐간년월	주 기	발행·편집인	발 행 소
聖火	1935. 1	1942. 4	월간	스톡스/정남수	성화사
貞信	1935. 3	?	?	손진주	정신여자기독교청년회
恩寵	1935. 4	?	월간	아담스/이석락	화주사
主校指南	1935. 4	?	계간	블랙	성결교 유년주일학교연합회
復活運動	1935. 10	1939. 8	월간	김재형	부활사
新生命	1935. 10	1939. 8	월간	오근옥	일본 신생명사
童話	1936. 1	1937	월간	최인화	동화사
說教	1936. 6	1941. 11	월간	김규당	설교사
福音運動	1937. 1	?	월간	최석주	동경 복음운동사
새사람	1937. 1	1937	월간	전영택	복음사
聖貧	1937. 4	?	월간	매켄지/김정준	성빈학사
十字軍	1937. 6	1938. 2	월간	김재준	신앙운동사
永生	1937. 4	?	?	김관식	영생고등여학교
明新	1937	?	계간		명신학교YMCA
青年時代	1938. 3	1939. 1	월간	최승만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
療養村	1938. 5	1940. 6	월간	홀	해주구세요양원
愛隣	1938. 8	1939	계간	앤더슨/정지강	평양애린원
教會	1939. 6	?	연2회	조용천	평양창동교회
信仰世界	1939. 12	?	월간	김상권	신앙세계사
中央少年	1939	?	월간	구자옥	경성중앙기독교청년회
活信仰	1940. 2	?	월간	안영섭	활신양사
健康生活	1941. 6	?	월간	김창집	건강생활사
皆勞	1942. 5	?	월간	조용천	개로사
임마누엘	1942	?	연간	김재준	조선신학교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기독교문사, 1990), 72~77쪽.

이처럼 개신교회에서는 많은 신문·잡지를 발간했는데, 대부분 교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적 목적의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종교적 색채를 많이 띠지 않고 대중을 상대로 계몽을 하려 한 잡지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朴熙道

가 주관한 《新生活》(1922), 전영택이 편집을 맡은 《新生命》, 柳滢基가 발행한 《新生》(1928) 등은 1920년대 들어와서 ‘새로운(新)’ 민족적 각성을 통해 ‘삶(生)’의 활로를 찾아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즉 “일반사상계를 지도하고 연구자에게 그 연구를 도와주고, 신앙가에게는 그 신앙을 더욱 篤厚하게 하고, 교육가로 하여금 교육의 新光明을 보게 하며, 교회와 사회의 긴급한 실재문제를 논하여 크게 여론을 일으키며, 가정과 부인·아동의 벗까지 되게 하려고 하는 것”,<sup>6)</sup>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학술적으로 新生함이 있어야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sup>7)</sup>라 하여 민족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節制生活》이나 《農村青年》 등의 잡지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편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잡지들도 주목할 만 하다. 이들 잡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해외에 소개하는 중요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잡지들은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었으니, 《The Morning Calm》(1890) · 《The Korean Repository》(1892) · 《The Korea Review》(1901) · 《The Korea Field》(1901) · 《The Korea Methodist》(1904) · 《The Korea Mission Field》(1905) 등이 그것들이다. 식민지시기에 들어와 선교사들이 간행한 잡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식민지시기 선교사들이 간행한 잡지

제 호	주 기	창간년월	종간년월	발행인/발행처
<i>The Korea Mission Field</i>	월간	1905. 11	1941. 11	재한복음주의선교회연합회
<i>The Woman's Missionary Friends</i>	?	1913. 5		Miss C. N. Elizabeth
<i>The Korea Magazine</i>	월간	1917. 1	1919. 4	W. G. Cram
<i>The Korea Bookman</i>	계간	1920. 2	1925. 6	예수교서회
<i>Korean Echoes</i>	월간	1925. 10	1940	캐나다연합교회선교부
<i>The St. Nicolas Chronicle</i>	월간	1928. 2	?	성공회
<i>Korean Sketches</i>	부정기	1929. 9		V. W. Pieters

\*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382쪽.

6) 《新生命》, 1923년 7월 창간호.

7) 《新生》, 1928년 10월 창간호.



이들 중 특히 《The Korea Mission Field》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가 함께 발행한 것으로, 한국의 언어·문화·지리·역사·사회·민속·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가 실려 있어 한국을 외국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언론·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朝鮮基督教彰文社의 설립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독교적 문화운동으로 제반 기독교의 서적을 간행·판매하고 …그 외에 잡지 및 기타 도서 간행 및 판매, 일반 인쇄업, 교육용품 판매 또는 이상 업무의 부대사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창문사는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지성인들이 세운 문서운동기관이었다. 1923년 창립총회 때 주주는 1,257명이었으며, 사장은 李商在였다. 창문사에서는 정기간행물인 《신생명》을 창간했으며, 기독교 서적은 물론 《어린동무》·《조선동요집》 등 계몽서도 간행했다. 창문사는 비록 10년 남짓 존속했지만, 선교사와 선교부가 장악하고 있던 기독교 출판문화의 풍토 속에서 ‘민족 주체적인 기독교 지성운동’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8)</sup>

## (2) 한글 연구와 보급

개신교계는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다른 어느 종교나 단체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넓은 활동을 벌였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耶蘇敎會이다”<sup>9)</sup>라는 李光洙의 글처럼 개신교와 한글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崔鉉培의 글도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사실로, 우리 한글의 중흥군인 한헌샘 주시경 스승도 기독교에서 차린 새 교육기관 배재학당에서 공부하다가, 우리말·우리글의 가치를 감득하고서 그 연구에 손대어, 평생 일관하게 이에 전력하여, 한글운동의 앞잡이(先驅者)가 되었으며, 그 밖에 이윤재·김윤경·정태진·정인승·장지영·최현배 같은 한글학자 및 운동자들도 다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였거나 또는 기독교 학교에 봉직하면서, 이를 연구하고, 이를 사랑하고, 이를 지키고, 이를 선전하였다. … 요컨대 한글과 배달말의 과학스런 연구, 애족적인 선전, 애국적인 수호에 기독교의

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앞의 책, 81~82쪽.

9) 李光洙,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李光洙全集》17, 三中堂, 1962), 18쪽.

공덕은 영세로 잊지 못할 것이다(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神學論壇》 7, 延世大 神學會, 1962, 68쪽).

金允經 역시 “기독교의 급속한 발전은 곧 한글발전에 대한 공헌이 그만큼 큼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고, 趙潤濟도 “현대의 국문이 기독교에 힘입은 바 극히 크다”고 했으며, 趙演鉉은 “기독교가 한국의 현대적인 과정에 가장 뚜렷하고 가장 구체적인 공로를 남긴 것은 국문의 장려와 서양과의 직접적인 교류운동”이라 했다.<sup>10)</sup>

이처럼 周時經을 비롯하여 김윤경 · 李允宰 · 鄭寅承 · 丁泰鎭 · 張志暎 · 최현배 등이 모두 개신교계의 한글학자들이었으며, 1914년에 죽은 주시경을 빼고 모두 1942년 朝鮮語學會事件에 연루되었다.

물론 당시 개신교계에서 한글을 중시한 데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다. 성경을 읽고 배우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데 유달리 열심이었던 한국 교인들은 한글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조운제가 말했듯이 “전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며 愚民 남녀노소에게도 그 성경을 읽히기 위하여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에서 한글교육을 중시했던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야 어떠하든 그 과정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교인들이 한글의 애용과 수호에 앞장서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한글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 그 밖의 이유로는 한글 전용의 선교정책과 성서번역, 기독교회와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한글교육, 교인과 학생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한글로 표현하도록 한 훈련 등을 꼽기도 하며, 그 결과 번역문화와 인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sup>11)</sup>

한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개신교계에서는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다. 특히 기독교 농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1920~1930년대에 문맹퇴치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야학을 세웠으며, 서당 · 글방 · 강습소 등이 나타났다.

10)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428~429쪽.

11) 이만열, 위의 책, 437~441쪽.

특히 하기가동성경학교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기가동성경학교가 지금에 전조선을 통하여 아니 전세계를 통하여 기독교의 유력한 교육적 전도기관으로서 또는 무산계급의 아동을 위하여 없지 못할 교육기관으로서 인식되어”<sup>12)</sup> 1929년에는 학교 450개, 교사 3,130명, 학생 38,760명을 헤아렸다. 한글보급은 단순히 문맹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잃지 않고 지켜간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한편 朴斗星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1926년 ‘訓盲正音’이라 불리는 한글점자를 개발한 점도 기억할 만 하다. 이로써 시각장애인들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는 《조선어독본》을 점자로 출판했으며 점자로 된 《신약성서》를 완성하기도 했다.

### (3) 역사와 지리 연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 하다. 南宮櫛은 《東史略》에 이어 《조선이야기》를 지었는데, 그 머리말에서 “단군족의 고유한 자질을 수복하고 모화주의의 오견을 타파하며 학생들에게 자국 역사에 취미를 붙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咸錫憲은 《성서조선》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연재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기독교적 사관에서 살펴보았다. 金瑗根은 YMCA의 기관지인 《青年》에 〈海東名公遺事〉·〈朝鮮古今의 美術大家〉·〈朝鮮古今의 詩話〉·〈朝鮮史學大家〉·〈朝鮮古代名公列傳〉·〈朝鮮風土紀略〉·〈朝鮮古代童話〉 등을 연재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기독교 잡지인 《新生》에서도 〈조선문학〉·〈조선고대역사〉·〈조선시〉·〈조선의 위인〉·〈조선화폐〉·〈전통적 교육기관〉·〈가면극〉·〈단오〉 등의 기사를 통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의 시각에서 정리한 저술들이 나오기도 했다. 白樂濤는 1927년 예일대 박사학위논문으로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를 제출했는데, 宣敎史觀을 내세우기는 했으

12) 韓錫源, 〈夏期兒童聖經學校의 指針〉(《東光》, 1927년 7월호), 16쪽.

나 한국인이 정리한 최초의 통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의 문과 과장을 맡으면서 朝鮮語學・朝鮮史・國文學 등 과목을 교과과정에 넣어 국학 진흥의 토대를 닦기도 했다.<sup>13)</sup> 1928년에 나온 《朝鮮 예수敎長老會史記》는 비록 장로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역사를 주체적・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한편 김교신은 〈朝鮮地理小考〉에서 조선의 산악・평야・기후・위치 등에 대해 언급한 뒤 “上述한 바와 같이 지리적 單元으로 보아 그 면적과 인구로 보나 산악과 해안선의 지세로 보나 이 위에 天惠로 주신 기후로 보나 …그 待接으로 보나 조선의 지리적 요소에 관한 한 우리가 불평을 토하기 보다 만족과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넉넉히 한 살림살이를 扶持할 만한 강산이요, 넉넉히 인류사상에 큰 공헌을 제공할 만한 活무대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지리적 결정론으로써 한국의 停滯性을 강조하려 한 일제의 植民史觀을 부정한 것이라 하겠다.

#### (4) 문학・음악・미술・건축

문학가 중 기독교와 연관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광수도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崔南善 역시 기독교계와 교류하고 있었다. 金東仁의 〈약한 자의 슬픔〉・〈마음이 얇은 자여〉・〈유서〉・〈명문〉・〈신앙으로〉 등에서도 기독교적 색채를 엿볼 수 있다. 전영택의 〈생명의 봄〉・〈天痴? 天才?〉・〈화수분〉・〈흰 닭〉 등의 바탕에는 기독교적 인본주의가 깔려 있으며, 朱耀翰의 〈벽모의 묘〉・〈말〉 등에는 메시아사상과 건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소망이 담겨져 있다. 任英彬의 〈난류〉・〈목사의 죽음〉 등에도 기독교적 성격이 짙으며, 金末峰의 〈밀림〉・〈찔레꽃〉・〈푸른 날개〉 등에서는 기독교적 희생과 인내, 朴啓周의 〈순애보〉・〈진리의 밤〉・〈구원의 정화〉 등에서도 기독교적 인본의식이 나타난다. 여류시인 張貞心의 시집 《주의 승리》・《금선》 등에는 민족의식이 깔려 있다. 그밖에 1930년대 등단한 金東里・金顯承・盧天命・毛允淑・朴斗鎭・尹東柱・林玉仁・黃順元 등도 기독교인이었다.<sup>14)</sup>

13) 閔庚培, 《韓國基督教史》(延世大 出版部, 1993), 459쪽.

14) 김희보, 〈한국기독교문학사〉(《한국기독교성장100년》, 기독교문사, 1986).

미술계에서는 金俊根·金殷鎬·金基昶·金學洙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김준근은 한국 번역문학의 효시라 불리는 《턴로력당》(天路歷程)의 삽화를 그린 바 있는데, 그는 등장인물들에게 한국식 전통복장을 입혔다. 김은호의 〈부활 후 그리스도〉는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상작인데, 제자와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다. 김기창·김학수 등이 그 뒤를 이어 기독교 성화를 그렸다. 이들이 모두 동양화가라면 吉善宙의 아들인 吉鎭善은 서양화가로서는 최초로 기독교 성화를 그렸다고 한다.<sup>15)</sup>

건축 분야를 보면 한국 교회의 건축물들은 서양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00년에 지은 성공회 강화성당은 한국의 佛堂式 건축 양식과 서구의 바실리카 양식이 조화를 이루는 특수한 형태였으며, 1922년 세운 성공회 서울대성당도 외형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지만 내부의 제단과 천장 등에는 한국의 전통양식을 가미했다. 또한 남녀내외가 엄격했던 우리의 문화를 고려하여 남녀 좌석을 구별, 서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 ㄱ자 예배당도 독특한 우리의 건축물이다. 황해도 소래교회, 평양 장대현교회, 서울 새문안교회, 전주 서문교회 등이 ㄱ자형의 전통 한옥 예배당이다. 1937년 지어진 강원도 김화 읍교회는 전통 한옥양식이다 실내의 강단 주위에 단청을 칠하고 벽면에 한국식 성화를 그려 기독교 토착 미술을 잘 보여준다. 이 벽화 속의 예수는 한복을 입고 있다.<sup>16)</sup>

한편 음악 분야를 보면, 서양음악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기독교의 전래와 그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초기에는 교회음악이 거의 유일한 서양음악이었으며, 또 초기 서양에서 음악을 전공한 유학생들도 거의 기독교인들이었다. 정동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거나, 이화학당·이화여전·숭실전문·연희전문 등 기독교계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대거 나왔다. 金仁湜·尹克榮·玄濟明·洪蘭坡 등 한국 근대음악계의 선구자들도 개신교인이었다. 이들은 교회음악뿐 아니라 동요나 민요의 창작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윤극영의 〈반달〉이나 홍난파의 《조선동요 100곡집》, 姜信明의 《아동가요곡 3백곡》, 朴泰俊의 《동요집》 등

15) 이연호, 〈한국기독교미술사〉(《한국기독교성장100년》, 기독교문사, 1986).

16) 위와 같음.

이 그러한 예들이다. 비록 일제강점기의 한국 기독교 음악은 주로 서양음악의 도입과 연주라는 분야에 국한되고 토착적 기독교 음악을 창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족의 감성과 염원을 음악에 담은 점은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sup>17)</sup>

### (5) 물산장려운동

1920~1930년대 일어난 물산장려운동도 넓은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수호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 曹晩植·吳胤善·金東元 등 평양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면서 시작한 이 운동은 점차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 활동 목표는 ① 조선인의 산업적 지능을 개발·단련하여 실업에 입각하게 하는 산업장려, ② 조선인의 산품을 애용·撫育하여 조선인의 상업을 융성하게 하는 애용장려, ③ 조선인의 생활 및 기타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건설 또는 개선할 바 일반사항을 조사·강구하여 그 실현을 지도·관찰하는 경제적 지도 등이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① 의복에 대해서는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음력 정월 1일부터 조선인 생산품이나 가공품을 염색하여 착용할 것, ② 음식에 대해서는 식염·설탕·과일·청량음료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선 물산을 사용할 것, ③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으로 대용 가능한 것은 이를 사용할 것 등을 내세웠다.

〈韓圭茂〉

## 6. 천주교

한국천주교회사는 일반적으로 창설기와 박해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해방공간의 교회사와 현대 등 크게 세 시기 혹은 여섯 시기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하나의 시기로 묶는 경우는, 制度教會로서 교회당국의 선교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 시기에 전개된 교회의 문화정책이나 실제의 문화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두 시기는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앞의 책, 268쪽.

교세의 변모, 敎區의 분할과 본당의 확대, 새 선교단체의 진출과 활동이라는 교회 내적인 측면과 국가권력의 변화와 종교정책, 사회변화에 따른 영향 등 외적인 측면에서 서로 구분될 수 있다.

교회당국에서는 1886년의 <韓佛條約> 체결로 傳敎의 자유를 얻게 된 이후 일제강점기 내내 聖俗二元論에 입각한 政敎分離政策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선교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책이었으나, 일제치하에서는 총독부가 내세운 표면상의 정교분리정책 내지는 그 체제를 옹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아울러 교회보호론을 앞세운 선교방침은 일제의 종교정책에 의해 자주 흔들리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교회당국에서 지향하던 민족의 복음화 즉 교세확대의 노력도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일반신자들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빈곤으로 인해 자주 제도교회의 聖事중심주의와 선교우선주의에서 이탈되어 가곤 하였다.

교회의 문화활동도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자주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당국에서는 선교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활동에 필요한 문화활동만을 견지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반신자들의 욕구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문화활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적인 필요에 의해 중시된 신학교육과 교리교육, 애국계몽의 필요성과 문명개화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된 일반교육과 출판·언론활동, 미사 전례 등 교회활동에 필요한 건축활동, 교회문학이나 예술활동 등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또 그 한편에서는 교육과 언론을 바탕으로 애국계몽운동 내지는 독립정신을 고취시켜 보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일제의 탄압에 의해 끝내 좌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 1) 교육활동

일반적으로 일제치하에서 전개된 교육활동은 민족교육 내지는 민족운동과의 상관성 아래서 그 의의가 부각되었으며, 그 결과 천주교회의 교육활동은 개신교측에 비해 미흡했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실제로 1910년 2월의 통계를 보더라도 통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로교 계통의 학교가 501개교, 감리

교 계통의 학교가 158개교였던 데 비해 천주교 계통의 학교는 46개교에 불과하였다.<sup>1)</sup> 물론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에 회의적이었던 교회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도 빈약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계몽운동과 국권회복운동이 전개되어 가면서 교회측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1907년 이후에는 각처의 本堂신부나 지도층 신자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실제로 교회안에서는 비록 당국의 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수많은 비인가 학교들을 운영함으로써 당시의 교육활동에 일조를 하였다.<sup>4)</sup>

실제로 교회측에서는 1910년 이전까지 학교설립과 교육이념을, 첫째 참개화와 부국건설, 둘째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정신과 민족의식의 고취, 셋째 천주교교리의 가르침에 따른 敬天愛人과 愛主愛人에 두고 있었다.<sup>5)</sup> 그러나 일제치하로 들어와서는 그 의미가 계속 축소되어 갔다. 민족운동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강조하는 대신, 첫째 시대상황에 합당한 지식전달과 민족의 발전, 둘째 교회의 발전과 선교의 목적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sup>6)</sup> 게다가 확고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교회의 교육활동은 일제의 통치정책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1) 俵孫一, 《韓國教育の現状》(학부, 1910), 53~54쪽.

2) 盧榮澤, 〈日帝下 韓國天主教會의 教育事業研究(1)〉(《崔奭祐神父華甲紀念 韓國教會史論叢》,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423~425쪽. 당시 한국천주교회의 수장인 제8대 조선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은 1900년경 安重根(토마스)이 대학설립을 건의하자 종교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安重根, 〈安應七歷史〉, 尹炳奭 역편,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9, 141쪽; 車基眞, 〈안중근의 천주교신앙과 사상〉, 《2000년 대희년과 안중근 토마스》,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16쪽).

3) 金成喜, 〈한국천주교회의의 교육 활동—1882~1910년을 중심으로—〉(《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712쪽.

4) 1910년에만 해도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던 학교는 모두 124개교, 학생수는 모두 3,048명이었다(M.E.P., Compte-Rendu, 1910, Seoul). 따라서 통감부에서 인가를 받은 46개교는 전체 숫자의 37%에 불과하였다.

5) 金成喜, 앞의 글, 703~706쪽.

6) 盧榮澤, 앞의 글, 413~422쪽. 다만, 間島지역의 천주교회만은 일제치하에 들어와서도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이것이 독립운동의 역량이 되었다고 한다(尹善子, 《朝鮮總督府의 宗教政策과 天主教會의 對應》,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7, 118~125쪽).



일제강점기의 교육활동은 크게 신학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회당국에서는 이중에서도 신학교육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천주교회는 <韓佛條約>의 체결로 신앙의 자유를 얻은 다음해 여주 부영골(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령리)에 있던 소신학교(라틴어반)인 예수성심신학교를 용산으로 이전하여 대·소신학교로 운영함으로써 그 발전을 꾀하였다. 이후 한국의 신학교는 1914년 10월 3일 大邱敎區의 성유스티노신학교가 개교하면서 2개교로 증가하였고,<sup>7)</sup> 1921년 11월 1일에는 포교성베네딕도회(the Congregation of St. Ottilien O.S.B., 芬道會)에서 서울 柏洞(현 해화동)에 소신학교를 설립하면서 3개교로 증가하였다. 이 백동의 소신학교는 1920년에 元山敎區가 설정되고, 1927년에 베네딕도회가 원산 인근의 德源으로 이주함과 동시에 그곳으로 이전되었으며, 1929년 9월부터 대신학교(철학반과 신학반)를 시작하였다.<sup>8)</sup> 이어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는 1928년 말에 대·소신학교의 분리를 단행함과 동시에 南大門商業學校를 갑조(일반 상업학교)와 을조로 편성하여 을조를 소신학교로 운영하고, 대신학교는 그대로 용산에 두었다.<sup>9)</sup>

이처럼 교회당국에서 신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서울과 대구의 신학교는 첫째 재정상의 어려움, 둘째 校舍의 부족, 셋째 교수인원과 자질의 부족, 넷째 교육과정상의 문제점, 다섯째 교육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었다.<sup>10)</sup> 다만, 독일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덕원의 베네딕도회 신학교는 이들에 비해 교수자질과 교육과정 등에서 좀더 나은 편이었다.<sup>11)</sup> 뿐만 아니라 덕원신학교에서는 1935년 2월 10일에

7) <Nouvelles de la Mission>, 1913년 9월 4일~1914년 10월 4일.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편, 《大邱本堂百年史》(대진출판사, 1986), 235~236쪽.

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함경도천주교회사》(함경도천주교회사간행사업회, 1995), 212~213쪽·302~303쪽.

9)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1929년도 보고서>(<서울敎區年報> 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242~243쪽.

10) 최석우, <한국교회와 한국인성직자 양성>(<논문집> 11, 가톨릭대학, 1985), 189~190쪽.

11) 덕원신학교에서는 초기부터 박사학위를 가진 우수한 교수선교사를 확보하고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29년 대신학교 과정이 시작될 무렵에는 라틴어와 철학·신학은 물론, 물리학과 수학, 교리와 음악, 교회사·독일어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 교사를

13년의 교육과정(중학교 5년, 고등학교 2년, 철학과 2년, 신학과 4년)으로 인가를 받았으나,<sup>12)</sup> 서울과 대구의 신학교에서는 총독부의 인가를 등한시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과 대구의 신학교는 일제 말기인 1942년 2월 16일과 1945년 3월에 각각 폐교되었고, 신학생들은 궁여지책으로 덕원신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천주교회측에서 운영하는 일반학교들은 1910년에 모두 124개교였고, 그 중 46개교가 통감부의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초등교육기관이거나 야학·강습소·교리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은 신학교와 베네딕도회에서 운영하던 崇工學校와 崇信學校뿐이었다. 숭공학교는 1910년 백동에서 4년제로 개교한 실업학교였다. 이 학교의 교과과정은 일제당국에 의해 제한될 정도로 고급기술이나 전문적인 과학지식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조선인들에게는 새로운 과학기술교육으로 비추어져 호응도가 매우 높았고, 따라서 개교한 지 얼마 안되어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1914년 7월에는 학생수가 70명에 이르게 되었다.<sup>13)</sup> 그러나 1914년 1차세계대전의 발발로 교육을 담당하던 독일수사들이 참전하게 되었고, 전쟁 후에는 독일에서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숭공학교는 1921년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베네딕도회가 덕원으로 이전하면서 1923년의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었다.

---

채용하여 한문이나 조선과 동양의 역사지리를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일본인 교사로 하여금 수학과 실과,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또 1933년에 신학반이 시작된 이후에는 교리신학과 성서, 윤리신학, 교회법과 사목신학, 교리교수법과 설교학, 전례학과 교부학 등 다양한 교과목이 추가로 개설되었다(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 1995, 306~310쪽).

1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위의 책(1995), 311쪽.

13) 崔奭祐, <韓國芬道會의 初期修道生活과 教育事業> (《韓國教會史의 探究》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402~403쪽. 숭공학교의 연도별 학생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助手를 말하는데, 조수란 4년의 정규과정을 마친 학생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을 2년간 유급으로 학교에 남아있도록 한 제도였다.

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학생수	50	40	41	40	70	47	30	20(11)	16(10)	13(10)	27(6)	35	18	18

송신학교는 제8대 서울교구장인 주교 뮈텔(Mutel, 閔德孝)이 간절히 원하던 사범학교로, 1911년 9월 16일에 2년제로 개교하였다. 사실 뮈텔이 베네딕도회를 초청한 이유도 사범학교의 운영과 천주교신자 교사의 육성 때문이었다.<sup>14)</sup>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던 그가 이때에 와서 비로소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송신학교는 종교를 비롯하여 윤리·교육학·한글·한문은 물론 일본어·세계사·지리·수학·박물학·음악·미술·체조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였는데, 송공학교처럼 인기는 없었다. 처음 23명이던 학생수가 1912년에는 26명, 1913년에는 17명으로 줄었으며, 게다가 일제당국에서 한국인 교사양성을 원치 않았고 애국계몽적인 교과과정을 이유로 탄압해 오면서 1913년 제1회 졸업생만을 배출한 뒤 폐교되고 말았다.<sup>15)</sup>

한편 서울교구에서는 1922년 2월에 을종상업학교인 昭義商業學校(3년제)를 인수하였다. 그런 다음 4월 1일자로 5년제 갑종상업학교로 인가를 받고, 교명도 南大門商業學校로 개칭하였다.<sup>16)</sup> 당시 서울교구에서 이를 인수한 목적은, 우선 인재양성을 통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데 있었고, 다음으로 신자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선교목적을 위해서 였다.<sup>17)</sup> 이후 이 학교는 1928년 말에 을종인 소신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31년에는 東星商業學校로 개칭하면서 천주교회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천주교회의 교육활동은 일제 당국이 1911년부터 정교분리라는 기본틀에 입각하여 종교와 교육의 분리정책을 시도해 나가면서 갖가지 제약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먼저 1911년 8월 23일의 <조선교육령>(칙령 제229호)과 10월 20일의 <사립학교규칙>(총독부령 제114호)을 통해,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교육통제는 물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의 금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제는 종교사립학교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학교가 독립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sup>18)</sup> 여기에

14)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앞의 글(1987), 54쪽.

15) 崔爽祐, 앞의 글(1991), 407쪽.

16) 東星中高等學校, 《東星八十年史》(크리스찬출판사, 1987), 139~142쪽.

17)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앞의 글(1987), 191~192쪽.

는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포함되었으니, 숭신학교의 폐교는 그 좋은 예였다.

이러한 일제는 1915년 3월 24일에 <개정사립학교규칙>(총독부령 제24호)을 공포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성서과목을 제외시키도록 하였으며, 고등보통학교로의 교명개칭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선교나 종교교육과 무관하게 된 학교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점차 회의를 갖게 되었고, 보통학교의 인가에 필요한 교사·시설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교회학교 대부분은 총독부에서 유예기간으로 정한 10년 동안만 교회학교 안에서 종교교육을 유지시키려고 했을 뿐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sup>19)</sup> 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참전하게 되면서 서울과 대구교구 모두 선교사가 부족하게 된 것도 학교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sup>20)</sup> 그 결과 천주교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하게 되었으며, 1916년에는 80개교에 2,451명의 학생수만을 기록하였다.

〈표 1〉

천주교학교 및 학생현황

연도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20	1921	1922	1924	1929	1930
학교수	118	102	99	110	97	80	94	99	118	177	200	185
학생수	2,930	2,599	2,773	3,055	2,583	2,451	2,953	4,474	6,732	9,566	10,156	10,400

\* M.E.P., Compte-Rendu(Seoul : Taikou, 1911~1930).

《경향잡지》(1916년~1930년).

18) 文炯滿, <日帝의 植民教育과 宗教教育의 葛藤>(《近代民族教育의 展開와 葛藤》, 한국국신문화연구원, 1982), 155쪽.

19) 尹善子, 앞의 책, 42·150쪽.

20) 당시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서도 교수의 부족으로 1911년 이래 3년을 기다려온 입학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1914년 8월부터 1916년 6월까지 교장인 신부 기낭(Guinand, 陳普安) 혼자서 신학교를 담당해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1916년 6월에 신부 金聖學(알렉시오), 1917년 가을에 신부 프와요(Poyaud, 表光東)가 신학교 교수를 맡게 되었다(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1916년도 보고서>, 앞의 책, 1987, 138쪽 ; <1918년도 보고서>, 149쪽).

당시 <개정사립학교규칙>에 따라 천주교회에서 인가를 받은 6년제의 고등 보통학교는 서울의 啓星學校와 加明學校, 제물포의 博文學校, 장언의 敬愛學校, 대구의 海星學校와 曉星女學校, 원산의 海星學校 등 7개교뿐이었다. 천주교회의 교육활동에 변화가 있게 된 것은 일제가 1920년 3월 1일에 문화정책을 표방하면서 공포한 <사립학교규칙개정령>(총독부령 제21호)을 통해 교회학교 안에서 성서과목의 교수를 허용하고 종교의식과 행사를 허용하면서였다. 이에 따라 1921년에는 전년에 비해 학교수가 5개교 증가하였을 뿐인데도 학생수는 약 50%가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는 학교수가 꾸준히 증가되어 갔다.<sup>21)</sup>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천주교회측에서도 학교인가에 노력하여 1935년에는 인가된 보통학교수가 25개교로 증가하게 되었고,<sup>22)</sup> 이밖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학원·강습소·야학이나 서당·교리학교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들 학교를 통해 민중교육운동이나 빈민아동교육은 물론 여성운동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sup>23)</sup>

이처럼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천주교회의 교육활동은 초등교육과 야학을 통해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러나 양적인 면에서는 미흡하였고, 고등교육활동도 1922년에 인수한 남대문상업학교와 베네딕도회에서 설립한 숭공학교·승신학교에 한정되었다. 또 교회당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신학교의 경우에는, 앞서 설립된 서울·대구의 신학교가 교육과정과 교수 자질면에서 베네딕도회에서 운영하는 덕원신학교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서울·대구의 신학교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탓에 일제 말기에 이르러 폐교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비록 일제치하의 교회교육활동이 민중교육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을지라도, 제도교회 차원에서의 교육정책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단적으로 설명

21) 尹善子, 앞의 책, 151쪽.

22) 《가톨릭研究》(1935년 9·10월 합병호).

《가톨릭靑年》(1936년 10월호). 당시 각 교구별로 인가된 보통학교수를 살펴보면, 서울교구 4개교, 대구교구 4개교, 원산교구 6개교, 평양교구 3개교, 연길교구 10개교였다.

23) 盧榮澤, 〈日帝下 韓國天主教會의 教育事業研究(2)〉(韓國天主教會創設二百周年紀念《韓國教會史論文集》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256~263쪽.

해 주고 있다.

## 2) 출판·언론활동

천주교회의 출판·언론활동은 다른 문화활동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종교활동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 일반신자교육과 전교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출판활동은 주로 이러한 문제와의 연관성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출판활동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서의 한글번역작업을 들 수 있다. 천주교회의 성서번역작업은 1906년부터 주교 뮈텔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다.<sup>24)</sup> 〈신약4복음서〉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작업에서 신부 孫聖載(야고보)·洪秉喆(루가)이 마태오복음을 번역하였으며, 신부 韓基根(바오로)이 나머지 복음서의 번역과 전체 각주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런 다음 1909~1910년 뮈텔과 한기근의 교열작업을 거쳐 1910년 연말에 《스스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성서출판소에서 간행하였다.<sup>25)</sup> 이로써 이 《신약성서》가 교회창설기 이래로 필사되거나 목판 및 활판으로 간행되어 읽혀지던 한글본 《성경직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후 한기근은 1922년에 《종도행전》(사도행전)을 번역·출간하였고, 덕원 베네딕도회의 신부 슬라이허(A. Schleicher)는 《신약성서》의 남은 서간들과 묵시록을 번역한 뒤 최병권과 신부 로트(L. Roth, 洪泰華), 김용학의 교정과 교열을 거쳐 1941년에 출간하였다. 베네딕도회에서는 이에 앞서 《少年聖書》(1925년)와 신부 에그너(R. Egner)의 《어린이의 성서》(1940년)를 발간한 적이 있었고, 1941년에는 신부 차일라이스(V. Zeileis)와 신부 퀴겔겐(C. Kügelgen, 具傑根)이 《합본복음서》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또 일제말기에는 베네딕도회에서 《구약성서》를 번역하여 출간을 기다리다가 훗날 압수되었다고 한다.<sup>26)</sup>

24) 개신교에서는 일찍이 《신약성서》를 완역하였으며, 1911년에는 《구약성서》를 완역한 뒤 이를 《신약성서》와 합쳐 《성경전서》로 발간하였다.

25)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 주교 일기-1906~1910》 4(1998), 1910년 7월 7일. 李鎔結, 〈한국 천주교회의 성서 운동〉(《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 2000), 391~392쪽.

이와 함께 일반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리서와 교회지도서들도 간행되었다. 우선 1910년에는 한기근이 프랑스어원본을 한글로 번역한 뒤 설명을 첨부한 《요리강령》이 간행되어 예비신자와 아동교리서로 널리 이용되었다. 다음으로 1925년에는 신부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를 중심으로 저술된 한글본 《천주교요리》(대문답)가 발간됨으로써 1864년 이래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성교요리문답》을 대신하게 되었고, 1934년에는 교리서 편찬을 위한 전국5교구위원회에서 《천주교요리》를 확대 편찬한 《천주교요리문답》을 간행하여 공식 교리서로 사용하였다.<sup>27)</sup>

교구의 사무규칙과 행정제도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록한 교회지도서로는 먼저 1912년 6월 대구교구에서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동시에 간행한 《대구교구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Taikou*)를 들 수 있다. 이어 서울교구에서도 1922년 9월에 부주교 드브레(Devred, 兪世俊)가 저술한 라틴어본 《서울교구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를 발간하였고, 이 지도서들은 1932년 9월에 발간된 《한국천주교공용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신자용이 아니었으며, 신자지도층인 회장들을 위한 지도서로는 1913년 대구교구에서 간행한 《회장의 본분》(대구교구회장지도서)과 1923년에 르 장드르가 저술하여 서울의 성서활판소에서 간행한 《회장직분》이 있었다. 그 중에서 전자는 초대 대구교구장인 주교 드망즈(Demange, 安世華)가 교구지도서에서 회장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번역·보완한 것이다.<sup>28)</sup>

그 무렵 일반 교회서적들은 서울과 대구보다는 베네딕도회가 활동하던 원산교구에서 활발히 간행되었다. 베네딕도회에서는 덕원 이전 직후인 1927년부터 인쇄소설립에 착수하였고, 1930년부터는 서적간행을 시작하였다.<sup>29)</sup> 인

26) 李鎬結, 위의 글, 392~393쪽.

27) 최석우, 〈韓國教會 敎理書의 變遷史〉(《韓國教會史의 探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360~361쪽.

28) 《교회와 역사》 68(1981년 4월).

차기진, 〈대구교구지도서〉·〈서울교구지도서〉(《한국가톨릭대사전》 3·7, 1996·1999).

29) 프로멘시우스 레너, 〈원산교구사〉(《교회와 역사》 59, 1980년 7월).

쇄소 책임자는 수사 피셔(L. Fischer)였고, 교정은 수도원장인 신부 로트와 신학교의 한국인 교사가 담당하였다.<sup>30)</sup> 이로써 덕원인쇄소는 1886년 나가사키에서 서울로 이전된 성서활판소와 함께 교회출판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덕원에서의 첫 결실은 1933년에 신부 아펠만(B. Appellmann)이 교회전례에서 가장 긴요한 미사통상문에 해설을 곁들여 저술한 한글본 《미사규식》이었다.<sup>31)</sup>

그 이전부터 원산과 延吉教區(1928년에 知牧區로 설정됨)의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참여와 전례의 土着化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토착화 운동은 ‘미사 經本과 聖務日禱의 모국어화’로 이어졌고, 연길교구의 신부 랍(K. Rapp)과 아펠만, 원산교구의 신부 로트는 이를 위해 《미사경본》의 한글번역과 사용법교수에 노력해 왔으며, 1936년에는 마침내 로트에 의해 한글본 《미사經本》(약 1천 쪽)이 간행되었다.<sup>32)</sup> 이 《미사경본》의 발간으로 일반신자들도 이제는 미사 때마다 사제들이 읊는 라틴어경문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덕원인쇄소에서는 1936년에 로트의 韓獨문법서인 《조선어문법》, 1938년에는 신부 솔라이허의 교양서적인 《어느 것이 참된 종교인가?》와 신부 피셔(W. Fisher, 陳道光)의 한글성가인 《가톨릭성가》를 간행하였고, 미사와 성무일도, 일반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양봉·공업·건축관련 소책자들을 꾸준히 간행하였다.<sup>33)</sup>

다음으로 교회언론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가장 먼저 창간된 것은 《경향잡지》였다. 이 잡지는 참화화를 위한 애국계몽운동과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1906년에 창간된 《경향신문》(발행인 드망즈)이 일제의 탄압으로 1910년 12월

30) Adelhard Kaspar O.S.B., *HWAN GAB*(還甲), Münster Schwarzach, 1973, p.130.

31) *Ibid.*, p.113.

32) *Ibid.*, pp.113~114. 이에 앞서 랍과 아펠만은 1932년 가을부터 한글본 미사경본들을 저술하여 등사판으로 배포하였고, 아펠만은 같은 해 겨울에 저술한 《소미사경본》(1933년 9월 간행) 안에 여러 종류의 한글본경문을 수록하였다. 또 원산의 로트는 1932년에 수도자용 한글본 《미사통상문》을, 다음 해에는 쇼트의 《미사경문》 한글역본을 등사판으로 간행하였으며, 1934년에는 한글본 《주일미사경본》과 《성인미사경본》을 간행하였다.

3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1995), 283~286쪽.



30일(제220호)에 폐간되면서 그 부록으로 발행되던 《寶鑑》을 확대 개편하여 1911년 1월 15일에 격주간잡지로 창간한 것이다. 이후 《경향잡지》는 순수종교잡지를 표방하면서 신자 재교육과 계몽활동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감》에서 신자들을 위해 게재하던 〈법률문답〉란만은 계속 유지하였으며, 문예작품과 독자투고 등을 통해 가톨릭문화의 보급에도 일조를 하였고, 1933년 이후에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에 맞추어 내용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상의 한계성 때문에 신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데다가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1945년 5월 15일(제39권 976호) 폐간되었다.<sup>34)</sup>

1912년에는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서 한국인 성직자들을 위한 잡지로 《타벨라》(*Tabella SS. Cordis Jesu*, 예수성심지)를 등사판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잡지발간은 1914년에 중단되었다가 1919년에 복간되었으며, 1924년부터는 홍콩에 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나자렛인쇄소에서 발행되었다. 본래 여기에는 신학교의 소식을 비롯하여 로마·세계·한국교회의 소식과 강론, 논쟁사항, 이단반박의 역사, 과학 등이 게재되었는데, 홍콩발행 후부터 소식란이 없어지면서 흥미를 끌지 못하게 되자 신학교에서 소식지만을 따로 만들어 그 부록으로 발행하다가 1937년 6월 이후에 폐간되었다.<sup>35)</sup> 한편 덕원신학교에서도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소식지 《神友》를 발간하였다.

이처럼 일제초기에는 일반생활과 관련된 언론활동이 미진하였다. 그러다가 민족문화운동, 민족언론기관의 설립과 민족지 창간 등에 자극을 받아 당시 가톨릭운동(Catholic Action)을 주도해 나가던 대구와 서울의 두 단체에 의해 교회신문이 발간되었다. 먼저 대구교구에서는 南方天主敎青年會 명의로 가톨릭운동의 계몽과 확대를 표방하고 1927년 4월 1일에 《천주교회보》(현 《가톨릭신문》의 전신)를 창간하였다. 이후 여기에서는 소식보도·의견교환·보조

34) 《교회와 역사》 54(1980년 2월).

차기진, 〈경향잡지〉(《한국가톨릭대사전》 1, 1994), 351~352쪽.

35)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타벨라》(1912~1937년).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1913년도 보고서〉·〈1922년도 보고서〉(앞의 책, 1987), 117~118쪽·169쪽.

일치의 3대 목표를 기치로 내세우고 소식전달과 교리선전, 護敎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증면을 거듭하였다.<sup>36)</sup> 한편 서울의 경성교구천주교청년연합회에서도 1924년 9월부터 《청년연합회보》를 발간해 오다가 대구의 《천주교회보》 창간에 자극을 받아 1927년 7월 10일에 《별》을 창간하였다. 이후 《별》은 교회소식·종교도덕·일반교양을 비롯하여 사설·논설·문예·상식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가톨릭 문화활동에 기여하였다.<sup>37)</sup>

1933년 3월 6일, 한국의 5개 교구대표들은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가톨릭운동에 대해 심의한 뒤, 전국 5교구 출판부위원회(위원장 서울의 부주교 Larribeau)를 구성하였다. 전국 가톨릭운동의 통일을 위해서는 교회안의 출판물을 통일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결과 《천주교회보》는 73호를 끝으로, 《별》은 71호를 끝으로 폐간되고, 1933년 6월 10일 《가톨릭靑年》이 창간되어 총독부로부터 제3종 우편물인가를 받았다. 이 《가톨릭청년》은 ‘가톨릭운동을 분산에서 종합으로’라는 기치 아래 올바른 교리이해와 護敎論을 바탕으로 한 신심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반사상·철학·역사·문학·의학·과학·상식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신자 계몽과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중 한 예로는 李秉岐의 〈조선어講話〉란을 들 수 있는데, 이 欄은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 전달에 부응하여 문맹퇴치운동과 민족계몽운동에 동참하고자 한 것이었다.<sup>38)</sup> 그러나 《가톨릭청년》이 표방한 가톨릭운동의 일치를 위한 역할은 1934년 1월 평양교구에서 《가톨릭研究講座》(후에 《가톨릭연구》, 《가톨릭조선》으로 개칭됨)를 창간하고, 1936년 봄에 연길교구에서 소년·소녀들을 위한 《가톨릭소년》을 발간하면서 상실되어 갔다. 게다가 총독부에서는 《가톨릭청년》의 계몽·문화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철저하게 내용을 검열하였고, 이러한 요

36) 최석우, 〈가톨릭 新聞과 敎會言論의 發達過程〉, 《가톨릭 신문》 1(영인본, 1982).  
《천주교회보》는 1931년 7월 7일 교구장 드망즈(Demange, 安世華)에 의해 교구 기관지로 인가되었다.

37) 안홍균, 〈“별”보에 대한 연구〉(《교회사연구》 6, 1988), 497~416쪽.

38) 차기진, 〈“가톨릭청년”과 교회 언론〉(《교회와 역사》 161, 1988), 9쪽.

인들로 인해 이 잡지는 창간된 지 3년 6개월 만인 1936년 12월호(제4권 12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sup>39)</sup>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의 출판과 언론활동을 통해 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보감》과 《경향잡지》에서는 <대한성교사기>라는 난을 통해 샤를르 달레(Ch. Dallet)의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Paris, 1874)를 번역 게재함으로써 신자들이 갖고 있던 교회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별》에서도 한국천주교회약사와 단편적인 세계교회사를 소개하였다. 《가톨릭연구》에서는 특집호를 통해 <대구교구사>, <간도선교사> 등을 소개하였으며, 《가톨릭청년》에서도 <신부 金大建(안드레아)의 전기>, <초대 조선교구장인 주교 브뤼기에르(Bruguière)의 전기>, <연길교구사> 등을 특집호로 게재하였다. 특히 《가톨릭청년》에서는 1933년 9월호부터 다음해 6월호까지 예수성심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담당한 신부 피송(Pichon, 宋世興)의 <朝鮮가톨릭史片影>을 연재하였다. 피송은 이 밖에도 신부 김대건의 약전과 라틴어서한, 조선순교사료 등을 모아 신학생용 교재로 사용하였고, 1938년에는 이를 《朝鮮聖敎史料》(*Pro Corea Documenta*)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다. 경성교구천주교청년연합회에서는 1931년에 《조선천주공교회약사》를 발간하였는데, 비록 그 분량은 111쪽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통사라는 점과 한국인의 신앙과 교회 창설을 올바른 시각에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sup>40)</sup>

193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교회의 언론활동은 일제의 조직적인 탄압에 의해 침체되어 갔다. 모든 신문·잡지들은 이른바 <皇國臣民誓詞>를 서두에 게재해야만 하였고, 황국화정책을 옹호하는 글들을 수록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제도교회는 마침내 그 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 아래 신자들로 하여금 그 의식에 참여해도

39) 차기진, 위의 글, 7~8쪽.

40) 李元淳, <韓國天主敎會史研究小史> (《韓國敎會史論叢》,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682~683쪽. 이밖에도 1924년에는 서울의 부주교 Devred가 저술한 《한국의 천주교》(Le Catholicisme en Corée)가 홍콩에서 간행되었고, 파리의방전교회의 교회사가인 A. Launay가 한국순교사에 관한 저술을, 일본인들이 한국교회사에 관한 저술을 펴냈으나 모두 한국 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일제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경향잡지》를 제외한 모든 정기간행물들을 폐간하였다. 실제로 《경향잡지》는 이후 종교적 의미를 상실하면서까지 일제의 정책에 부응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마침내는 언론을 통해 진행되어 오던 천주교회의 문화운동도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 3) 문학 · 건축 · 예술활동

天主歌辭는 1830년대에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 이래 약 1세기 동안 토착화된 한글교리를 신자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들의 교회활동과 신심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개화기에는 신자들의 의식전환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내용상 많은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1909년 1월 8일 《경향신문》에 소개된 南相殷(마태오)의 〈인국권학가〉와 같은 작품이 자연히 소멸되어 가는 대신에 순수교리와 교회를 노래한 가사만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 형식상으로도 1910년을 전후하여 4·4조 4음보의 장편 가사가 6·4조(3·3·4조)나 7·5조(3·4·5조) 등 3음보의 창가형식을 거쳐 현대시로 계승되었다.<sup>41)</sup> 1924년에 발간된 《조선어성가》에 수록된 천주가사들은 당대의 가사가 아니라 신부 崔良業(토마스)의 〈스항가〉(思鄉歌)나 閔克可(스테파노)의 〈삼세대의〉(三世大義) 등 박해기의 가사 내용 14편이었다.<sup>42)</sup>

천주가사와 같은 가사문학의 소멸을 재촉한 것은 1927년에 창간된 《천주교회보》와 《별》에 소개된 현대시들이었다. 이처럼 교회언론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한 가톨릭의 현대시는, 첫째 소재와 내용면에서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시와, 둘째 전통가락을 벗어난 산문시 내지는 자유시로 크게 구분되며,

41) 河聲來, 《天主歌辭 研究》(성황석두루가서원, 1985), 298~309쪽. 1911년에 창간된 《경향잡지》에도 처음에는 3음보의 가사들이 소개되다가 점차 창가와 자유시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42) 張安淑, 〈韓國가톨릭聖歌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연구〉(《韓國教會史論文集》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518쪽.

趙善宇, 〈한국가톨릭성가의 수용사〉(宋基寅神父 華甲紀念論叢 《歷史와 社會》, 현암사, 1997), 188·194쪽.

시기적으로는 위의 언론이 발행되던 제1기(1927~1933년 전반), 《가톨릭청년》과 《가톨릭연구》가 발행되던 제2기(1933년 후반~1945년)로 구분된다.<sup>43)</sup>

우선 제1기에는 시 50편과 시조 6편이 교회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대부분이 교회용어를 사용하거나 신앙내용을 주제로 한 가톨릭적인 생활시였다. 그러나 基洙의 〈독시〉, 鄭芝溶(프란치스코)의 〈뉘우침〉 등은 생활시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전형의 〈밋음〉, 주병환의 〈元旦漫吟〉, 작자미상의 〈無題〉 등은 신앙의 발상과 뼈대로 포장하여 時代苦를 노래한 작품이었다. 제2기에는 시 83편과 시조 14편 등 도합 97편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가톨릭청년》을 통해서는 정지용·河漢珠·具常 등과 신부 崔珉順이 많은 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오면 교회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톨릭적인 생활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26편이나 되며, 창작시쪽으로 이동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도 나타난다. 아울러 趙蹈昊의 〈東方步哨〉, 松峴의 〈無題〉 등 시대나 현실에 관심을 보인 작품들도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시들은 당시의 시대조건을 감안해 볼 때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작품들이었다.<sup>44)</sup>

이 밖에도 일제치하의 교회언론을 통해서는 소설·동화·동시·산문·평론 등이 꾸준히 소개되었으며, 때로는 영시를 번역 게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나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전문작가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계몽소설과는 달리 종교적인 내용과 호소를 내포한 교회적인 입장에 치우친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별》에는 자연 혹은 인간적인 정서를 노래한 시가 게재되거나 姜石取의 창작 소설인 《回道者》가 연재되기도 하였다.<sup>45)</sup> 또 《가톨릭청년》을 통해서 정지용이 모더니즘과 동양정신, 그리고 가톨릭시즘을 지향하는 작품을 발표하였으며,<sup>46)</sup> 金起林·李箱 등이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고, 李東九는 문학평론을 통해 성토마스사상과 중용주의를 바

43) 姜熙根, 〈한국천주교회의 시문학활동〉(《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533쪽.

44) 姜熙根, 위의 글, 546쪽.

45) 안홍균, 앞의 글, 414쪽.

46) 정의홍, 〈鄭芝溶文學에 나타난 가톨릭시즘〉(《교회와 역사》 154, 1988), 14쪽.

당으로 낭만주의와 자연주의에 치우치는 것을 비판하였다.<sup>47)</sup>

일제치하에 와서는 교회건축에서도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베네딕도회가 진출하면서 이전에 프랑스선교사들이 설계한 성당이나 一자형 건축물과는 다른 독일식 건축물이 건립된 것이다. 우선 베네딕도회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지 1년만인 1910년과 다음해에 걸쳐 백동 언덕에 2층과 3층의 독일식 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이 건물은 성당과 수도원이 한 건물에 있는 복합식구조였다.<sup>48)</sup> 또 베네딕도회에서는 1920년에 원산교구가 설정되면서 새 수도원 부지를 물색한 끝에 원산 인근의 德源에 부지를 정하고 건축을 시작하여 1927년에 U자형 수도원과 신학교를 건립하였으며, 같은 해 원산에는 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芬道修女會, O.S.B)의 U자형 수녀원을 건립하였다. 덕원의 U자형 수도원은 1931년 나머지 한쪽에 성당건물이 들어서면서 口자형 복합식건물이 되었다.<sup>49)</sup>

당시에 건립된 성당 중에는 현재 사적지나 지방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1906년에 건립한 것을 1916년에 증축한 전북 익산의 華山성당(일명 나바위성당, 사적 318호), 1922년에 건립된 안성성당(옛 구포동 성당, 경기도유형문화재)은 대표적인 한·양절충식 성당이었다. 서양식성당 중에서는 1896년에 지은 옛 성당을 개축하여 1937년에 3개의 종탑을 갖춘 로마네스크식성당으로 완공한 인천의 답동성당(사적 제287호)이 유명하다. 또 지방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양식 성당으로는, 고딕식 첨탑의 장방형인 원주의 龍召幕성당(1915년), 고딕식 첨탑을 갖춘 T자형인 충남 아산의 공세리성당(1921년), 2개의 종탑을 갖춘 로마네스크식인 충남 당진의 합덕성당(1929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성당들은 대부분 서양성직자들이 본국의 건축양식을 피상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내부 공간보다는 외형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낳은 데다가 건축양식을 상실한 講堂形(천장의 높이가 동일한 단일공간형) 성당들이 많이 건축되었다.<sup>50)</sup>

47) 具仲書, <日帝下の “가톨릭青年”誌 연구>(《교회와 역사》 108, 1984), 16쪽.

4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1995), 193~194쪽.

49)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위의 책(1995), 220~223·251·273·302쪽.

50) 김정신, 《한국가톨릭성당건축사》(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61~77쪽.

이러한 성당건축과 함께 탄생한 것은 聖畵라고 불리는 회화작품과 조각품들이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張勃(루도비코) 작품인 명동성당의 12종도화(1926년), 李順石(바오로) 작품인 약현성당의 성베드로·바오로종도화(훗날 소실됨)를 비롯하여 신의주성당의 성신강림도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성당벽화와 성상작품들은 동양화풍을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화풍을 추구하던 당시의 미술계에 영향을 주었다.<sup>51)</sup> 또 베네딕도회의 수사 플뢰칭거(A. Flötzinger)는 명동성당에 안치된 신고딕식의 강론대(1915년)를 완성하였다. 이 밖에도 서양목공예를 전공한 여러 수사들이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고 하지 만,<sup>52)</sup> 현재 그들의 작품성격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당시의 천주교전례음악은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그레고리오성가였다. 그러나 라틴어로 미사가 집전되는 과정에서 불려진 그레고리오성가는 일반신자들에게 하나의 서양음악이었을 뿐이며, 그 의미보다는 단지 경건한 전례의식의 하나로만 생각되었다. 그러다가 서울교구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한글성가집인 《조선어성가》를 1924년에 간행하면서 69곡의 성가 중에서 14곡의 가사를 천주가사인 〈스향가〉와 〈삼세대의〉에서 차용하였다.<sup>53)</sup> 이후 교회전례음악이 더욱 발전해 가면서 대구의 《공교성가집》(1928년), 덕원의 《朝鮮語聖歌》(1928년), 연길의 《聖歌集》(1935년), 《대구교구성가집》(1936년), 덕원의 《가톨릭성가》(1938년) 등에 서양식 한글성가들이 계속 수록되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한글가사들이 성가집에 수록된 것은 한글성가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사들은 노랫말로만 수용되었을 뿐 음악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고유의 민족성가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양식 한글성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민족음악을 기방음악으로 폄하시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경건주의 음악관에 빠져

51) 최석우, 〈韓國의 開化와 그리스도敎〉(《韓國 敎會史의 探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455쪽.

5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1995), 195~197·271~273쪽.

53) 《조선어성가》에 앞서 나온 한글성가집으로는 《사리원성가집》(1921년)과 덕원의 《朝鮮語聖歌》(1923년)가 있었다고 한다(趙善宇, 앞의 글, 193쪽).

한글가사가 한국적 음악으로 더 잘 표현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셋째로 제도교회가 일제와의 마찰을 꺼려하여 민요풍의 한글성가가 불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54)</sup> 그 결과 일제치하에 간행된 한글성가집들은 고유의 한글가사를 원용하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발전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車基眞〉

---

54) 趙善宇, 위의 글, 183·194쪽.